

전략연구 2020-21

충남 공유경제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사회적 경제와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

전지훈 · 송영현 · 홍은일

연구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세계적으로 공유경제는 지역사회 유희자원의 사회적 활용과 효과적 이용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가는 새로운 경제활동의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1세기 이후 IT, 사물인터넷 등 정보기술 발달은 소유경제에서 공유경제의 실행가능성과 필요성을 촉진시켰다. 국내에서는 공유경제에 주목하게 된 계기가 유희자원에 대한 협력적 소비를 통한 경제방향의 전환이라는 의미 보다 플랫폼 기반으로 접근경제 방식의 이윤창출 수단으로 활동의 시각이 치우친 부분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공유경제의 개념화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통한 공공성의 가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충청남도는 공유경제를 ‘소유권의 이전 없이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높이고 사회작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하였고 이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기업을 공유기업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후 충청남도는 2019년 경제통상실의 역점시책으로 ‘공유경제 실현 기반조성’을 제시하였고 2020년 4월 공유경제의 지원업무가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과로 이관되면서 사회적경제과에서 공유경제 지원활동의 협력과 연계에 관한 정책적 수요 발생함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정책적인 연계방향과 방안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의 정책지원 시각에서 공유경제의 공공성과 사회적가치적 측면에 주목하면서 이에 대한 유사한 경제활동인 사회적경제와의 접점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계의 정책적 방향과 방안들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충남에서 공유경제의 공유가치 기반의 활동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영역과의 상호보완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적 방안들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연관성을 구성하고, 사회적가치활동 기반의 상호보완관계를 구축하여 충남 특성의 협력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목적들을 구체적으로 다음 4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본 연구는 현재 맹아기이며 정책 도입단계인 충청남도 공유경제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대안 경제활동으로 공유활동의 본질을 도출하고자 한다.
- ② 지역사회의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 성장 중인 사회적경제 활동과의 이념적, 정책적 관련성을 도출하여 연계활동의 당위성과 근거를 마련한다.
- ③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 연계활동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현재 사회경제 양극화 해소와 코로나 19 상황의 극복을 위해 충남에서 두 영역간 상호보완성 중심의 지역기반 연계 방향과 모델을 제시한다.
- ④ 현장에서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연계활동 구축과 확산을 위해 충청남도의 정책 실행방안을 제시한다.

2. 주요 연구 내용

1)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검토

(1) 공유경제의 의의

공유경제의 등장은 현대에 새롭게 제기된 패러다임이 아니며 19세기 이후 자본주의 체계의 발전에 따라 주변부로 밀려났던 과거의 공유적 경제활동들이 인터넷, IT, 정보기술 등 새로운 형태로 재부상한 개념으로 제기된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의 재정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저성장 국면 진입은 잉여 및 유희재화의 발생, 저성장, 실업 및 취업난, 가계소득의 저하 등 경제적 침체를 심화시켰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경쟁적 소유나 과소비가 아니라 비용을 줄이면서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전환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는 역성장으로 전환되어 초저성장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와 같은 역성장 및 초성장기에 따른 지역경제는 생산 및 소비활동의 둔화로 지역에 증가하는 유희자원들의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와 같은 유희공간을 비롯한 자산들의 활용에 대한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은 시대적 사명으로 강조되면서 극복의 처방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2) 공유경제의 개념과 쟁점

공유경제는 특정 서비스의 수요자와 해당 서비스를 창출하는 유희자산을 보유한 공급자 간 해당 유희자산을 이용한 시장거래를 ICT플랫폼이 중개하는 경제이며 상품과 서비스를 대여자와 이용자의 두 주체가 플랫폼을 통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나아가 공유경제의 특징은 전통 소유경제와 비교함으로써 더욱 분명할 수 있다. 공유경제는 소유보다는 이용, 이윤보다는 가치 극대화, 플랫폼에 기반 한 시스템, 주체 간 경쟁보다는 신뢰, 중개자(플랫폼의) 역할 강조, 개별적 소비보다는 협력적 소비, 자원의 일방적 사용보다는 순환적 사용을 강조한다. 또한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는 전통경제는 경쟁에 기반을 두고 작동하는 원리라면 공유경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되며 이미 생산된 유희자원의 재활용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경제행위이기 때문에 생태지향적, 자원절약적 원리를 갖는다.

결국 공유경제가 전통적 경제, 상업경제와 다른 경제 패러다임이라 거론하며 주목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점은 가격 메커니즘보다 사회적 관계와 신뢰의 네트워크에 근거하여 유희자원의 재활용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본질에서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방향의 공유경제 접근은 지방자치단체 정책개념에서 두드러진다.

공유경제가 세계적으로 폭넓게 확장되고 공유경제 형태의 경제행위들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쟁점이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유경제활동의 가치의 쟁점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초 공유경제의 등장배경에는 유희자원에 대한 효과적 활용과 함께 관계적 활동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을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강조한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플랫폼을 활용한 수익창출의 도구적 개념이 확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가치의 상충성이 존재한다. 특히 중앙정부는 공유경제의 경제적 가치추구의 경향성이 높다고 판단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병행하여 강조하거나,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 환경 등 다른 가치를 핵심적인 정책가치로 선정·추진하고 있다.

(3) 사회적경제의 의의와 쟁점

사회적경제의 등장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시장자본주의의 경제체제에 의해 발생한 소득양극화와 인간 존엄성 훼손 등 비판에 대한 대안 경제활동으로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사회적경제의 부상은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확대에 의해 부각된 실업,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배제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의 활동 원리는 시장에서 거래 및 교환관계와는 다른 이기적 개인 간 관계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와 상호의존성에 기반 한 사회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경제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쟁점도 존재한다. 우선 사회적경제조직 또한 현재 우리사회의 시장경제 범위에서 활동하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조직 및 기업들의 경영을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적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거대기업에 맞서 관계의 힘으로 연대와 협력적 방식을 추구하지만 주체들의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적 성과와 경영역량이 필요한 것이다. 게다가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수행하는 영역의 경우 전통적으로 정부의 행정서비스 영역이었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의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고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대부분 영세하여 효율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성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한계가 내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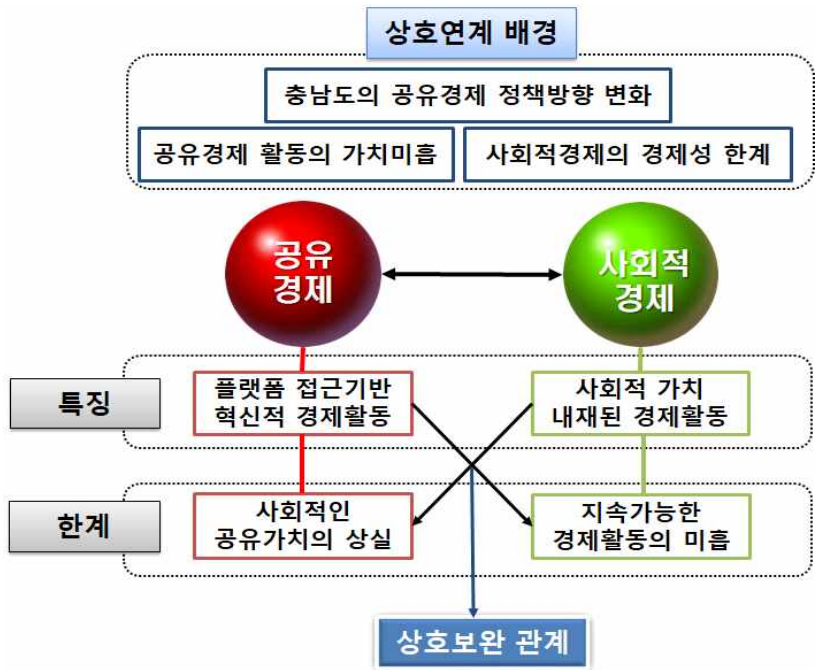
2)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상호보완성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개념적 연관성에 대한 시각은 경제활동의 사회적가치 추구라는 공통점을 통해 구성된다. 공유경제의 개념과 등장의 배경은 전통적 경제활동에 대한 한계극복을 위한 대안의 움직임에서 시작되었다는데서 의의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공유경제는 가격체계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적 공유의 원리를 기반으로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것이며 이를 사회적 동기에 따른 제3의 경제영역을 추구한다고 본다. 특히 구체적으로 공유경제 개념은 서로 협력하면서 어느 누구도 배타적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자원공유에 기초 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느슨하게 연결된 개인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제 기반 동료생산(CBPP)’에 토대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지역사회의 공유제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배타적 소유권과 협력적 소비를 강조하며 분산된 네트워크의 관계적 측면을 강조하게 된다. 이러한 공유경제의 관점에 따르면

공유경제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비즈니스활동에 내재된 모델이라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와 지향점을 공유한다.

특히 본 연구는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방안을 살펴보고자 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는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한계와 쟁점들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연계의 방법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3)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정책적 연관성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유경제 정책방향은 플랫폼 활동으로 인한 수익창출의 영리활동과 함께 이를 기반으로 한 구성원들의 공유자산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상호작용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유경제의 지원정책을 중앙정부 보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가치지향성을 갖고 있다. 최초로 공유경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한 서울시부터 공유경제활동을 통한 사회혁신과 지역사회 수요충족 등의 사회적 가치에 공유경제 활동지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경제 정책범위는 지역의 경제적 문제를 사회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민주적 경제 조직형태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에 접근하여 경제행위를 통해 수행하는 사회적 경제의 지원정책과 다수의 유사성을 갖고 있다. 결국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공유경제 정책의 방향은 공유경제를 활용하여 지역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의 움직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주민참여 및 자치 등과 연계하는 방향이라 볼 수 있다. 결국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공유경제 정책의 방향은 공유경제를 활용하여 지역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의 움직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주민참여 및 자치 등과 연계하는 방향이라 볼 수 있다.

4) 사례와 인터뷰 조사

본 연구는 이론적 내용에 대한 실증분석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정책적인 연계협력 사례와 함께 공유경제 활동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공유경제 분야에서 사회적경제와 연계되어 활동하거나 정책개발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사례 및 인터뷰 분석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공유경제가 어떻게 사회적 가치 활동을 추구하고 사회적경제와 상호보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 진정한 상호보완관계 형성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의 의견들을 종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이론적으로 구성된 상호보완의 모델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인터뷰의 내용은 공유경제의 한계와 비판의 극복은 본래의 목적에 대한 인식적 변화가 필요함을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지원의 시각에서 공유경제의 공공적 가치에 대한 강조를 통해 새로운 지역사회혁신과 활력의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공유경제의 사회적 가치 활동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불특정다수가 활용하는 공유서비스 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친밀하고 신뢰하는 구성원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유서비스가 더욱 효과적인 형태임을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팬데믹 시기에서 이와 같은 지역중심의 로컬텍트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공유경제 활동의 방향이 매우 유의미할 수 있다.

3. 공유경제 활성화의 방향과 과제

1) 충남형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방향

(1) 공유경제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강화

공유경제의 근본적인 한계는 태동배경이었던 환경을 비롯한 사회적 문제의 접근을 통한 대안적 경제활동과 사회적 관계 및 신뢰 기반의 운영형태의 가치들을 상실하고 플랫폼 기반의 단순한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변화 및 이에 대한 재생산의 확대에 기인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충청남도에서 공유경제의 정책지원방향은 지역자산의 공유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과 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회적 측면의 강조를 통해 정책활동의 공공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와의 차별점을 두기 위한 플랫폼 기반의 접근경제 방식에 대한 공유경제의 활동 특성을 강조하면서 무가치적인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가치를 내재한 활동의 목적성을 부여하는 방식의 정책적 유인의 방향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가치기반 공유경제의 정책방향은 4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공유경제의 정책방향은 사회적 가치활동 기반으로 협력적 생산과 소비를 지향한다. 둘째, 지역단위로 사회적 문제해결과 수요충족을 위한 공유경제 방식의 접근을 지향한다. 셋째, 공유플랫폼의 사회적 운영을 지향한다. 넷째, 공유경제의 핵심자원인 공유자산에 대한 사회적 목적추구의 운용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2) 커뮤니티 중심의 공유경제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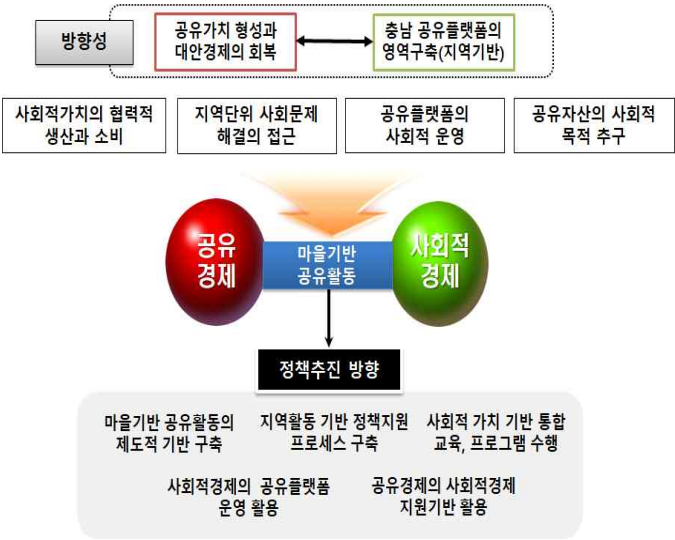
공유경제 활동이 사회적 동기에 의한 탈집중화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경향성은 단순한 이윤창출의 플랫폼 형태의 경제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중심적이며 보다 적극적인 지역 구성원들의 참여와 시민성을 요구한다. 특히 사회적 가치창출의 차원에서 공유경제의 추구모델은 호혜성에 기반하여 지역화를 도모하는 공유경제활동을 통한 지역의 회복력의 차원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충남에서 커뮤니티형 공유경제의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지원의 근거마련과 함께 추진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앞서 사례 및 인터뷰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2019년 제정된 ‘충남 공유경제 촉진 지원조례’에 일반적인 공유경제 지원 내용보다 지역사회 및 커뮤니티 기반의 공유

경제활동의 지원에 대한 내용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공유경제 정책지원 계획 수립, 공유경제의 기업발굴, 공유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등의 공유경제 정책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충청남도에서 추진중인 공유경제 관련 정책사업들도 커뮤니티 및 지역사회 기반의 활동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유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사업이나 공유아카데미의 지원사업의 정책설계와 실행 시 지역기반 및 마을공동체 밀착형의 공유경제기업 발굴과 교육활동의 지원, 마을공동체 조직과 연계사업에 대한 정책지원 등 마을공동체 기반의 공유활동 구축을 위한 지원의 방향이 필요하다.

충남의 관련 정책수행영역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충청남도의 공유경제 정책사업들에 대해 마을공동체 기반의 방향성을 유인하는 것과 함께 별도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충남 마을형 공유경제 지원사업’을 통해 이를 지역사회 차원의 선도적인 충남의 핵심적인 공유경제 정책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에서 공유가치 형성과 대안경제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다른 공유 플랫폼과는 달리 차별화 할 수 있는 점은 지역사회의 특징적인 수요충족과 문제해결의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임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마을기반의 공유활동을 통해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정책추진의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 연계 정책방안

본 연구는 제시한 방향성에 기반하여 공유경제 수행을 위한 사회적경제와 연계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다음의 5가지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공유경제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동기,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한 고민과 학습의 기회가 필요하며 충청남도는 지역사회 기반의 공유경제 활동의 확산을 위해 공유경제기업들에 대한 사회적가치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활동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공유경제 관련된 도민들의 인식이 비교적 높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인식제고의 정책적 확산의 노력과 함께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인식적 동질감을 형성하고 상호교류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축제 및 이벤트, 토크콘서트 등의 공동개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충남에서 지역사회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인 가치의 방향성에 기반해 활동하는 공유기업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지원체계와 기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구성원들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하는 측면에서 공유경제로의 진입을 유인하고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활동 수행에 대한 지원에 대한 고려도 함께 수행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충남공유플랫폼을 비롯해 시군별 마을공유플랫폼의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위탁 등의 적극적 참여방법의 유인이 가능하다.

다섯째, 현재 충청남도에서 공유활동의 확산을 위해 공유경제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다양한 공동 협력사업에 대한 발굴과 육성의 정책적 지원 방향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형태로는 앞서 사례에서 제시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쏘카간의 업무협약을 통한 차량공유의 협력행위를 거론할 수 있다.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6
3. 연구의 범위와 대상	1
4. 선행연구의 검토	3
제2장 이론적 배경	7
1. 공유경제의 개념과 이론	7
1) 공유경제의 등장과 특성	7
2) 공유경제의 개념과 정의	2
2. 공유경제의 유형화	3
1) 공유경제의 발전 동향	3
2) 공유경제의 유형화	3
3) 공유경제의 쟁점	3
3. 사회적경제의 이론과 의의	11
1) 사회적경제의 등장과 이론	14
2)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의의	44
3) 사회적경제의 한계와 쟁점	94
4. 상호보완 중심의 연계성과 분석틀	15
1)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연계성 검토	15
2) 상호보완성 기반의 연계 방향	65

제3장 정책과 현황 분석 5

1. 제도적 현황	5
1)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현황	5
2) 중앙정부의 정책지원 현황	36
2. 충남의 지원정책 현황	6
1) 공유경제의 지원제도 및 정책 현황	96
2) 사회적경제의 지원정책 및 활동 현황	37
3.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정책적 연관성	08

제4장 관련 사례분석 및 인터뷰 조사 28

1. 조사의 개요	2
2. 공공정책분야 연계사례	3
1)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계사례	38
2)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연계사례	68
3)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계사례	98
3. 충남 공유기업 활동 연계사례	3
1) 차량공유 사례	9
2) 도시재생 및 공유플랫폼 사례	59
3) 사회문제해결 공간공유 사례	89
4.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 연계방안의 전문가 FGI조사	0
1) 조사개요	101
2) 조사내용	102
3) 분석 소결	112

제5장 충남형 공유경제 활성화의 방향과 과제 1

1. 충남형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1

1) 공유경제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강화 1

2) 공유경제의 사회적경제 연계 방향 116

3) 커뮤니티 중심의 공유경제 확산 방향 1

2.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 연계를 위한 정책방안 2

1) 공유경제의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통합교육 2

2) 공유경제 인식확산 위한 프로그램 연계 수행 2

3) 공유경제기업의 사회적경제 기반 활용 유인 3

4) 사회적경제의 공유경제 진입의 유인 2

5) 공유경제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사업 발굴지원 1

참고문헌 137

부록 140

표 목 차

<표 1-1> 연구 내용 및 방법	01
<표 2-1> 공유경제의 필수요소	32
<표 2-2> 공유경제의 특징	32
<표 2-3> 공유경제 유사 개념	72
<표 2-4> 공유경제 작동체계 세 가지 유형	63
<표 2-5> 사회적경제의 원리	44
<표 2-6> ICA 협동조합 원칙의 변화	74
<표 3-1> 지자체 공유경제 조례제정 현황(2019.4)	16
<표 3-2> 국내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기반	66
<표 3-3> 사회적경제의 조직별 지원정책 현황	76
<표 3-4> 충청남도의 공유경제 관련 정책계획 현황	96
<표 3-5> 충남 공유경제 정책현황	17
<표 3-6> 충남 도·시군 주요 공유경제 정책사업 현황	27
<표 3-7>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정책지원사업 현황(2020년)	67
<표 3-8> 충남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	77
<표 3-9> 충남 사회적경제 경제규모의 성장	77
<표 3-10> 기업유형별 매출액 현황(백만원)	87
<표 3-11> 사회적경제 기업의 유형별 목적과 조건	87
<표 3-12> 충남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사회적가치 창출 영역	97
<표 3-13> 지역별 공유 관련 조례 소관부서 현황	08
<표 4-1> 사회적경제 기업 및 기관 쏘카 신청 현황	58
<표 4-2> 성남시 공유단체 및 기업 현황(2020. 11월 기준)	88
<표 4-3> 충남도내 공유로 학습공간 현황	19
<표 4-4> 공간사이 공간 대관안내	01
<표 4-5> 공간사이 대관 유형	01
<표 4-6> 인터뷰 대상자 현황	11

<표 5-1> 충청남도 공유경제 전담부서의 업무(안)	321
<표 5-2> 충남 마을형 공유경제 지원사업의 프로세스	421
<표 5-3>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구축 계획	131

그림 목 차

<그림 2-1>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1· 2
<그림 2-2> 전통적경제와 공유경제의 비교	4· 2
<그림 2-3> 공유경제의 범위	5· 2
<그림 2-4> 지역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공유와 순환의 지역경제	9· 2
<그림 2-5> 공유경제의 세가지 핵심 요소	1· 3
<그림 2-6> 공유경제의 예상 발전 경로	2· 3
<그림 2-7> 공유경제의 다양한 유형	7· 3
<그림 2-8> 섹터별 영역에서 사회적경제의 위치	3· 4
<그림 2-9>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개념적 연관성	4· 5
<그림 2-10>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상호보완관계	8· 5
<그림 3-1> 시기별 정부 공유경제 정책방향	0· 6
<그림 3-2> 정부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4· 6
<그림 3-3> 문재인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8· 6
<그림 3-4> 충청남도 제2차 5개년 기본계획의 체계도	4· 7
<그림 4-1>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쏘카 업무협약서	4· 8
<그림 4-2> 쏘카 이용방법	4· 8
<그림 4-3> 공유성남 홈페이지	7· 8
<그림 4-4> 성남시 공유경제 포럼개최(2019-2020년도)	1· 9
<그림 4-5> 공유로 학습장소 신청 및 이용안내	1· 9
<그림 4-6> 카폴로 플랫폼 모델	4· 9
<그림 4-7> 카폴로 모바일 어플	4· 9
<그림 4-8> 뽕뽕 공유공간	6· 9
<그림 4-9> 디스플레이 광고와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7· 9
<그림 4-10> 공간사이 모습	9· 9
<그림 4-11> 공간사이 공간현황	9· 9
<그림 5-1> 사회적 가치기반의 충남 공유경제의 정책 방향	511
<그림 5-2> 공유경제활동의 방향성	021

<그림 5-3> 공유경제에 대한 필요성과 활용도(도 전체 및 개인 거주지역)	2·2 1
<그림 5-4> 목포시의 건맥 1897 협동조합 공유자산 구축	521
<그림 5-5> 충남 특성의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연계협력의 정책 모델	6·2 1
<그림 5-6> 공유경제를 비롯한 유사영역의 통합교육프로그램(안)	8·2 1
<그림 5-7> 충남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자료	921
<그림 5-8> 충남공유 플랫폼 화면	331
<그림 5-9> 오야오스기 마을호텔 및 마을식당	631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는 지역사회 유희자원의 사회적 활용과 효과적 이용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가는 새로운 경제활동의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1세기 이후 IT, 사물인터넷 등 정보기술 발달은 소유경제에서 공유경제의 실행가능성과 필요성을 촉진시켰다. 또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포디즘적 패러다임에서 기존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성장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공유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4차 산업혁명의 용어를 주목하게 한 클라우드 슈밥은 기술발전으로 인한 공유경제의 등장에 대해 ‘발전으로 생긴 플랫폼으로 인해 On-demand Economy(주문형 경제, 공유경제)가 실현되었으며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근 가능한 플랫폼은 사람과 자산과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 강조한다(Schubab, 2017). 이와 같은 변화는 경제적 방식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와 정부 역할의 변화를 야기하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 ‘필수적인 공공기능과 사회적 소통, 개인정보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편입되고 있는 현 시대에는 정부가 업계, 시민사회와 협력해 정의, 경쟁력, 공정성, 포용적 지적재산, 안전 그리고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공유경제의 등장은 생산과 소비 중심의 경제활동에서 잊혀져 있던 과거의 공유활동에 대한 모습과 의미들이 회복되어 다시 부각되는 것이며 그 원동력으로는 인터넷과 함께 고도로 발달한 디지털 기술의 덕분이라 볼 수 있다(Benkler, 2004; Sundarajan, 2016). 이러한 공유경제가 다시금 주목 받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반성과 함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유희재화의 발생, 세계적인 저장장과 경제적 침체 등에 대한

경제적 움직임의 사회적 대처방식의 확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김상만·임태경, 2019). 특히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의 도래는 신자유주의 흐름으로 인한 정부의 복지 지출 감소와 함께 서구 선진국들의 대규모 실업으로 인한 가계파산으로 새로운 재화의 구매 대신에 공유, 재활용 등의 방식을 통한 소유보다 활용가치를 강조하는 경향을 초래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욕구는 재화의 공급체계도 변화시켜 유희자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제활동 사고의 전환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Goudin, 2016).

결국 이러한 차원의 문제인식에서 등장한 공유경제의 개념은 최초로 Lessig이 제안한 개념처럼 단순한 새로운 이윤창출의 경제영역 구축을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인식과 이에 대한 해결을 도모하는 사회적 가치의 활동을 내재하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의 핵심적인 부분이 구성원들간의 네트워크와 신뢰성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차원의 경제활동의 특성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논의에서 우버와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현재의 공유경제 활동의 인식은 등장배경이었던 사회적 관계로 인한 유희자원의 효과적 배분과 활용이 아니라 주로 가격체계를 기반으로 자원공유를 통한 이윤창출의 맥락이라는 점에서 공유경제 개념의 왜곡에 대한 논쟁이 있다(Benkler, 2004; 2015).¹⁾ 특히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설립되고 본격적으로 활동한 2010년 이후에는 공유경제의 논의가 주문형 경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다양한 공유경제의 개념적 스펙트럼은 증가하였으나 최초로 제기되었던 사회적 가치추구와 비영리적 차원의 문제의식에서는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이다혜, 2017; 이상호, 2019) .

국내에서는 공유경제에 주목하게 된 계기가 유희자원에 대한 협력적 소비를 통한 경제방향의 전환이라는 의미 보다 플랫폼 기반으로 접근경제 방식의 이윤창출 수단으로 활동의 시각이 치우친 부분이 있다. 이처럼 저장장시대의 새로운 경제적 생활방식과 작동원리로 자리매김되어 가는 공유경제의 논의에서 하나의 새로운 비즈니스의 형태로만 인식되어 공유경제에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가치가 상실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공유경제의 개념화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통한 공공성의 가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공유경제를 제도적으로 가장 먼저 시행한

1) 이에 대해 2015년 Havard Business Review에서는 에어비앤비, 집카, 우버 등과 같은 기업들이 공유와는 관련이 없는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라 주장하며 이들을 지칭하기 위한 방법으로 접근경제(access economy)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공유경제는 유희자원을 재화나 가격에 기반을 두고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나 가치에 기반을 두어 교환하는 것이라는 개념과 구분하기 위해 활용된 용어이다(성영조 외, 2016).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유활동을 사람의 재능, 지식 및 물건의 사용가치를 높여 지나친 소비, 인간소외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활동’으로 정의한다(서울시 공유촉진위원회, 2017). 또한 개념적으로 공유경제에서 공유도시로 전환되면서 공유활동으로 인한 도시의 사회문제 해결이나 공간적, 사회적 불균형과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의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McLaren and Agyemen, 2015). 그리고 서울, 경기, 전북 등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유경제의 개념은 지역차원의 유희자원을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고 협력적으로 소비하여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의 사치를 창출하는 사업모델이자 생활양식이라는 점이 공통적이다(경기연구원, 2016).

충청남도 또한 2019년 9월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공유경제에 대한 정의를 ‘소유권의 이전 없이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높이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하였고 이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기업을 공유기업이라 규정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 공유경제를 정책적으로 주목하게 된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역경제성장, 일자리창출의 둔화로 인한 신성장동력 발굴의 필요

둘째, 공공정책의 한계를 보이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도내 산적한 유희자원과 공유자원들에 대한 효과적 활용의 고민

셋째, 지역경제의 회복력과 자족성을 높이고 공동체 중심의 지역의 활력 증대와 생태적, 사회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통한 양극화 해소의 접근

공유경제 관련 조례의 제정과 위와 같은 정책적 필요성으로 인해 충청남도는 2019년 경제통상실의 역점시책으로 ‘공유경제 실현 기반조성’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 개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후 2020년 4월 공유경제의 지원업무가 충청남도의 사회적 경제과로 이관되면서 사회적경제과에서 공유경제 지원활동의 협력과 연계에 관한 정책적 수요 발생함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정책적인 연계방향과 방안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의 정책지원 시각에서 공유경제의 공공성과 사회적가치적 측면에 주목하면서 이에 대한 유사한 경제활동인 사회적경제와의 접점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계의 정책적 방향과 방안들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또한 21세기 초부터 국내에서 대안경제로 주목받으며 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성장하고 있고 충청남도는 선도적으로 광역차원에서 10년 정도의 정책지원의 경험을 갖고 있다. 현재는 인식이 확산되어 사회적경제는 경제양극화 및 소득불평등 해결과 경제의 사회적 가치창출의 지향성을 인정받지만 경제적 성과의 부분에서는 이윤창출의 한계 및 보조금 기반 운영 등으로 인한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거론되어 이에 대한 극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공유경제를 바라보는 개념적 관점은 다양하지만 특히 충남 등 지방자치단체가 강조하는 사회적문제해결과 가치추구의 관점에서 기존의 사회적경제조직 활동과 유사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연계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충남에서 공유경제가 도입단계로 활동기반이 매우 미약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영역과의 연계방안을 통한 공유경제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연구의 목적

앞서 제시한 연구배경의 논의에 따라 본 연구는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충남에서 공유경제의 공유가치 기반의 활동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영역과의 상호보완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적 방안들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연관성을 구성하고, 사회적가치활동 기반의 상호보완관계를 구축하여 충남 특성의 협력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연구목적은 세분화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본 연구는 현재 맹아기이며 정책 도입단계인 충청남도 공유경제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대안경제활동으로 공유활동의 본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지역사회의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 성장 중인 사회적경제 활동과의 이념적, 정책적 관련성을 도출하여 연계활동의 당위성과 근거를 마련한다.
3.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 연계활동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현재 사회경제 양극화 해소와 코로나 19 상황의 극복을 위해 충남에서 두 영역간 상호보완성 중심의 지역기반 연계 방향과 모델을 제시한다.
4. 현장에서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연계활동 구축과 확산을 위해 충청남도의 정책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공공적 시각에서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며 공공성의 개념에 부합하는 사회적가치의 측면에서 사회적경제와 협력을 통한 활성화 방향 구축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①공유경제의 본질적 의미탐구를 통한 사회적가치의 복원 ②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쟁점과 한계 극복을 위한 상호보완 관계의 규명 ③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연계활동 확산을 위한 지역커뮤니티 중심의 정책방향 제시 ④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정책협력 방향을 기반으로 정책방안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방향을 기반으로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1) 충청남도가 지향하는 공유경제 개념의 구체화

공유경제는 매우 다양한 경제활동의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충남형’의 공유경제활동의 개념적 포커싱이 필요하다. 우선 선행연구인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개발(2019)’에서 공유경제의 비전을 ‘나눔으로 행복해지는 착한경제 실현의 장, 충남’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개념상의 공동체성의 개념 중심의 공유경제 이론을 종합하고 핵심 요인도출을 통해 구체화 한다.

특히 공동체성 및 사회적 가치 지향성을 부각하여 현재 공유경제 맹아기인 충남에서 공유경제의 지향성을 명확히 도출한다. 공유경제는 나눔문화와 공동체성의 의식을 기반으로 협력적 소비를 지향하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강병준, 2012). 따라서 충남형 공유경제의 지향성과 운영모델에 대해 공동체적 가치와 나눔문화, 협력적 소비의 개념들을 종합한 이론적 틀을 구축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코로나19이후 변화해가는 사회, 경제적 상황의 대응을 위해 유희자원들의 협력적 소비와 신뢰에 기반 한 지역(로컬)중심 활동사회라는 공유경제 가치와 함께 새로운 사회의 방향을 제시한다.

(2) 공유경제의 사회적가치에 주목한 연계방안 토대 구축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접점의 모색은 강병준(2012), 라준영(2014), 양소영·문정민(2018), 이상호(2019) 등의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운영원리와 가치 지향성에 대한 이론적 공통점과 특성을 도출한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은 실제 공유경제 운영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동의 연계와 참여방안의 이론적 논거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스펙트럼이 넓은 공유경제의 개념적 범주를 포커싱하고 구체화의 논의들이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이와 같은 논의는 Benkler(2004)등의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는 공유경제에 대해 영리형과 비영리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비영리 형태를 사회적 동기에 따라 작동되는 ‘공유제 기반 동료생산(Commons based peer production: CPBB)’으로 명명된다. 이러한 CBPP는 개인들의 사회적 동기에 의해 작동되는 탈집중화의 협력적 활동방식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논의에 따르면 공유경제는 우버나 에어비엔비와 같은 주문형 수탈경제를 비판하며 생산부터 소비까지 공통된 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해 협력적 경제행위의 지향점이 분명하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공유경제의 비영리적 가치의 지향은 사회적 동기에 의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며 플랫폼의 성격은 비영리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의해 공동체 및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 활동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게 된다. 이처럼 충남도정의 방향과 부합하도록, 공유경제의 공유가치와 사회적가치를 포커싱 하여 사회적경제활동과 접점의 이론적 기반을 탐색하는 과정은 본 연구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 하겠다.

세 번째로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연계방향과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에서 구현과 인식적 부분에 대한 검증을 위해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이론적 개념화와 함께 실제 공유경제에 사회적경제 활동이 연계될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의 과학적 근거에 따라 도출하기 위해 관련된 사례조사와 전문가 중심의 인식조사 등의 연구방법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연계방안들을 제시하는 본 과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우선 국내에서 공유경제 활동 수행을 사회적 동기나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기업(조직)의 사례들을 분석한다. 이와같은 사례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활동이 도출되며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활동이 어떻게 융합되는지에 대한 방향과 시사점을 종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집단면접 및 인터뷰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공유경제의 본질적 가치에 및 활동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종합하고 사회적경제와 연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네 번째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충남 공유경제 한계의 극복과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의 참여와 유인과 정책간 연계방안을 도출한다.

앞의 분석을 통해 충남형 공유경제의 주요한 활동 영역과 이에 연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기업들의 참여를 위해 전략적 유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제도적 범위 안에서 기업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적 방안들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충남의 특성에 기반한 공유경제 활동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수행을 위한 방법으로는 이론적, 정책적 검토를 위한 문헌분석과 함께 방문사례조사와 집단 및 개별 인터뷰에 기반한 질적분석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1) 문헌조사 분석

문헌검토는 일반적으로 연구주제와 관련된 기존 문헌의 해석과 분석을 의미하며 독립적 연구성으로 활용되거나 연구수행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된다. 문헌검토는 경험적 연구에 기반하여 관련된 가설을 다루는 다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관심주제의 지식 생태계를 파악하고 주요 이슈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기반이 된다. 이러한 문헌검토의 의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 수행을 위해 문헌검토의 방법을 활용한다.

첫째,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의 검토를 통해 경제활동의 원리와 특성을 구분하여 이론적 연계성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유경제 활동의 한계 극복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동의 연계전략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전략으로 구분하여 연계성을 살펴본다. 둘째,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정책사업과 공공지원 활동의 문헌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적 연관성과 상호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상호정책간 연계될 수 있는 정책적 연계지점을 발굴한다. 셋째, 문헌분석을 통해 충남의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에 대한 실태와 현황(조직수와 경제규모, 물리적 기반,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기반 등)을 분석하여 상호연계의 실질적 방안을 탐색한다.

(2) 사례 및 인터뷰 조사

질적조사분석은 구성주의 및 해석주의적 접근에 기반하여 경험적인 자료를 토대로 특정 사회 현상 탐구에 대한 맥락적, 해석적 지식을 획득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질적분석은 기술과 설명의 단어들의 형태로 자료가 수집되고 주제와 범주로 구분되어 연구에 활용된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에서 사례연구분석의 방법을 활용하는데 이는 사회적 현상을 전체적으로 탐구하고 설명적 질문을 통해 연구를 위한 보다 심층적인 자료들을 습득한다. 특히 사례연구는 사회적 대상의 독특한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관계 자료를 조직화하는 연구방법으로 특정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에 유용하다(Goode & Hatt, 1981).

본 연구는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연계활동을 수행하는 사례들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우선 충청남도를 비롯하여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지원정책을 함께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의 사례를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통해 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공유경제의 플랫폼 방식의 경제활동을 수행하지만 사회적경제의 범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제조직들을 방문하여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공유경제 및 사회적경제에서 직접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유경제 활동의 본질적인 목적과 가치를 비롯하여 사회적경제와의 개념적 연관성 및 활동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설명적 기술을 통해 의견을 획득하여 본 연구 정책방안 도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본 인터뷰 조사는 이론적으로 구성된 연계모델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과 함께 의견종합을 통한 모델의 검증과 구체화의 과정을 위한 과학적 연구방법을 의미한다.

3) 연구방법의 종합

본 연구는 문헌검토를 기반으로 하여 현장기반의 사례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반영을 통해 이론적 모델구성과 정책행위의 맥락적 요구의 파악을 위한 질적연구의 방법을 수행한다. 따라서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쟁점분석을 통한 상호보완관계의 구성을 위해 문헌조사분석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현장의 검증과 맥락파악을 위해 현장 전문가 및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방법을 수행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문헌조사, 사례조사, 인터뷰조사를 기반으로 한 질적분석의 연구방법을 종합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연구 내용 및 방법

구분	연구내용		연구방법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상호보완관계 구성	개념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배경과 개념화 -두 영역간 이론적 연계점과 부합성	문헌조사
	정책	-국가 및 충남에서 영역간 지원정책 비교와 연관성	
	실태	-현재 충남에서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의 현황과 실태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정책과 자원 검토	정책검토	-국가 및 충남에서 영역간 지원정책 비교	문헌조사 인터뷰
	사례검토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 활동사례 검토	인터뷰
	지원사례	-공유경제 활동의 사회적경제기업참여 지원정책의 사례 검토	문헌조사 인터뷰
상호보완 관계의 실증분석	전문가 인식수요조사	-영역간 상호보완관계와 연계방안의 전략 구축	인터뷰
공유경제, 사회적경제의 협력관계 방향 도출	연계의 방향 구축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연계 방향 도출과 체계 마련	자문회의
	연계전략 사업 도출	-방향에 따른 구체적 정책사업 발굴	

3. 연구의 범위와 대상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주요한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충청남도 15개 시군 전역을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한다. 특히 정책적 범위에서는 공유경제기업이 활동하는 충남의 지역사회로 구체화 할 수 있다.

(2) 시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는 본 연구를 위한 최근의 실태 및 정책현황을 고려한 2019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로 설정하며 하며 본 시간적 범위 내에서 공유경제 및 사회적경제의 제도, 현황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사례와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3) 대상적 범위

본 연구는 충청남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유경제 기업을 우선적인 연구범위로 규정으로 하고 있으며 공유경제 활동과 연계된 수요자 및 공유자산 중심의 지역공동체를 포함한다. 그리고 공유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충남의사회적경제기업과 정책지원 대상을 대상적 범위로 포함 한다.

2)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충남에서 활동하는 모든 공유경제기업들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지만 충남에서 활동 현황의 파악과 공공재원 지원정책의 부합성 및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적, 사회적가치의 활동내용을 포함하는 공유경제기업들을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진행한다.

따라서 공유경제기업의 활동이 공공성의 성격에 부합하거나 사회적 가치활동을 중심으로 충청 남도의 공공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유기업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는 현재 충청남도

조례의 내용 및 충청남도 공유경제 기업에 대한 공공지원정책의 합목적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향후 정책방향의 대상에서는 충청남도의 공공적 사업과 연계되어 활동하거나 협력적 활동을 수행하는 영리형의 공유경제 형태로 논의를 확장하여 사적인 영리적 목적을 추구하는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기업을 모두 포괄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충청남도에서 정책사업의 대상으로서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방안들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우선 충남에서 공유경제가 도입 초기 단계이며 현재 활동 주체나 기반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유경제 기업의 현황 실태를 비롯한 주체들의 인식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불가능하다. 또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도입시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 또한 시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다음의 한계점으로는 본 연구는 공유경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의 도입으로 인한 공공적 가치의 고려와 함께 조례를 비롯한 도정 정책방향에 기반하여 공유가치에 대한 사회적 맥락에 대한 개념적 포커싱과 관점을 갖고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한 공유경제의 활성화방안의 탐구라는 점에서 현재 우리사회에서 대중적으로 알려진 플랫폼 활동으로 인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접근경제 및 플랫폼경제의 영리형 공유경제의 활동에 대한 개념적인 비판적 시각을 전제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공유가치 및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비영리 형태의 공유경제활동에 주목하여 진행하였다.

4. 선행연구의 검토

1)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선행연구 검토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 관련 선행연구는 매우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구축되어 있다. 본 연구는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연계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송영현 외(2019)는 충청남도의 공유경제 도입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유경제의 개념과 이론을 검토하였고 충남의 공유경제 추진현황과 주요사례분석 및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충남형 공유경제의 방향은 지역공동체의 경제, 사회, 환경적 이익을 조화롭게 창출하는 신뢰에 기반한 착한경제의 실현으로 제시하였고 구체적 실현을 위해 공유경제 추진체계 구축, 신뢰 기반 참여형 공유환경 조성, 제도 및 자원관리 기반 마련, 상징성 있는 지역특화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다.

함창모(2018)는 충청북도 공유경제 관련된 이론적 검토와 정책동향, 실태분석을 통해 정책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도입방안에서 충북형 공유경제를 지역내 자산을 대상으로 공동체 기반의 협력적 경제활동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도심공동화, 농촌인구소멸, 환경오염, 고용침체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공유경제로 충북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였다. 전환을 위해 비영리 공유경제 우선도입과 단계적 확산의 방향과 함께 제도적기반 구축과 이를 통한 기초 생태계 조성, 규제 개선과 갈등예방, 생활밀착형 문화확산을 제시하였다.

함영모(2019)는 전라북도의 공유자산의 실태조사와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라북도 공유경제의 동향과 여건을 살펴보고 도내 기관단체 대상 실태조사와 인식조사를 통해 공유경제 방향과 비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익성, 효율성, 혁신성의 정책가치에 기반하여 정작목표와 정책대상을 선정하고 공유경제 제도마련, 기반구축, 활동지원의 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자원활용의 보전을 제시하였다.

성영조 외(2016)는 경기도에서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개념 및 범위와 영역을 검토하였고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의 국내 사례와 국외사례의 분석과 함께 경기도민 대상으로 공유경제 관련 서베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공유경제를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정신 회복의 활동으로 규정하였다. 경기도 공유경제의 진단을 통해 대표적 사업 분야로 교통공유, 공간공유, 물품공유, 정보서비스 공유 분야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추진을 위해 플랫폼 구축과 추진주체간 네트워크를 강조하였다.

2) 공유경제와 사회적가치 활동의 연계연구 검토

공유경제의 시각에서 사회적경제 및 공동체적 가치와 접목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Benlker(2015)는 과거의 생산방식과 달리 현재의 부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관계제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 강조하였다. 현재의 기술에 의해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인간의 협력과 비시장적 사회적 동기에 기반한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 경제사상적 논의를 통해 고찰한다. 대표적으로 리눅스, 위키피디아와 같은 성공사례를 통해 소유 전유 전략에서 벗어나 분산된 형태의 비시장적 협력적, 공조적 활동의 동료생산 활동을 네트워크 경제의 특징임을 도출한다. 단순히 네트워크의 중요성의 강조에서 나아가 공감에 기반한 사회적 신뢰의 생산구조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비영리적 공유경제의 방향성을 제시한 이론을 구축하였다.

리준영(2014)은 서울시 사회적기업 우주(WOOZOO)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유경제 방식의 활동으로 사회적가치를 구현하는 사회적기업의 심층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유경제의 활동 원리는 사회문제해결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로 활용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이론적 근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우주의 사례는 도시청년의 주거문제해결이라는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공유주택기반의 사회적기업 운영 모델을 주택소유주와 청년입주자(임차인)의 중간관계 역할의 모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특히 우주의 사례는 단순 대여서비스의 공유경제에서 나아가 무임승차 방식을 위해 공동체성을 확보하고 공유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사회적 목적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가치 창출의 중요함을 제안하였다.

강병준(2012)은 공유경제 시스템을 사회적기업에 적용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공유경제에서 협력적 소비의 개념에 천착하여 사회적경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의 가치, 평등한 참여, 협력의 탐구의 가치들을 도출

하였다. 그리고 공유경제의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과 활동유형화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상호(2019)는 Benkler의 네트워크 경제를 중심으로 한 공유재 기반 동료생산(CBPP) 모델을 중심으로 비영리경제활동에 의한 경제적 불평등 극복의 방향을 지세하고자 하였다. 특히 Benkler(2004)는 공유경제는 사회관계와 공유의 윤리를 기반으로 자원 동원과 배분이라는 정의에 천착하면서 자본주의 방식의 수탈형 공유경제와 비영리형의 창조형 공유경제를 구분하고 수탈형 공유경제에 대해 기존 자본주의 논의와 유사성에 주목하면서 그 한계를 지적한다. 결국 비영리형의 공유재기반 동료생산(CBPP)의 복지모델 가능성에 주목하며 이러한 신뢰기반 거래형태를 통한 거래비용의 최소화와 같은 현재 경제구조 한계극복의 대안을 탐색하였다.

김해중 외(2015)는 공유경제 서비스의 성공요인 도출의 연구를 통해 공유경제 서비스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지각된 가치, 지각된 위험, 네트워크 외부성의 요인과 신뢰와 만족도의 관계품질의 관계에 대한 모형을 구성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와 시사점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각된 가치 및 관계적 행위가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이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유경제 활동을 위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3) 선행연구와 차별점

우선 선행연구로 살펴본,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의 공유경제 관련 정책연구들은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 설정과 이에 따른 실행사업의 도출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어서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본 연구는 이와 다른 분명한 차별점을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연계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시도는 주로 이론적 내용에 기반한 규범적 연구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에서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반의 연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Benkler(2015)나 이상호(2019)의 연구처럼 경제 및 복지 관련 이론적 탐구를 통한 개념적 연구와 함께 실제 충남의 정책현장에서의 활용가능한 전략과 정책의 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강병준(2012), 라준영(2014)의 연구처럼 공유경제 초기에 사회적경제와의 개념적 접점을 모색

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간헐적으로 존재하였는데, 규범적이고 탐색적인 방향의 제시에만 그친 한계들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특히 라준영(2014)의 연구는 사회적기업 우주라는 서울의 단일사례 연구로 인한 결과의 보편성 측면에서 한계를 노정한다. 김해중 외(2015) 또한 실증적인 분석에 기반하였지만 이론적 논의로 구성된 규범적 함의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는 공유경제의 원리와 활동에 기반하여 사회적경제 영역과 연계방안을 이론적 부분으로 구성하고 이와함께 현장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처방적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앞서 선행 연구들과 분명한 차별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공유경제의 본래적 가치가 사회적 활동에 천착됨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개념적 연관성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가 있다. 나아가 구체적 두 영역간 활동을 중심으로 과학적 근거를 통해 연계의 방향을 포함해 정책 지원의 처방적 방안 도출은 정책적 의의를 갖고 있다.

제2장 이론적 배경

1. 공유경제의 개념과 이론

1) 공유경제의 등장과 특성

(1) 공유경제의 등장 배경

공유경제의 등장은 현대에 새롭게 제기된 패러다임이 아니며 19세기 이후 자본주의 체계의 발전에 따라 주변부로 밀려났던 과거의 공유적 경제활동들이 인터넷, IT, 정보기술 등 새로운 형태로 재부상한 개념으로 제기된다(Benkler, 2004). 이러한 공유경제가 2000년대 이후에 급부상하게 된 것에는 세계적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지만 이를 경제적 측면, 사회적(환경적) 측면, 기술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5; 경상남도, 2019; 한국행정연구원, 2019).

① 경제적 측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의 재정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저성장 국면 진입과 이에 따른 가계소득 감소로 인해 글로벌 소비 위축 및 교역량 감소에서 공유경제가 등장한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잉여 및 유희재화의 발생, 저성장, 실업 및 취업난, 가계소득의 저하 등 경제적 침체를 심화시켰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경쟁적 소유나 과소비가 아니라 비용을 줄이면서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전환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결국 자신이 자원을 소유하기 보다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거나 대여, 임대와 같은 협력적 소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합리적 소비문화가 확산되었다. 결국 공유경제는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라 볼 수 있다(권애라, 2013; 송운강, 201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현재까지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반성 및 성찰과 함께 소비자들은 생상품 소비·소유보다 공동소유와 협력적 소비라는 새로운 소비패턴에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② 사회적 측면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공유경제 활동이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환경적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게 되었다는 점을 거론할 수 있다. 전 지구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인구 집중현상에 따라 높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유경제는 공급차원에서 유희자산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등장한 면이 큰데 재화를 한꺼번에 구매해야 하지만 이용률이 낮은 물적자원을 분산 컴퓨팅, 무선 네트워크 등을 이용한 플랫폼 매개로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Benkler, 2016). 그리고 이러한 이용을 위해서는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신뢰와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모든 공급자는 또한 수요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이 아니라 주체들 간의 신뢰에 기반 한 사회적 가치가 요구되는 점도 전통경제와 차별화하며 등장한 공유경제 패러다임의 특징이기도 하다.

③ 기술적 측면

공유경제 촉진의 가장 큰 요인은 공유경제의 인프라가 되는 초고속 무선인터넷, 모바일 결제시스템 등 IT 기술들의 진보를 거론할 수 있으며 Benkler(2016)가 언급한 바처럼 과거의 공유활동이 누릴 수 없던 거래비용 절감이 이러한 기술진보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다.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낮은 거래비용으로 공유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공유행위를 촉진시키고 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 위치기반, 서비스 및 통신망 기술 발전과 함께 개방형 네트워크 확대는 공유경제를 촉발하고 확산시키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디지털 공동체 형성은 공유경제의 규모화 형성을 촉진한다. 정보통신 발달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눈)를 발전시켰고 사람들은 네트워크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거래구조가 등장하게 되었다(권애라, 2013).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개인 간 물품 거래나 대여, 타인에 대한 신뢰와 평판 조회 등에 있어 편리화 시켜 다양한 공유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해준다(김전산 외, 2014). 결국 오프라인에 비해 정보의 양적, 질적 수준이 높고 거래의 투명성과 편의성, 속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공유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갖게 된 것이다(조용수, 2015).

이처럼 세계적인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이에 부합하는 활동의 형태로 공유경제 방식을 주목하게 되었으며 현실에서 실행의 동력은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코로나19로 인한 공유경제의 부상과 주목

이와 함께 2019년 말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과 주목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환경의 변화는 전 사회적으로 비대면과 언택트의 생활양식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팬데믹 상황은 일각에서 우버,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몰락을 예견하고 있다²⁾.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은 개인의 삶에서 글로벌 경제까지 고립(isolation)의 현상을 확산시키며 고립경제의 확산 속에서 공유경제의 어려움이 예견된다.³⁾ 하지만 오히려 경직된 공간 및 생산, 소비활동에서 보다 작은 규모로 유연한 구조의 공유활동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어 이에 대한 논의는 진행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공유경제는 단순히 물리적 접촉에 의한 자원공유를 의미하는 좁은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정보기술기업의 성장세를 반영하듯 디지털기술이나 플랫폼에 기반을 둔 공유경제는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 결국 오프라인의 생활에서는 고립될 수 있으나 디지털 환경의 관점에서는 소비자들이 더욱 연결성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언택트 서비스가 증가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공유경제 자체적인 활동의 증가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다.⁴⁾

기본적으로 세계경제의 상황의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는 역성장으로 전환되어 초저성장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⁵⁾ 이와 같은 역성장 및 초성장기에 따른 지역경제는 생산 및 소비활동의 둔화로 지역에 증가하는 유흥자원들의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와 같은 유흥공간을 비롯한 자산들의 활용에 대한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은 시대적 사명으로 강조되면서 극복의 처방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6월 초 서울에서 열린 'CAC(Cities Against Covid-19) Global Summit'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사회의 포용성과 공유사회의 새로운 방향성에 주목해야 함을 제시한 바 있다. 결국 현재 세계적 경제상황에서 새로운 생산보다는 유흥자원들의 협력적 소비방식으로 경제방식의 전환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신사업 도입촉진을 위한

2)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0/06/599794/>

3) 차량공유기업인 우버테크놀러지스는 최근 3,000명의 추가 감원계획 등 한달 사이에 전체 이력 25%를 감원하였고 공유 숙박업체 에어비앤비 또한 전 직원의 25%인 1,900명을 감원하고 모든 마케팅비용을 감액하였다.

4) 명순영 외, 2020, 공유경제 지고 고립경제 오나, 매경 Economy, 2060호.

5) IMF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0%로 예측하고 있으며 미국이 -5.9%, 유로존 -7.5%의 역성장이 큰 가운데 한국은 -1.2%로 예측하고 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19_0000998415&cID=10401&pID=10400 참조)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을 제시하며 한걸음 모델 적용은 향후 공유경제 및 비대면 서비스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결국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 간의 관계와 집단적 활동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지만 사회적 관계 맺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언택트의 강화에 많은 전문가들은 부정적이다. 현재의 언택트 서비스 부상은 근본적으로 대면행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재적인 한계를 수반한다.⁶⁾ 대면접촉의 관계성 자체를 IT 등 기술적 측면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들에 대해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팬데믹 시대에는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가속되던 세계화보다 지역화, 로컬중심의 서비스와 행위들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적 사고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유창복(서울시 협치 자문관)은 코로나 19에 의해 발현된 언택트의 상황에서 이후에는 ‘신뢰 기반의 로컬택트(Local-Tact)’로 전환을 강조한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일상을 재구조화하고 원거리 이동과 밀접공간을 피하고 근거리 이동과 신뢰기반의 근거리 거리두기를 강조함을 의미한다. 아직 코로나19의 생활변화가 진행중인 상황이지만 일상생활의 복귀가 가능하면서도 적절한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뢰 기반의 지역사회’가 생활방역이자 생활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공유경제의 형태와 영역 또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한 플랫폼 기반의 역세권 경제형태 보다는 국소적 의미에서 일정 지역 내 구성원들 간 공동체의 유희자산에 기반 한 협력적 소비 형태의 공유경제의 영역에 대한 향후 정책적 접근이 요구받고 있다.

(3) 공유경제의 원리

공유경제는 이수민 외(2015)에 의하면 특정 서비스의 수요자와 해당 서비스를 창출하는 유희자산을 보유한 공급자 간 해당 유희자산을 이용한 시장거래를 ICT플랫폼이 중개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상품과 서비스를 대여자와 이용자의 두 주체가 플랫폼을 통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다음의 그림처럼 공유경제의 작동은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대여자는 자신의 유희자원을 등록하고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유희자원을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이를 활용하며 대여자는 이를 통해 대여

6) 관련기사 참조: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Premium/at_pg.aspx?CNTN_CD=A000264816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수입을 얻게 된다. 공유플랫폼 또한 대여자와 이용자 간 거래가 성사되면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이윤을 얻는다는 점에서 이용자, 대여자, 공유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라 할 수 있는 것이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자료: 클라우드산업연구소(2013)

<그림 2-1>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이와 함께 공유경제 운영에 대한 원리를 종합하면 다음 3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공유경제는 플랫폼 커뮤니티의 관리 수준이 각 플랫폼 사용자를 위해 창출한 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인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20세기 산업시대에는 ‘공급측면의 규모의 경제’에 기반하여 성장하였고 대기업들은 생산비용 우위를 통해 성장과 이익을 창출했다. 반면 21세기 인터넷 기반의 거대기업들은 ‘수요 측면의 규모의 경제’를 통해 성장하였으며 이는 앱 개발, 소셜 네트워크 효율성 등으로 네트워크가 확장될수록 이용자들에게 더욱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결국 수요측면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시장에는 가장 거대한 기업에게 네트워크 효과 우위를 제공하여 후발 경쟁업체들이 이를 추격하기 어려운 현상이 발생한다(최유성, 2017).

둘째, 위에서 강조한 수요 측면의 규모의 경제는 양면 네트워크 효과(two-side network effect)의 원리를 기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양면 네트워크 효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개발자와 이용자 등의 두 주체들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서로를 끌어들이며 네트워크의 규모와 고도화를 확장시키는 효과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수요 측면의 규모의 경제가 형성된다. 이와 같은 공유경제의 원리에 따르면 네트워크 효과는 공급자와 수요자 양면적 특성을 모두 포괄하므로 네트워크가 전체적으로 확장되려면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유사한 비율로 성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최유성 외, 2017; 한국행정연구원, 2019).

셋째, 이러한 공유경제의 네트워크 효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 또한 존재한다. 공유 커뮤니티 관리의 부실을 통한 부정적 효과가 확산되면 참여자들은 네트워크에서 이탈하고 기업활동은 무너지게 된다. 결국 네트워크가 성장하더라도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적절한 수준의 매칭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정적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이현경, 2017). 이처럼 공유경제 네트워크의 부정적 효과로 인해 불량고객만 시장에 남고 우량고객은 시장을 떠나는 선택이 일어나는 현상을 플랫폼 시장의 그레샴의 법칙(The Gresham's Law)으로 부른다(최유성 외 2014; 한국행정연구원, 2019). 이러한 부정적 효과의 확산 방지를 위해 공유플랫폼에서 공급자 및 사용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와 관리방안의 마련과 함께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규범형성을 통해 이를 수행하는 공동체적 신뢰확보의 방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유경제 활동 자체가 사회적 관계에 의한 신뢰와 커뮤니티적 원리를 내재한다고 볼 수 있다(최유성 외 2014; 이현경, 2017).

(4) 공유경제의 특성

공유경제의 특징은 일반 전통적 경제와 구별되는 부분들에 따라서 거론할 수 있는데 Botsman(2010)은 핵심적 요소로 4가지를 거론하였다. 첫째로 공유경제는 적절한 규모(critical mass)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용자들이 충분히 거래행위가 가능하며 만족할만한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가 형성되어있어야 한다. 둘째로 여분의 자산과 재능을 활용하여야 하며 땅, 물건, 서비스, 공간 등 공유할 수 있는 소유물과 재능이 포함된다. 셋째, 공유자원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데 이는 공유경제를 활용하는 것이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시키고 공동체가 발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구성원들 간의 신뢰 형성이 필수적이며 공유경제는 플랫폼을 통해 시장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믿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거래 주체 간 신뢰가 전제되어야 상호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김형균 외, 2013; 이장우 외, 2015).

<표 2-1> 공유경제의 필수요소

구분	주요내용
적정한 규모	이용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
여분의 자산	여분의 물건, 공간, 서비스 등 개인 소유의 유휴자산
공유재의 믿음	여럿이 공유하면 사용의 가치가 커진다는 공유재의 믿음
당사자의 신뢰	대여자와 이용자를 직접 연결하는 사회적 신뢰와 커뮤니티

자료: Botzmans(2010), 김형균 외(2013), 황영모 외(2015)

공유경제를 어떻게 개념화하는지에 따라 특징이 일부 달라질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공유경제의 특징은 다음의 <표 2-2>처럼 전통의 소유경제와 비교함으로써 더욱 분명할 수 있다. 공유경제는 소유보다는 이용, 이윤보다는 가치 극대화, 플랫폼에 기반 한 시스템, 주체 간 경쟁보다는 신뢰, 중개자(플랫폼의) 역할 강조, 개별적 소비보다는 협력적 소비, 자원의 일방적 사용보다는 순환적 사용을 강조한다. 또한 공유경제는 ICT기반의 플랫폼이 시장거래의 기반이 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소셜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사람들의 소비문화를 변화시켜 공유경제의 특성화의 기반이 된 것이다(성영조, 2016).

<표 2-2> 공유경제의 특징

구분	특징	비고(소유경제)
형태	이용	소유
목표	가치 극대화	이윤 극대화
목적	재화·용역의 이용권 이전	재화·용역의 소유권 이전
거래체계	플랫폼 메커니즘	시장 메커니즘
주체 간 연계	주체간 신뢰	주체간 경쟁
중개자	연계 높음	연계 낮음
소비방식	플랫폼(중개자≠공급자)	전문기업(중개자=공급자)
자원사용	협력적 소비	개별적 소비
자원	순환적 사용	일방적 사용

자료: 김형균 외(2013), 황영모(2015), 충북연구원(2018) 참고 재정리

또한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는 전통경제는 경쟁에 기반을 두고 작동하는 원리라면 공유경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한다. 전통경제의 수요·공급·거래는 그 기반에 상대에 대한 신뢰가 없고 대량생산된 물건을 싸게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자원 고갈을 초래한다. 반면에 공유경제는 이미 생산된 유헴자원의 재활용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경제행위이기 때문에 생태지향적, 자원절약적 원리를 갖는다. 하지만 공유경제 또한 수익성 추구의 활동을 포괄하며 무엇보다 에어비앤비나 우버와 같이 국가적 경계를 넘어서는 다국적 플랫폼을 가진 공유기업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하는 특성을 갖는다(한국행정연구원, 2019).



자료: 김점산 외(2014) 참고.

<그림 2-2> 전통적경제와 공유경제의 비교

2) 공유경제의 개념과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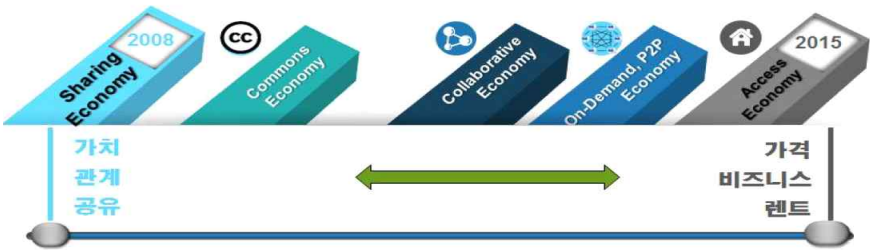
(1) 공유경제 개념의 접근

공유경제의 개념은 커먼즈(communs)부터 접근경제(access economy)까지 폭넓게 정의될 수 있다. 커먼즈는 국가나 시장의 대안으로서 공동체적 성격을 기반으로 가치, 성취함, 협력, 공동체에 의한 자원의 공동소유에 중점을 두는 경제이다. 자원의 공동이용보다는 공동소유와 생산을 강조하고, 대중보다는 특정 공동체를 중시한다, 이에 반해 접근경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접근성을 강조하며, 비즈니스에 특화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폭넓은 형태를 가진 공유경제를 하나의 고정된 형태로만 개념 정의하는 것은 어려우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개인, 기업, 지역, 국가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춰 공유경제의 개념을 재정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공동체와 사회·환경적 가치, 공동 소유와 생산을 중시하는 커먼즈(communs), 협력적 소비와 이용을 중시하는 협력적 경제(collaborative economy), 접근성과 확산을 중시하는 수요기반 경제(on-demand economy), 기술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중시하는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 접근 경제(access economy)의 특성들을 지역의 목표와 가치, 수단에 맞춰 개념화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송영현 외, 2019).



〈그림 2-3〉 공유경제의 범위

자료: 경기연구원(2016)

(2) 공유경제의 이론적 개념화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면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Lessig(2008)은 공유경제를 상업경제 (commercial economy)와 대비되는 개념에서 출발하였는데 상업경제는 가격이 자원배분의 중요 기제이자 인센티브인 반면 공유경제는 非가격 기반의 ‘사회적 관계’가 가격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후 Botzman(2013)은 공유경제를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개인의 소비, 생산, 교육, 금융 등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협동경제(Collaborative Economy)로 보고 있으며 Scholtz(2016)는 생산과 함께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들이 생산과정과 혜택을 공유하는 ‘플랫폼 기반의 협력주의’에 기반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공유경제의 탄생 배경과 이론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정보기술에 의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관계를 강조하는 경제활동으로 폭넓게 정의가 가능하다.

특히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용어는 미국 연방공정위원회, OECD, 유럽위원회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본 용어는 공유경제의 경제적 목적과는 관계없이 효율성, 지속성, 지역사회의 개선을 위한 유희자원을 소유가 아니라 공유하는 활동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Vaughan & Hawksorth, 2014). 또한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공유경제를 협동적 소비모형을 향한 전통적인 시장행태의 재창조로서 기술 발전에 의해 가능해진 임대, 임차, 교환, 거래, 제공 등을 통해 자산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원리에 기초를 두며 유희자산의 개발되지 않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발굴한다고 정의한다(WEF, 2014).

특히 유럽에서의 공유경제 개념은 단일화 되지는 않았지만 협동적 경제(collaborative economy)의 의미로 활용되고 있으며 유럽위원회는 공유경제를 개인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일시적 사용을 위한 개방된 시장을 형성하는 협동적 플랫폼에 의해 활동하는 비즈니스 모형으로 정의한다(European Commission, 2018). 유사한 개념으로 Botzman & Rogers(2010)은 협동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를 지칭하고 있는데 협동에 의해 조직화된 공유, 물물교환, 대여, 거래, 기증, 교환의 조직화된 시스템을 의미하고 개인의 부담과 비용을 줄이면서 소유의 편익을 누릴 수 있게 하며 환경오염의 영향도 감소하는 가치를 강조한다.

이러한 공유경제가 탄생한 이론적 정의들을 종합하자면 소유와 가격에 의한 자원배분을 중시하는 상업경제와 대비되어 신뢰에 기반 한 사회적 관계에 의한 경제활동을 가장 기초적 개념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플랫폼 기반의 네트워크 활동의 형태로 구성되며 활동의 실현을 위해 인터넷 등 정보기술이 도구적으로 활용되는 개념적 층위를 구성할 수 있다. 결국 공유경제가 전통적 경제, 상업경제와 다른 경제 패러다임이라 거론하며 주목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점은 가격 매커니즘보다 사회적 관계와 신뢰의 네트워크에 근거하여 유희자원의 재활용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본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유경제의 본질적 가치보다 외형적 특성에 따라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의 형태 까지도 현재 공유경제의 범주에 포함시켜 개념적 범주가 매우 확장된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공유경제의 유사개념은 다음 <표 2-3>과 같다.

<표 2-3> 공유경제 유사 개념

개념	내용
접근경제 (Access Economy)	• 상품과 서비스를 소유하기 보다는 상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 (access)’ 에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
협력적소비 (Collaborative Consumption)	• 인터넷이 생기기 전에는 불가능했을 시장 행동, 즉 임대, 대출, 교환, 선물기증, 공유 등을 새롭게 정의하는 소비자 행동 시스템 • 일회성의 1차적 구매자/판매자 관계가 아니라 소유권 및 그룹 간 지속적인 상호 작용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면서 제품 및 서비스의 공유, 교환, 거래 또는 대여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적 모델을 모두 포괄
협동경제 (Collaborative Economy)	•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자원을 ‘필요’ 로 하는 사람과 ‘소유’ 하는 사람을 바로 이어주며 거래가 성사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 • P2P 플랫폼을 기반으로 ‘분산된 네트워크 및 마켓 플레이스의 경제적 시스템’ 을 포괄, 전통 기관을 건너뛰고 필요한 이와 갖고 있는 이를 바로 연결하여 미사용 자산의 가치를 개선
온디맨드경제 (On-Demand Economy)	• 즉각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며 사람이 상품과 서비스를 필요로 할시 바로 배달, 전달하는 시스템
피어경제 (Peer Economy)	• 개인 간에 자산 교환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촉진함으로써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시스템 • 자산이나 서비스의 매매를 위한 공식 시장이 없는 분산형 경제 모델로서 온라인 P2P에 의존
긱경제 (Gig Economy)	• 임시 계약직을 고용하려는 고용주와 잠재 직원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구성
렌탈경제 (Rental Economy)	• 자산을 소유하기보다는 수수료를 내고 빌리는 시스템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 단체 간 혹은 개인 간의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자산이나 서비스의 공유를 무료 혹은 수수료를 받고 촉진시키는 시스템

자료: Botsman and Rogers(2010), Pais and Provasi(2015), 박건철 외(2016), WEF(2017), 김시정(2018) 재인용

(3) 공유경제의 정책적 개념화

국내에서도 서울, 경기, 전북, 충남 등 국내 주요 지자체들은 공유경제 등장의 배경적 맥락을 고려하여 나름대로 공유경제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들의 공유경제 개념에서 공통분모를 추출해 보면, 지역차원의 공유경제를 다음과 같이 개념 정의 해볼 수 있다.

국내 주요지자체들은 공유경제를 일반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유휴자원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고, 협력적으로 소비하여 활용도를 높이며,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의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모델이자 생활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유경제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도 편익을 발생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이자 생활 형태인 것이다.

국내·외, 중앙·지방, 대기업·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공유경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특히 공유경제가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 및 사회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이유이다.

우선, 경제성장이 정체된 중앙, 지방정부, 기업들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 4차 산업혁명에 근거한 새로운 비즈니스 혁신 수단의 도입 등이 공유경제 활용의 우선적인 이유일 것이다. 또한 산재한 사회문제들을 기존의 수단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기존 수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식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즉, 경제, 교통, 문화, 산업,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나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기존 수단들의 한계가 나타났고, 상기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휴자원과 협력적 소비방식을 강조하는 공유경제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태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순환경제와 공동체성의 제고 역시 공유경제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이다. 공유경제를 통해 생산, 분배, 소비의 과정을 지속가능한 순환과정으로 이해하고 경제적 효율성 뿐 아니라 생태적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순환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공유경제는 현대사회에서 점차 지취를 감쳐가고 있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기도 한다. 공유의식을 바탕으로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사회현안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공유경제는 공동체성 증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림 2-4〉 지역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공유와 순환의 지역경제

자료: 정건화(2019)

(4) 공유경제의 개념적 범주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의 등장배경과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공유경제 개념의 핵심요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통경제의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한계에서부터 발생한 유희자원(상품, 기술, 재능, 시간 등)의 효율적 재활용과 분배라는 사회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회적 관계와 네트워크에 기반 한 다양한 상호작용(P2P, P2B, B2B, G2B, G2G 등)이 발생하는 플랫폼 중심의 운영체계를 의미한다. 셋째로는 이러한 다양한 행위자들 간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플랫폼의 실행과 운영을 위해 ICT기술을 활용함을 특징으로 한다.

공유경제의 종합적인 관점에서는 공유경제의 가치가 내재된 본질적 개념화보다 공유경제의 운영 형태와 유사한 형태의 기존 비즈니스 중심의 영리형의 경제 형태로서 온디맨드 경제, 피어경제, 킥경제, 렌탈경제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온 디맨드 경제의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여 즉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유경제의 네트워크 형태와 유사성이 있으며 피어경제는 개인 간 자산교환에 대한 촉진 시스템으로 플랫폼을 활용한 비즈니스 형태만을 의미한다. 킥경제는 임시직 고용을 위한 노동 시장 플랫폼에만 한정하고 있으며 렌탈경제의 경우는 기존 경제의 이용형태만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들의 공유경제 활동은 공유가치의 본질적 추구보다 활동 형태의 유사성을 갖는 기존 전통경제의 새로운 유형으로 보는 Benlker(2004)의

견해에 따라 유사 공유경제의 범위로 규정하고자 한다.

결국 이러한 유사 공유경제의 형태는 공유경제의 특정 재화의 이용이나 플랫폼 형태의 비즈니스 등 운영형태의 유사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넓은 범위에서 공유경제의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플랫폼 등 경제운영의 형태보다는 공유경제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공유 및 사회적 가치, 이론적 개념구성에 근거하여 범주를 제한하고자 한다. 특히 상업경제의 대안과 보안을 위한 사회적 관계의 강조와 함께 협동경제, 협력적 소비활동 및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들의 플랫폼 기반의 협력주의와 같은 이론적 개념과 함께 충청남도를 비롯한 정책적 개념을 종합하여 구성한다(Lessig, 2008; Botzman, 2013; Scholtz, 2016). 결국 본 연구에서 공유경제는 사회적 관계에 기반한 유희자원의 재활용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정보기술이 활용된 플랫폼 중심의 협력적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이윤창출의 영리적 수단보다 사회·환경적 편익을 발생시키는 경제적 사고와 활동방식이라 규정한다.

2. 공유경제의 유형화

1) 공유경제의 발전 동향

(1) 공유경제의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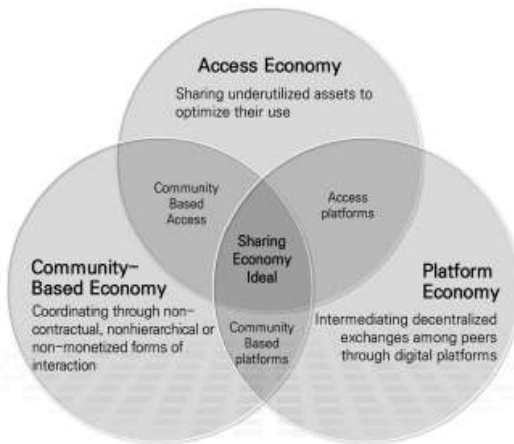
공유경제는 거시적 관점에서 세 가지 요인을 통해 구성된다(한국행정연구원, 2019).

첫째, 소유보다 접근성: 소비자의 태도와 행태는 소비지상주의와 상품 구매 우선주의로부터 접근성과 서비스되는 제품의 구매로 변화되고 있다.

둘째, 개인간 거래(peer to peer): 정보기술 및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은 신뢰관계와 개인 평판에 의해 조정되는 개인 간 상호작용 및 거래에 기반 하여 활동하는 특징이 있다.

셋째, 유희자원의 배분: 많은 개인들은 활용하지 못한 유희자원(자산, 노동력 등)에 의존하여 경제활동에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협동적 소비의 형태를 추구한다.

이와 같은 요소들의 특징으로 구성되는 공유경제는 어느 한가지만을 추구하는 형태가 아니라 세 가지의 핵심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균형 있게 갖추어진 모형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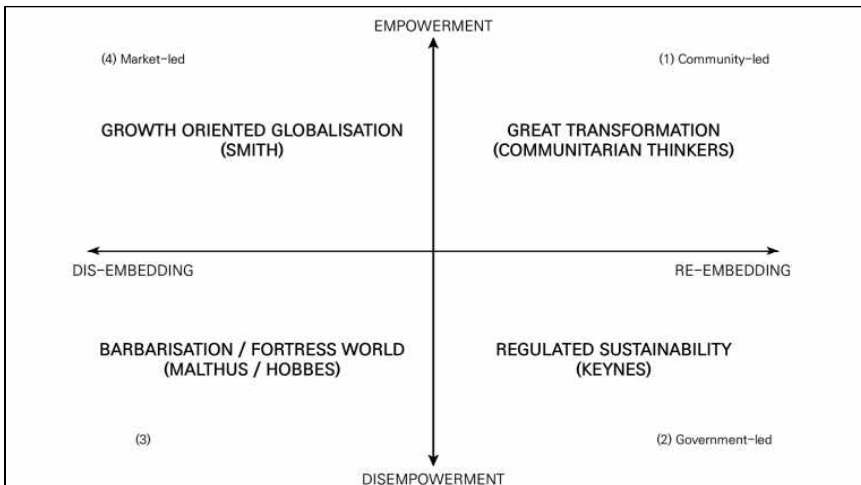


<그림 2-5> 공유경제의 세가지 핵심 요소

자료: <http://wiki.p2pfoundation.net/images/DXS-iEvWAAICK2z.jpg>

(2) 공유경제의 예상 발전의 형태

현재 공유경제의 형태가 매우 다양한 측면으로 확장되고 변화하고 있지만 공유경제의 개념적 요인을 기반으로 하여 향후 공유경제의 발전의 경로를 Codagnone etc.(2016)등은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다. 우선 Codagnone etc.(2016)는 공유경제의 주요한 차원의 기준으로 ‘경제활동의 지역적 가치’와 각 ‘개인과 조직에 부여된 권한’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내재성에 대한 재편(re-embedding)과 해체(dis-embedding)라는 극단과 권한의 부여(empowerment)와 박탈(dis-empowerment)의 극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 따라 공유경제의 예상되는 발전의 시나리오를 다음 <그림 2-6>과 같이 제시한다.



자료: Codagnone, C. etc.(2016); 한국행정연구원(2018) 재인용.

<그림 2-6> 공유경제의 예상 발전 경로

이와 같은 차원의 구분에 따르면 현재 공유경제의 예상되는 경로는 공동체중심의 거대한 변화, 정부 중심의 규제기반의 지속가능성, 시장중심의 성장지향적 세계화, 야만적 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

우선 ①야만적 단계는 공동체 해체적이며 주체들의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들은 권한이 없는 반복적인 작업들만 수행하고 직경계가 가속화되며 실업과 불평등이 증가하는 상태이다. 둘째, ②성장지향적 세계화 단계는 경제활동의 지역적 가치가 상실되므로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 형태로

주체들은 권한을 획득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단계는 시장중심 가치의 극대화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증가하고 환경문제와 지속가능성이 경제발전의 논리에 밀려나게 된다. 셋째, ③규제기반의 지속가능성은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 규제와 전통적 개입을 통해 사회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이끌고자 하여 지역적 가치의 부합성을 강조하지만 이에 따른 주체들의 권한은 약화된다. 마지막으로 ④거대한(바람직한) 변화는 가장 낙관적인 발전경로로 공유경제 운동의 이상적인 관점과 일치하며 공동체 주도적으로 개인과 주체들은 협동과 지속가능한 소비라는 새로운 가치를 내부화 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블록체인처럼 국가의 규제적 간섭을 불필요하게 되므로 지역사회 플랫폼에 의한 공공재와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게 된다.

낙관적인 입장에서, 공유경제는 공동체적 상호작용과 새로운 가치내에서 경제활동을 재통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비관적 입장에서 공유경제는 경제를 공동체로부터 분리 내지 고립화를 가속화하고 해체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한국행정연구원, 2019). 이러한 공유경제 형태의 발전단계는 일반적으로 ①야만적 단계▶②성장지향적 세계화▶③규제기반의 지속가능성▶④공동체중심의 거대한 변화 로 발전의 형태를 보이게 되며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②또는 ③의 형태로 공유경제가 확산되고 있다(Codagnone etc., 2016; 한국행정연구원, 2018).

하지만 충청남도를 비롯한 한국적 맥락에서는 공공이 주도하는 규제기반의 지속가능성 형태로 공유경제가 형성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공유경제가 자생적으로 형성되기 전에 공공적으로 육성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적 차원에서 경제활동이 재편(re-embedding)된 형태로 공유경제를 수용하는 맥락에서는 시장경제의 대안적 경제활동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정부의 주도성에서 공동체, 시민사회 및 제3섹터로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의 발전적 형태를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2) 공유경제의 유형화

(1) 공유경제의 방식에 따른 유형화

공유경제의 유형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재화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방식을 통해 구분하는 것이며 P2P, B2P, G2P방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우선 P2P방식은 개인 간 공유거래의 방식으로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이용자들을 연결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IT기반의 플랫폼이 필수적인 형태이다. 이때 플랫폼은 재화를 소유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각 주체들로부터 독립적이며 연결에 의한 중개 수수료로 이윤을 창출하는 구조이다. 현재 활동하는 공유경제기업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B2P방식은 특정 주체(개인, 사업자)의 재화를 이용자와 공유하는 방식의 공유경제활동으로 기존의 렌탈사업과 유사한 형태를 의미한다. 결국 이용자들은 개인보다 기업으로부터 자신이 요구하는 재화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며 현재 제조기반의 전통적 기업들이 B2P방식의 공유경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G2P방식은 공급자가 일반 개인 및 기업이 아니라 공공적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는 공공(정부)기관에 의해 재화가 공급되는 방식 또한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공유경제 육성을 위한 많은 국가들에서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정책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지방자치 단체와 관련 기관들이 소유한 자산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유 활동을 수행한다.

(2) 공유의 기능에 따른 유형화

공유경제 활동은 ‘공유’의 기능과 목적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며 좀 더 포괄적인 유형화를 수행할 수 있다. Codagnone & Martens(2016)는 공유경제에서 왜 공유 활동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기능과 목적에 따른 분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재화의 재활용(중고시장과 잉여제품 시장): 상업적 시장교환 행위와 함께 소규모이며 커뮤니티 기반의 물물교환, 무료교환을 위한 비상업적 플랫폼의 행위가 포함된다.

②유희자산 활용의 증진(생산 요인 시장): 대부분 공유경제의 플랫폼들이 이 유형에 해당되며 다양한 종류(상품, 지식, 재능, 노동력, 자본 등)의 유희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운영되며 협동적 생산 활동을 위한 공간공유도 포함된다.

③서비스와 노동 교환(노동시장): 본 유형에서 비상업적 형태로서 시간은행 활동과 일반 노동 시장들이 포함된다.

④생산적 자산의 공유: 다른 유형과 달리 재화의 소비보다는 생산 활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자산이나 공간의 공유를 의미하며 컴퓨터 과학기술 등 지식의 공유 및 공유된 공구나 도구를 제공하는 메이커스페이스, 공동작업장 등과 함께 전통 교육기관 기능을 대체하는 교육 플랫폼도 포함된다.

(3) 산업분야에 따른 유형화

공유경제의 유형화에는 플랫폼이 운영되는 산업의 분야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지만 분류의 목적에 따라 통합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모호하다. Pwc(2015)는 공유경제의 플랫폼 산업분야를 다음과 같은 7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러한 구분은 시기 및 지역마다 공유경제 시장에 존재하는 분야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①모빌리티 산업: 차량공유, 실시간 탑승공유, 주차장 임대, 주문형 차량 및 자전거 임대, 커뮤니티 기반 교통과 네비게이션 앱 등

②소매품 및 소비재: (가사, 스포츠 등에 사용되는)일상용품, 식품, 옷장, 쇼핑 커뮤니티, 커뮤니티 가든 등

③관광 및 호텔산업: (비)수익용 주택공유, 주택 교환, 커뮤니티 관광 서비스, 코워킹 오피스

④멀티미디어 및 통신: 온라인 음악 및 비디오 스트리밍, 무선 커뮤니티 네트워크 등

⑤재정금융분야: 커뮤니티 금융(크라우드 펀딩), C2C대출 등

⑥에너지 분야: 커뮤니티 태양열 프로젝트, 가상발전소, 풍력발전소 등

⑦인적자원분야: 온라인 지식강의, 집안일 및 출장업무 등

(4) 작동체계 및 거래방식에 따른 유형화

이외에도 공유경제는 작동체계, 거래방식과 자원, 주체 등에 따라서 유형화가 가능하다. 작동체계 측면의 유형은 크게 상품 서비스 시스템, 재분배 시장, 협력적 생활방식 세 가지 측면으로 나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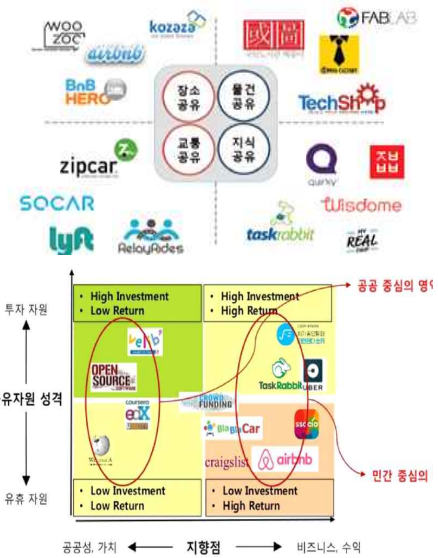
①상품서비스 시스템으로서의 공유경제는 재화나 서비스의 이용을 통해 얻게 되는 가치와 실리적 이익을 강조하는 사용중심의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②재분배 시장으로서의 공유경제는 재화나 서비스가 필요 없는 사람(또는 장소)에서 필요한 사람(장소)으로 재배치되는 이용을 말한다. ③협력적 생활방식은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를 협력적으로 소비하는 생활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작동체계 유형에 대해 다음과 같은 <표 2-4>로 정리할 수 있다.

<표 2-4> 공유경제 작동체계 세 가지 유형

제공 서비스	거래방식	공유자원
상품 서비스 시스템	• 상품의 소비보다 상품의 이용을 통한 가치 및 실리적 이익에 집중하는 사용 중심의 방식 • 개인 또는 회사가 소유한 다양한 상품을 다른 주체와 공유 하거나 대여하는 방식	자동차, 바이크, 장난감, 도서
재분배 시장	• 물물교환, 현금이나 포인트로 물품 구매 • 이용되지 않는 재화나 중고품이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되는 형태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활용, 환경문제 최소화 등의 사회적 가치가 내포	각종 의류, 무료 혹은 상품권 교환, 경매시장
협력적 생활 방식	• 공동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물건, 공간 등의 유형자산과 기술, 시간, 경험 등의 무형자산을 공유하는 유형 • 유사한 생활방식은 협력적 소비를 촉진하는 상호 작용이 되어 새로운 사회 연결망을 형성	공간, 구인·구직, 여행경험, 지식, 택시, 카풀, 클라우드 펀딩

자료: Bostman(2011), 김형균 외(2013), 경기개발연구원(2014), 조용준(2018).



<그림 2-7> 공유경제의 다양한 유형

자료: 전복연구원(2015), 수원시정연구원(2018), 경기연구원(2017), 부산연구원(2013).

거래방식으로서의 공유경제를 유형화하면 개인간 거래형, 사용자 교환형, 소유권 교환형, 소유권 제공형의 네 가지로 나뉘볼 수 있으며, 주체 측면에서는 제공과 활용주체를 기준으로 공공제공·공공활용형, 공공제공·민간활용형, 민간제공·공공활용형, 민간제공·민간활용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만약 중앙 또는 지방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공유경제를 추진할 경우, 다양한 공유경제 유형 중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공유경제 유형을 취사선택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공유경제의 쟁점

공유경제는 등장하게 된 초기 형태의 개념이나 형태에서 세계적으로 폭넓게 확장되고 공유경제 형태의 경제행위들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쟁점이 확산되고 있다. 나아가 경제활동의 범주에서 공유경제의 규모와 활동 영역이 확산됨에 따라 개인과 기업중심으로 추진되던 공유경제에 대해 정부에서도 공유경제에 대해 다양한 정책적 차원에서 고민과 활동이 시작되었다. 함창모(2018)에 따르면 공유기업에 대한 과세, 플랫폼 기업지원 여부 등의 현실적 정책처방 문제가 주요한 쟁점으로 부상했지만, 공유경제의 개념화와 가치에 대한 정책이념과 방향의 문제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쟁점들도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1) 공유경제의 개념적 쟁점

공유경제에 대한 가장 일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쟁점으로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개념적인 부분이다. 물론 최초의 공유경제 개념은 Lessig이나 Botzman이 제시한 바 있으나,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이며 공유경제를 바라보고 실행하는 관점에 따라서 상이하게 정의될 수 있고 그 스펙트럼 또한 매우 넓다. 앞서 공유경제의 개념에서도 다루었지만 커먼즈 기반의 공동체적 활동에서부터 수익 창출을 위한 플랫폼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유경제의 개념정의는 지역적 맥락과 특성 및 경제활동의 시기나 구성원들의 특징 등 다양한 환경에 따라 추구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개념을 정의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지역과 사회,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에 따라 공유경제의 포커스를 명확히 하고 개념의 분명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커먼즈(Commons), 수요기반 경제(on Demand Economy), 접근경제(Access Economy),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의 특성들을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 수단에 맞추어 개념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황영모 외, 2015; 송영현·최명식, 2020).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공유경제를 경제 및 산업적 측면에 중점을 둔 플랫폼 비즈니스의 개념으로 공유경제를 바라보고 있다.⁷⁾ 새로운 서비스산업 분야로 공유경제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활성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송영현·최명식, 2020).

7) 2019년 1월 범부처적으로 개최된 경제 활력 대책회의에서 공유경제를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자산과 서비스를 타인과 공유하여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제'로 정의하였음

이에 비해 지방정부는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공유경제를 다소 협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책방향과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유경제의 개념은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공공적 가치를 내재한 새로운 혁신활동의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사회적 가치를 내재하고 협력적 소비에 기반한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는 방향이 있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 또한 2019년에 제정된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조례'에서 공유경제를 지역사회 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9년에 발간된 '충남 공유경제 모델개발' 연구용역 또한 충남형 공유경제에 대해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신뢰에 의한 착한경제를 지향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충청남도의 공유경제 정책방향과의 부합하는 개념화를 통한 쟁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2) 공유경제의 가치적 쟁점

공유경제활동의 가치에 대한 논의는 개념적 쟁점과 연계되어 있는 영역이면서 공유경제 활동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논쟁적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최초 공유경제의 등장배경에는 유해자원에 대한 효과적 활용과 함께 관계적 활동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강조한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플랫폼을 활용한 수익창출의 도구적 개념이 확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가치의 상충성이 존재한다. 성영조 외(2016)는 공유경제와 기존 산업경제와의 차이점은 시민 중심이라는 특성이 있음에도 현재 공유경제는 거대한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글로벌 스타트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언급한다. 이처럼 민간시장의 분야에서 공유경제는 공유플랫폼을 기반으로 공급자 및 플랫폼 운영자의 수익창출을 위한 경제활동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에서는 공공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는 공유경제의 경제적 가치추구의 경향성이 높다고 판단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병행하여 강조하거나,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 환경 등 다른 가치를 핵심적인 정책가치로 선정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유경제를 2012년부터 추진한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유경제의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중시하였는데 서울시의 공유기업의 선발에서 사회적, 환경적 편익 제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표적인 공유경제의 사업으로 고령자 및 청년세대의 주거와 일자리 문제 등 사회적 문제 해결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공유의 개념을 통해 경제적 영역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하는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적 의미로 공유도시와 같은 개념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의 가치성에서 벗어나 기존 도시의 개발 패러다임이 작동하지 않는 도시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해결책으로서 사회적 변화에 기존의 제도화된 공간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의미한다. 특히 공유도시는 도시의 공간과 사회적 활동이 자본 중심에서 사회적가치 중심으로 전환, 그리고 공간상품에서 공간플랫폼으로 변화를 의미함을 강조한다(이영범, 2016).

결국 이러한 공유경제의 가치적 쟁점은 공유경제를 추구하는 기업이나 공공이 공제, 공동체, 사회 혁신 등의 어떠한 가치와 원리를 강조하고 포커싱을 하는 가를 의미하며 이러한 방향성에 따라 공유경제의 활동 방식과 내용은 매우 차이가 클 것이며 이해관계자 간 쟁점이 도출된다.

(3) 공유경제의 정책접근 방향

공유경제의 가치적 문제와 연계되어 정책대상으로서 공유경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논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전복연구원, 2019).



자료: 전복연구원(2019)

공리주의적 접근은 경제적 가치와 효용창출의 측면에 공유경제활동을 주목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공유경제를 인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 접근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공리주의적 접근은 플랫폼 중심의 접근경제 등의 영역확산을 통한 이윤창출 극대화를 도모하며 이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의 완화를 지향하기도 한다.

반대로 가치지향적 접근은 공유경제의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강조하며 이윤창출 및 수익모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향을 의미하며 신뢰와 관계적 접근에 의한 경제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고 유희자원의 효과적 재활용을 통한 경제 및 사회문제의 해결과 같은 가치적 문제를 강조한다. 이와 함께 절충현실적 접근은 공유경제의 경제적 가치와 효과를 최대화 하면서 사회적 문제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접근방법으로 정책적으로 점진적인 육성태도를 견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4) 공유경제의 기능적 영역

공유경제의 기능적 부분에서의 쟁점은 Botzman & Rogers(2010)가 구분한 상품서비스 시스템, 재분배 시장, 협력적 생활방식으로 구분되어 논의가 가능하다. 상품 서비스 시스템은 공유경제활동을 통해 상품 이용수준을 극대화하는 실리적 이윤추구에 주목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재분배 시장은 자원에 대한 필요성이 낮은 형태에서 높은 형태로 재배치하는 의미의 활동이다. 협력적 생활방식은 구성원 간 협력을 통해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회적, 환경적 편익을 제고하는 행위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활양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유경제의 기능적인 구분은 지역의 특성마다 다른 기능을 중점적으로 접근하게 되며 복수의 영역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경제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에는 상품서비스 시스템과 재분배 시스템을 강조하여 정책방향을 수립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협력적 생활방식을 강조하는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존재한다(송영현최명식, 2020). 결국 공유경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공유경제의 기능적 영역은 공유경제 정책영역의 쟁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3. 사회적경제의 이론과 의의

1) 사회적경제의 등장과 이론

(1) 사회적경제의 등장배경

사회적경제는 본래 개념적 기원에 대해 폴라니(Polany) 등의 학자들에 따르면 고대부터 경제의 작동방식에 대해 호혜성과 재분배의 기능 및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경제적 행위를 추구한 오랜 역사적 기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후 경제영역이 사회로부터 독립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된 유럽의 18세기에 사회적경제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당시의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용어는 사회적 의미에서 경제활동 및 현상이라는 다소 폭 넓은 논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의 등장은 이론적인 확립 보다는 실천적 영역으로 발생하여 확산되었다는 것이 일견 타당할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등장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시장자본주의의 경제체제에 의해 발생한 소득양극화와

인간 존엄성 훼손 등 비판에 대한 대안 경제활동으로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9세기 초기 시장 자본주의 사회의 폐단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당시에는 다양한 사상적인 패러다임과 이념적 운동들이 존재한 것이 사실이다. 장원봉(2006)은 이러한 시도들에 대해 자유주의, 기독교 연대주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적 전통으로 거론한다. 그리고 Fontan and Schragge(2006)는 19세기는 시장자본주의에 맞서 사회적 이해와 영역을 방어하려는 시도들과 새로운 시민권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어 본격적인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등장하는 시기였음을 강조한다.

특히 19세기에는 다양한 상호부조에 기반 한 결사체 조직들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정관영(2012)에 의하면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결사체 등 18-19세기 산업자본주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생활조건에 대해 취약한 사회계층들이 자조조직을 통한 대응방식이라 보고 있다. 이중 협동조합(cooperatives)은 주요 필요자인 노동자들인 조합원들의 이해를 보호하거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특정 집단의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는 시기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 연대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와 영역에서 발전해 왔다. 이와 같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 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초기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사례는 1848년 영국에서 결성된 ‘로치데일 공정선거자조합’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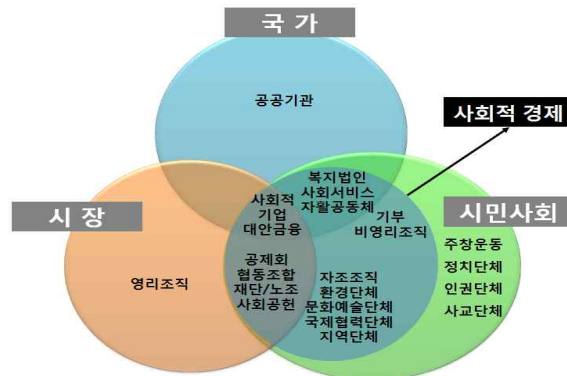
따라서 전통적 의미의 사회적경제는 일반적으로 18세기 후반부터 나타난 협동조합과 공제조합의 실험에서 출발하며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노동자들이 집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화된 형태로 볼 수 있다(고동현 외, 2016). 이처럼 자본주의의 확장 속에서 노동자를 비롯한 인간중심의 경제활동을 추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인해 19세기말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창설되고 세계적으로 협동조합, 연대경제, 공동체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의 영역이 대폭 확장되었다.

20세기 이후 복지국가의 실패와 시장자본주의의 한계를 겪으면서 현대적 의미에서 사회적경제의 영역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사회적경제의 재부상은 정부실패의 극복을 위한 사회·경제문제의 대안적인 해결책으로 제안된 것이며 이는 이전의 협동조합을 비롯한 일부 조직들의 경제활동을 넘어서 제3섹터, 시민사회의 통합적인 움직임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시기를 맞이하였다고 본다. 현재 사회적경제의 부상은 과거에 없는 새로운 개념의 등장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확대에 의해 부각된 실업,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배제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경제적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사회적경제에서 강조되는 것은 공공부문에서 제공에 한계를 갖는 지역수요의 충족과 관계재(relation goods)기반의 사회적 자본추구와 같은 활동들이 특징적이라 볼 수 있다.

(2) 사회적경제의 영역과 원리

사회적경제의 논의는 경제의 의미에 형식적 경제 이전에 실체적인 살림살이의 의미로서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실질적 경제영역을 바라보아야 함을 강조한다. 본래 사회적 경제라는 의미 자체가 경제 속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적인 의미를 강조함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자기조절 시장 경제가 주장하는 시스템에서 자기조절의 추상적 법칙성보다 과거부터 이어온 상호성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주목하며 이를 회복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결국 경제의 형식화를 벗어나 실체성 회복을 통해 사회적으로 경제적 의미에 대한 착근화를 시도하려는 것이 사회적경제의 개념적 방향으로 규정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논의들을 종합하면 경제적 행위가 사회적 관계성으로부터 배태되었으며 그것으로 포섭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이론적 경향들의 포괄적 논의라는 장원봉(2007)의 논의가 거시적 관점에서 타당하다. 특히 사회적경제의 활동 영역은 복지국가시대의 정부실패와 이후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시장실패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비국가, 비시장 영역이자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며 제3섹터인 시민사회 영역에 기반 한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은 관료제의 공공조직과 달리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적 조직이며 영리활동을 수행하지만 수익이 사회적 활동이나 조직의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되는 비영리적 운영구조를 갖추고 있다. 결국 시민사회영역과 유사한 활동범주에 속하지만 일부 국가의 공공적 활동이나 시장의 경제활동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영역적 자리매김을 다음 <그림 2-8> 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림 2-8> 섹터별 영역에서 사회적경제의 위치

또한 사회적경제의 경제활동 원리는 시장에서 거래 및 교환관계와는 다른 이기적 개인 간 관계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와 상호의존성에 기반 한 사회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호혜성에 기반 하여 신뢰와 협력의 활동을 확대하고 경제영역을 형성하는 것이 시장경제와는 다른 차별적인 원리라 볼 수 있다. 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기적 행위에 따른 경쟁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최고의 목표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의 원리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표 2-5〉 사회적경제의 원리

	인간의 본성	상호작용의 기제	가치(목표)
시장경제 (시장)	이기성 (homo economicus)	경쟁 (등가교환)	효율성
공공경제 (국가)	공공성 (homo publicus)	합의 (민주주의)	평등
사회적경제 (공동체)	호혜성 (homo reciprocans)	신뢰와 협동 (공정성)	연대
생태경제 (자연)	공생 (homo symbiosis)	지속가능성	공존

2)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의의

(1) 사회적경제의 등장배경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일반적으로 현재 통용되는 사회적경제의 등장배경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자유주의에 기반 한 시장자본주의의 경제체제가 사회를 지배하면서 발생한 소득양극화와 인간 존엄성 훼손 등의 한계와 문제점의 대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초기 자본주의는 근대 중상주의 정책의 확산으로 시민들의 노동을 비롯한 사회적인 가치보다는 국가의 경쟁적인 생산과 부의 축적만을 목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장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면서 시장의 영리성에 노출된 개인과 공동체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등장하였는데, 대표적으로 개인 및 집단 간 자조성을 기반으로 협동과 연대의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동조합의 형태를 거론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정신에 기반 한 상호부조의 전통은 17세기 영국의 머니박스(money box)⁸⁾에서 기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18세기 공식적인 공제조합 형태로 발전하면서 보험회사의 모체가 되었다(이은선이현지, 2017). 19세기에는 다양한 상호부조에 기반 한 결사체 조직들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정관영(2012)에 의하면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결사체 등 18-19세기 산업자본주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생활조건에 대해 취약한 사회계층들이 자조조직을 통한 대응방식이라 보고 있다. 이 중 상호공제조합(mutual aid society)의 경우 19세기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의 개입으로 강제적 사회보험이 도입되면서 쇠퇴한 면이 있으나 협동조합(cooperatives)은 주요 필요자인 노동자들로인 조합원들의 이해를 보호하거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특정 집단의 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는 시기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 연대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와 영역에서 발전해 왔다. 정관영(2012)에 따르면 이러한 협동조합 운동은 노동운동의 발전과 그 맥을 함께 해 왔으며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자조조직으로서 내부적 기능뿐만 아니라 공장 임노동자들의 정치 경제적 투쟁에 협동조합이 함께 함으로써 정치적 권리를 확보하고 조합원과 조직의 규모는 확대되었다고 보았다.

(2)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특성

사회적경제는 본래 개념적 기원을 추적하면 Polany(1961) 등의 학자들에 따르면 고대부터 경제의 작동방식에 대해 호혜성과 재분배의 기능 및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경제적 행위를 추구한 오랜 역사적 기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근대적 자유주의 이후 발생한 시장자본주의의 영역으로 살펴본다면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의 고도화와 함께 발생한 공동체적, 사회적 가치의 손실과 이에 따른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경제활동으로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대안적 의미의 경제활동으로 촉발된 사회적경제의 등장은 이론적인 확립보다는 실천적 영역으로 발생하여 확산되었다는 것이 일견 타당할 것이다. 19세기 초기의 사회적경제는 시장의 영리성에 매몰된 개인과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고 이해를 보호 및 촉진하기 위한 생산 및 소비 활동을 의미하고 이를 촉진하고자 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중심이

8) 노동자 계급이 탄생하고 산업화가 진행되던 시기 영국에서 지역단위로 동일업종 노동자들이 선술집에서 친목을 도모하고 자발적으로 소액의 돈을 상자에 넣어 구성원 중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위로금으로 전달했던 상호부조의 문화

된 협동조합, 공제조합과 같은 조직화된 소비, 생산조직을 통한 자조적인 경제활동이 산업사회에서 주류를 형성한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보다 근원적 개념과 이론에 대한 탐구는 Polany(1961)의 논의를 통해 거론되고 있다. Polany(1961)는 사회적 경제라는 의미 자체가 경제 속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적인 의미를 강조함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자기조절 시장경제가 주장하는 시스템에서 자기조절의 추상적 법칙성보다 과거부터 이어온 상호성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주목하며 이를 회복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결국 경제의 형식화를 벗어나 실체성 회복을 통해 사회적으로 경제적 의미에 대한 착근화를 시도하려는 것이 사회적경제의 개념적 방향으로 규정할 수 있다.

Polany(1961)가 주목한 것은 경제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의미의 탐구였으며 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본래적으로 사회에 착근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라는 의미 또한 근대성의 자유주의적 산물이 아니라 상호주관성에 기반 한 관계성의 의미와 함께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주체성에 대한 본래적 의미의 회복이기도 하다. 결국 이러한 폴라니에 의한 경제의 의미는 인간의 상호성과 공동체적 가치에 기반 하여 본래적인 인간의 살림살이 충족을 위한 실체적인 경제활동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는 이러한 경제라는 용어가 상실한 사회적인 가치와 의미를 복원하여 돈벌이보다 인간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구현함을 의미하고 다시 사회, 생태, 인간의 가치에 착근된 경제적 의미로 회복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에 기반 한 사회적경제의 개념화는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우선 Lukkariinen(2005)의 경우 회원들의 욕구에 기초해 회원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람 중심의 조직과 기업이며 사회적경제의 목표는 사회적, 민주적, 연대에 기초한 목표들이라 보았다. 보다 구체적인 개념정의로 Defourney(1999)는 사회적경제에 대해 협동조합, 공제회, 결사체들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민주적 결정과정, 자율적인 운영, 공동체 우선 이윤배분,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 우선의 원칙에 기초하는 경제활동이라 규정한다. 원칙중심의 개념정의로 김경희(2013)는 자본의 가치보다는 사람의 가치를, 경쟁보다는 협동과 연대를, 개인 우선보다는 사회적 목적과 공동체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를 판통하는 원칙으로 보았다. 또한 정건화(2012)는 인간의 자존과 자조의 가치, 공동체의 복원과 공공성의 증진에 기여함에 따라 사회적 정의를 지향하는 경제 구조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하는 사회적 의미를 개념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개념적 특성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면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자율적인 운영과 공동체 및 지역사회의 가치를 우선하는 내용과 함께 자본보다는 사람중심의 참여적이고

민주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목적의 특성들이 공통적으로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를 규정하는 공통적인 가치들은 사회적경제의 대표적인 조직형태인 협동조합의 원칙에 기반 하여 보편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협동과 상호성이라는 조정의 메커니즘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주체들 간의 상호성을 토대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을 강조하기 때문에 구성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이 형성된다(주성수, 2017).

〈표 2-6〉 ICA 협동조합 원칙의 변화

	1937년 원칙	1966년 원칙	1995년 원칙
기본적 필수 원칙	문화의 개방	공개와 개방 원칙	자발적 공개적 조직
	민주적 운영(1인1표)	민주적 관리 원칙	민주적 조합원 관리
	이용고에 따른 잉여금 배당	잉여금 분배원칙	조합원의 경제 참여
	출자금 이자 제한 원칙	출자금 이자 제한 원칙	조합원에 의한 자율과 독립
시대적 변화 원칙	정치적 종교적 중립	교육촉진의 원칙	교육 훈련 및 홍보의 활동
	현금거래	협동조합 간 협동 원칙	협동조합 간 협동 원칙
	교육의 촉진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노력

자료: 김기섭(2012).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조직형태인 협동조합의 정의에 대해 국제협동조합협의회(ICA)는 다음과 같이 거론한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그들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를 말한다.” 이 협동조합의 정의에서 공동소유 및 민주적 운영의 가치와 자발성에 기반 한 운영과 참여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에 따른 기업의 운영방식과 원리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흡수되어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의 개념화는 이러한 기업들이 추구하는 목적, 즉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사회적 목적들을 검토함으로써 다음의 구체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Quarter, 1992; Defourney & Nyssen, 2008; 주성수, 2009; 고동현 외, 2016).

- ①비영리성으로 경제적 목적이 우선하고 수익활동은 사회적 목적달성에 한정한다.
- ②민주성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종사자 및 이용자의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 ③지역지향성으로 공동체성을 강조하며 구성원들의 참여에 의한 지역의 합목적적 행위를 수반한다는 점이다.
- ④인간의 가치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자본주의의 이윤보다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인간 중심의 경제활동을 형성함을 의미한다.
- ⑤기업가적 가치로 국가 및 기업의 지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노력과 혁신적 행위를 추구하여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가정신에 기반 한다는 것이다.

(3) 사회적경제의 의의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의 역사 또한 최근에 시작한 것이 아니며 19세기 이후 자본주의에 따른 한계와 폐해의 극복을 위한 대안의 움직임으로 자리매김해온 것이 사실이다. 결국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경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대안의 형태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다 건강한 자본주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에 보다 본질적인 역할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경제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사회적경제는 현재 생산의 역량은 갖추고 있으나 영리활동에서 배제된 구성원들도 경제 질서로 복귀하여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와 궁극적으로 지역 및 국가경제에 기여한다. 둘째로 사회적경제는 본질적인 속성상 신뢰와 네트워크 같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확대한다. 보다 성숙한 사회의 형성과 효과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역할은 서구에서 이미 강조되었으며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셋째로, 사회적경제는 소속 구성원들과 함께 연대의식과 소속감, 공감에 의한 배려 등의 공동체적인 의미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윤창출을 위한 경쟁관계의 관점에서 구성원을 바라보는 경제적 인간관이 비해 경제활동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태와 열정 및 적극성을 부여한다. 경제활동에서 이윤추구를 위한 경쟁관계적 요인의 측면이 있다면, 사회적경제의 배려와 공감에 의한 협력적 관계의 추구의 원리가 존재할 때 보다 다양하고 건강한 자본주의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사회적경제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국가의 복지업무를

민간차원에서 담당하고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복지지출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정부에서 모두 수행하고 부담하기 불가능한 미세한 영역에 까지 사회복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나아가 영리 활동에서 배제된 사람들에 대한 복지지출이 줄어들고 이들 스스로 사회적경제에 의해 연대와 협력의 형태로 경제활동을 수행하게 된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감소하고 소득이 발생하고 고용이 확대되어 지역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의 확장은 경제적으로도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3) 사회적경제의 한계와 쟁점

사회적경제조직 또한 현재 우리사회의 시장경제 범위에서 활동하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조직 및 기업들의 경영을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적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거대기업에 맞서 관계의 힘으로 연대와 협력적 방식을 추구하지만 주체들의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적 성과와 경영역량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일정 수준의 정치적, 경제적 수준에 오른 사회에서 이러한 제3섹터의 역할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개발도상국 사회의 경우는 정부와 시장의 기능적 한계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가 크고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 형태의 기업들이 이들에게 수행할 수 있는 사업영역이 넓다. 하지만 우리사회처럼 발전된 국가의 형태에서는 전기, 물, 교통, 보건위생, 복지 등 대부분 사회적 수요는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사회와 같은 발전된 국가에서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주로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기 힘든 문제(Wicked Problem)가 수행할 수 있는 영역으로 주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영역이 대부분이며 경영의 지속성조차 담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라준영, 2016).

이에 따라 유럽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의 태동 국가에서도 시장실패 이후 시민사회와 결합하여 정책적 지원을 통해 활동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IMF이후 사회적 일자리에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시작되면서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행정적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효과적인 정책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인증을 받은 조직만이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 운영되었다. 협동조합은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자유

로운 신고에 따라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 정부지원의 조직들은 인증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조직은 지나친 공공기반 중심의 운영형태를 보이는 양상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수행하는 영역의 경우 전통적으로 정부의 행정서비스 영역이었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의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고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대부분 영세하여 효율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성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한계가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인재, 2014; 김성기, 2014)의 논의처럼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이 정부 일자리 지원의 의존하는 사업모델로 정착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정부지원 종료기간까지 기존 인력 수용정도의 수익창출 역량을 갖추는 경우는 흔치 않음을 통계분석결과를 통해 논증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정부 정책지원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의 양적 성장의 효과에는 동의하지만 질적성장에는 미흡하였고 이를 위해 정부 직접지원에서 생태계 형성 관점의 전환에 대한 부족함을 다수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다(이승마박서윤, 2018; 김형돈, 2019). 따라서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의 한계를 통한 쟁점은 사회적경제활동의 본질적인 목적인 사회적가치 활동을 추구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적 성과 창출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는 그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회적가치와 목적활동을 수행하면서 다른 경제조직과는 다른 영역 및 방식을 통해 활동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상호보완 중심의 연계성과 분석틀

1)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연계성 검토

(1) 공유경제의 사회적 가치의 논의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개념적 연관성에 대한 시각은 경제활동의 사회적가치 추구라는 공통점을 통해 구성된다. 공유경제의 개념과 등장의 배경은 전통적 경제활동에 대한 한계극복을 위한 대안의 움직임에서 시작되었다는데서 의의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전통경제와 공유경제의 이념과 가치를 비교하면 기본적으로 20세기는 과잉소비의 시대, 21세기는 협력적 소비의 시대로 규정할 수 있으며 과잉소비는 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한편, 협력적 소비는 공유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다(김점산 외, 2014).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전통상업경제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자원배분의 중요한 판단기준이지만 공유경제는 비 가격적 매커니즘의 사회적 관계의 역할이 이를 대신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행위의 방식은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주목받았는데 저장장시기에 유휴자산의 낮은 활용과 재인식의 필요성에 대해 공유경제 활동의 중요한 계기를 상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공유경제 부상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미 사용되거나 과소 사용되는 자원을 함께 나눠 쓰는 것으로서, 이러한 자원공유가 확산될 경우 환경파괴 만이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이나 사회양극화 또한 완화될 것이라는 관점에 주목해야 한다(박건철·이상돈, 2016; 이상호, 2019).

공유경제 개념의 유형적 구분을 통해 사회적 동기에 의한 공유경제의 방향을 제시한 대표적인 논의는 Benkler(2016)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Benkler(2016)에 의하면 공유경제는 가격체계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적 공유의 원리를 기반으로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것이며 이를 사회적 동기에 따른 제3의 경제영역을 추구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공유경제를 이윤 극대화를 위한 장치로 활용하는 것을 자원의 원천을 고갈시키는 수탈형이라고 본 반면, 공동체 및 사회적 동기에 의해 작동되는 공유경제는 자원의 원천을 보존, 재생산, 증식시키는 창조형이라 규정한다(Bauwens & Pantazis, 2018). 따라서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대표적인 공유경제 기업으로 고려되는 사례들은 공유에 대해 가격체계에 기반을 둔 수익창출 기회라는 맥락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수탈형의 공유경제라 볼 수 있으며 Benkler(2016)의 시각에 의하면 접근경제, 플랫폼경제처럼 공유경제와는 다른 용어와 규정이 필요한 영역이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유경제의 개념은 Lessig(2008)에 의해 구체적으로 처음 제시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Lessig(2008)은 화폐와 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상업경제와 대비하여 가격보다 우정, 신뢰와 같은 사회적 관계들의 집합에 의해 규제되는 경제를 공유경제라고 본다. 이러한 개념은 Benkler(2004)가 비시장적 경제개념에서 사회관계를 핵심이라 본 것과 일맥상통한다. Benkler(2004)는 공유경제의 역할에 대해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네트워크의 정보경제로 전환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유경제의 형태는 소유전략에서 분산된 형태의 협력, 조정행위를 주요한 특징으로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Benkler의 공유경제 개념은 서로 협력하면서 어느 누구도 배타적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자원공유에 기초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느슨하게 연결된 개인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제 기반 동료생산(CBPP)’에 토대하고 있다(이상호, 2019). 이와 같은 방향에 의하면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주문형 경제시스템은 이러한 동기 없이 순수한 수익창출과 이윤 극대화가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에 공유경제의 원칙을 담고 있지 못하다(Benkler, 2016). 따라서 전통적 소유경제가 정보, 지식, 문화 확보에 높은 자본비용이 필요했다면 공유경제는 정보, 문화의 소통이 탈 집중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비용부담 또한 사회에 폭넓게 분산된다. 이는 공유경제는 협력과 공유의 양식 뿐만 아니라 동조적 공존과 포용의 양식에도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이상호, 2019).

결국 이러한 논의의 맥락에서 공유경제는 지역사회의 공유제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배타적 소유권과 협력적 소비를 강조하며 분산된 네트워크의 관계적 측면을 강조하게 된다. 따라서 공유경제는 자원의 공유와 사회적 신뢰 및 공동체적 덕성에 기초한 동기로 형성되는 경제행위이며 활동의 중요한 속성은 이에 기초한 협력적 속성이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공유경제의 관점에 따르면 라준영(2014)이 언급한 바처럼 공유경제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비즈니스활동에 내재된 모델이라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와 지향점을 공유한다. 송영현(2019)의 연구에 따르면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가치 추구를 매우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공유경제의 개념이 앞서 소개한 바처럼 매우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사회적 의미와 가치에 주목하는 ‘충남형 공유경제’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공유경제의 사회적, 비영리적 활동의 정의에 주목하여 사회적경제와의 접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공유경제의 영리와 비영리성

공유경제의 선행연구들에서는 공유활동 목적의 영리추구성에 따라 영리 공유경제와 비영리 공유경제로 구분하는 시도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민화(2018)는 공유경제에 대해 기회를 공유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시장경제형 공유경제를 영리 공유경제(Sharing Economy), 결과를 공유하며 커뮤니티 내에서 비영리적 목적(포용성, 사회적 신뢰 등)을 추구하는 커뮤니티 기반(Community-Based) 공유경제를 비영리 공유경제(Shared Economy)로 규정한다.

영리 공유경제는 대부분 영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급자와 소비자를 매개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하고 비영리 공유경제는 근본적으로 제품과 자본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사회적 유대감, 네트워크와 신뢰의 관계재를 강조하는 모델이다. 이는 위에서 거론한 수탈형과 창조형의 공유경제의 형태이기도 하며 공유활동의 동기에 따라 이기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로 연결 지을 수 있다. 이러한 차원은 Botsman & Rogers(2010)가 강조한 바 처럼 비영리적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 활동은 근본적으로 제품과 자본이 아니라 개인 간 신뢰와 상호작용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비영리형 공유경제 특성은 Benkler(2016)가 제시한 공유재 기반 동료생산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핵심은 사회적 동기를 추구하는 경제행위의 가치와 결과를 의미하는 동시에 사회적 관계와 참여에 의한 매커니즘과 함께 성과를 공유하는 탈집중화의 원리로 구성된다(이상호, 2019). 결국 사회적경제는 전지훈(2015)의 견해처럼, 구성원 간 상호연대와 협력활동을 기반으로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대안적 경제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활동은 비영리 공유경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경제 경제활동의 범위는 사회적 가치에 기반 한 비영리적 공유경제 활동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활동 주체들 또한 비영리 공유경제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개념적 연관성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개념적 연관성은 앞서 살펴본 두 영역 간 추구하는 사회적가치에 대한 부합성의 활동으로 살펴볼 수 있다. 공유경제의 본질적 가치에서 도출한 사회적가치의 요인들에 대한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사회적가치의 요인들 간에 합치되는 연관성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통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연관성의 요인들은 다음 <그림 2-9>와 같다.



<그림 2-9>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개념적 연관성

우선 공유경제가 내재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요인으로는 앞서 이론적 개념의 논의를 통해 5가지로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공유경제가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으로 대량생산과 저성장으로 인한 유희자원의 효과적인 재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점으로 환경적이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부상한 점이 있다.

둘째, 소유기반의 전통적 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가격 매커니즘으로 경제활동이 영위된다. 하지만

공유경제는 Lessig(2008)이 제시한 바치럽 플랫폼에 의해 연결된 주체들 간의 관계와 신뢰, 평판 등의 비 가격적 매커니즘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요인을 강조할 수 밖에 없으며 사회적 신뢰와 상호교류의 가치를 주목한다.

셋째, 참여기회와 접근성 향상의 요인으로 공유경제는 디지털기술과 플랫폼으로 인해 다양한 구성원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접근경제라는 유사개념으로 불릴 정도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전통적 경제행위에서는 소유를 통한 경제활동의 참여와 접근이 가능했다면 공유경제로 인해 경제활동 진입과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효용이 확대되는 가치가 존재한다. 이에 Olson & Kemp(2015)는 공유경제는 좀 더 낮은 비용으로 이윤을 산출하려는 개인들에 의해 창조된 현상으로 정의하며 Benkler(2004)는 정보와 소통일 탈집중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져 비용 부담은 사회에 폭넓게 분산된다고 주장한다.

넷째, 사회적 동기에 의한 협력 요인으로 공유경제가 접근경제나 플랫폼 경제와 구분되는 것으로는 이들의 무가치적인 이윤추구활동과 달리 공유경제는 사회적 동기에 따라 자원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구성원들 간의 참여와 협력의 구조를 만들어 낸다. 구체적으로 Benkler(2016)는 공유경제의 특징으로 언급한 사회적 동기는 시민적 덕성(virtue)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위한 자원의 공유활동과 함께 이들로 인한 소비자들을 적극적 이용자들로 변모시켜 연계와 협력의 주도적 활동을 이끌어내는 형태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는 공유혜택과 편익의 확대로 플랫폼으로 인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유활동은 공급자와 이용자의 연결에서 나아가 공유서비스로 인한 혜택과 편익까지 공유할 수 있는 확대 재생산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주문형 경제시스템의 공유경제활동은 외형상 자원공유의 형태를 보이지만 경영의 목표는 사회적 동기가 아닌 영리와 수익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시장의 위험성은 피고용인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갖게 된다. 이러한 주문형 경제의 한계와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의 협동조합적 형태를 통해 경제적 이익과 가치의 부담을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상호, 2019).

이와 같은 공유경제가 추구하는 사회적가치에 부합하는 5가지 요인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5가지 특징에 대해 사회적 가치의 측면에서 부합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의 목적처럼 주민 및 구성원들의 공동의 욕구와 수요를 충족하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방식으로는 구성원 및 다른 사회적 목적 조직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비롯한 호혜적 관계에 기반 한다. 또한 자산의 공유와 함께 경제적 활동으로 인한 성과와 이익에 대해 소수가

독점하지 않고 공유한다. 그리고 구성원만의 이익에 몰두하지 않고 조직이 속한 공동체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며 조직 내부에서는 민주주의 의사소통과 고용과 노동의 질을 높이는 것을 지향하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공유경제가 내재하는 사회적 가치가 사회적경제의 특징과 개념과 부합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개념적 연관성을 구성할 수 있다.

2) 상호보완성 기반의 연계 방향

(1)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상호보완성

본 연구는 충남에서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방안을 살펴보고자 하며 상호보완적인 관계는 앞서 살펴본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한계와 쟁점들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연계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공유경제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 주체의 연계를 통해 상품의 이용수준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경제활동의 방식을 추구함을 의미한다. 특히 현재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다양한 상호작용과 신뢰기반의 관계성을 통해 거래비용을 낮추어 수요자 중심의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유경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현대 경제생산과 소비방식으로 인한 유희자원 처리와 함께 저성장시대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요구 등의 대안적 흐름의 요청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공유경제의 쟁점의 측면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기된다. 우선 현재 공유경제의 활동에 대한 인식은 본래의 목적보다 소수의 기업들이 플랫폼 구축을 통해 재화와 이용자를 독점하여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주요부문의 공유경제 활동도 거대한 벤처캐피탈에서 투자받은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들이 영리활동 주도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공유경제의 영리적 추구 극대화는 새로운 재화에 대한 이용권의 독점화와 깃 이코노미(Gig Economy) 형태의 초단기 계약 근로자 양산과 확대와 이에 따른 근로조건의 악화도 제기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유경제에 대한 시각은 현재의 코로나19 상황과도 맞물려 침체되는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 극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유희자원의 효과적 활용과 이를 위한 협력적 형태의 소비활동인 공유경제 본연의 '사회적 가치'에 천착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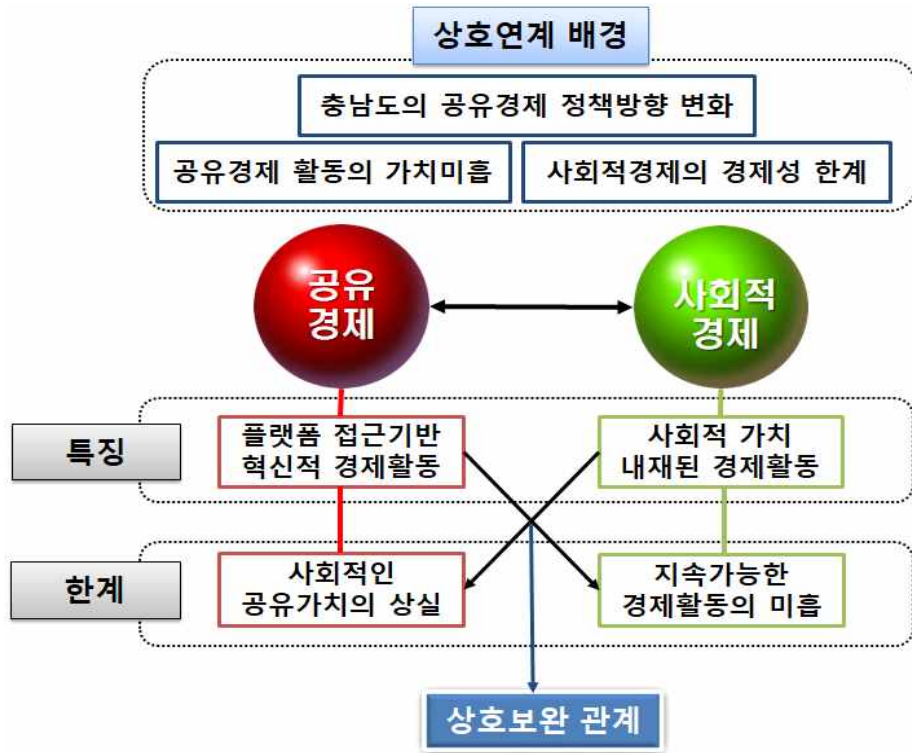
사회적경제의 특징은 시장경제의 영리추구활동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된 주체들 또한 경제활동을

추구할 수 있게 하여 결과적으로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의 줄이며 이를 위해 연대와 협력의 사회관계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제활동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사회적경제의 활동은 경제활동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과 함께 저 출산고령화 및 인구절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경제활동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경제는 인간의 경제활동 자체가 이기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순수영리추구만 의존하거나 결정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인간관을 추구하며 기본적으로 구성원 간 관계에 의한 협력과 신뢰를 추구하는 본성이 기반 한 경제활동을 지향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에서 경제활동의 근본적인 목적이 자본에 대한 이윤 창출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행복과 사회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상호보완관계에 의한 분석틀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상호보완성에 의한 연계방안은 다음 그림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앞서 현재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특징 및 쟁점들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상호보완 관계의 필요성에 대해 도출하였다. 상호간의 쟁점은 공유경제는 최초 등장배경이었던 공유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상실로 종합할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는 경제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정부 재정지원에 종속되는 경제적 성과의 한계로 귀결된다.

이와 같은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보완관계는 앞서 분석한 상호간 개념적 연관성에 기반 하여 도출될 수 있다. 공공적 차원에서 공유경제가 사회적경제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를 내재한다는 점에서 이 둘간의 개념적 연관성이 구성될 수 있으며 개념적 연관성에 토대하여 정책적인 상호보완관계의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는 경제활동의 방식은 다르지만 앞서 살펴본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경제적 성과와 이윤창출이 함께 요구된다는 하이브리드적 속성도 공통적인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장에서 사회적 가치의 장점을 갖고 있는 사회적경제와 정보기술 및 플랫폼 기반의 경제적 방식에 장점을 갖고 있는 공유경제가 상호보완의 관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림 2-10>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상호보완관계

제3장 정책과 현황 분석

1. 제도적 현황

1)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현황

(1) 공유경제의 제도적 현황

정부는 2010년대 이후 공유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으며, 최근 종합적인 정책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2010년대 초반 이후 국토교통부의 ‘쉐어주택’ 마련 사업을 시작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유공간’ 마련 등의 공유경제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 시기까지의 공유경제 관련 정책은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되어 왔으며, 공유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2016년 이후 공유경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2016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숙박, 금융, 차량 등 여러 공유경제 분야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단순히 정책사업만 제시된 것이 아니라, 공유경제와 관련된 법제도 기반을 정비하고 기존 사업영역의 이해관계자와 충돌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9년에 진행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보다 발전된 형태의 종합대책이 제시되었다. 숙박, 교통, 공간, 금융, 지식 등 제 분야 지원책이 마련되었으며, 관련된 법제도 기반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유경제와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과세, 참여자 보호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앞서 2018년 3월에는 「공유경제기본법」이 발의되었다. 전반적인 공유경제 관리·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결국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으며, 이는 공유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충돌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자료: 송영현 외(2019)

〈그림 3-1〉 시기별 정부 공유경제 정책방향

한편 중앙정부 외에도, 국내 지자체들 역시 공유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0년대 초반 서울에서 최초로 공유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부산, 광주, 경기, 전남, 전북, 충남 등 지자체에서도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전국 11개의 광역 지자체가 15개의 관련 조례를, 58개 기초지자체가 61개의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공유경제 정책을 최초로 시행한 서울시의 경우, 시 차원에서 2개의 조례를, 구 차원에서 강남구를 제외한 25개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다. 서울시의 공유경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충남의 경우, 2019년 9월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공유경제를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산하 시군 중에서는 아산시가 2개의 관련 조례를 마련한 상황이며, 기타 시군은 아직 공유경제와 관련된 제도적 기틀 마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표 3-1〉 지자체 공유경제 조례제정 현황(2019.4)

(단위 : 개)

광역지자체			산하 기초지자체	
분야	조례수	내용	조례수	내용
서울	2	-공유경제 일반(2017) -지식공유(2017)	25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24개 : 공유경제 일반), 은평구(1개 : 물품공유센터 설치·운영) ※ 강남구는 관련 조례 미제정
부산	1	공유경제 일반(2015)	10	기장군, 남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10개 : 공유경제 일반)
대구	1	공유경제 일반(2015)	0	-
인천	1	공유경제 일반(2017)	0	-
광주	2	-공유경제 일반(2017) -차량공유(2017)	6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5개 : 공유경제 일반) 서구(1개 : 물품공유)
대전	1	공유경제 일반(2018)	0	-
경기	3	-공유경제 일반(2014) -차량공유(2018) -공유농업(2018)	11	구리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평택시(6개 : 공유경제 일반)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양평군(4개 : 차량공유) 광명시(1개 : 공유농업)
충북	0	-	1	충주시(1개 : 공유경제 일반)
충남	1	※조례 발의 및 본회의 통과(2019.9)	2	아산시(2개 : 공유경제 일반, 주차장)
전북	1	공유경제 일반(2017)	2	완주군, 전주시(2개 : 공유경제 일반)
전남	1	공유경제 일반(2018)	1	여수시(1개 : 공유경제 일반)
경남	0	-	3	양산시, 거창군(2개 : 공유경제 일반) 거제시(1개 : 차량공유)
제주	1	차량공유(2016)	0	-
강원	0	-	0	-
세종	0	-	0	-
울산	0	-	0	-
경북	0	-	0	-
총계	15	-	61	-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2)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현황

국내에서 사회적경제영역의 발단은 협동조합의 기원에서부터 추적하면 일제시대의 민족수탈 과정에서 소비조합의 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현대적 흐름으로 본다면 지역빈민운동(생산공동체 운동)으로 뿌리를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오단이, 2013). 특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의 주체들은 실업률 상승, 사회 양극화 등 경제성장의 한계와 사회적 문제의 확장을 목도하는 현 시점에서 효과적인 대안으로 인식되어 공공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현대적 형태의 사회적경제는 1958년 이찬갑이 홍성에 풀무학교를 설립하고 소비조합 구판장을 개설하면서 형성된 홍성 풀무생협이라고 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관심으로 인해 자활지원센터의 운영 사업이 실시되었고 이는 사회적 경제활동이 제도적으로 편입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극복을 위한 공공 근로사업과 이를 통한 생산적 복지 정책방향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역할이 취약 계층의 고용증진이라는 방향에 무게중심을 두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2003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 진행되고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을 통한 공식적인 사회적경제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국내에서 사회적경제 흐름의 궤적을 쫓으면 정부정책과의 긴밀한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공공영역의 정부정책에 대한 대안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정관영(2013)이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시민사회 영역의 자율적인 출발보다 정부지원에 의해 육성되어 왔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정부의 영향은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 찾아보기 힘든 국내의 특수성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양적 확대에 집중된 결과 국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한 활동에 많은 한계를 노정하였다는 비판적 시각이 공존한다.

정부의 지원을 근거하는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거론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이듬해 1월 3일 법률 제8217호로 공포되었고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본 법률로 인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구성과 기본계획의 수립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증요건을 갖추고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 하지만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후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에 제정되었는데,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우리나라에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몇 가지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개별 법률에 의거하여 그 분야에서 활동해왔다.⁹⁾ 2012년 이전에 8개 제외한 협동조합 설립을 불가능하였지만 2012년 이후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이 협동조합기본법의 가장 큰 의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부분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국제표준인 ICA의 원칙을 반영하고자, 지속가능한 운영제도(출자배당 10%이내, 이용액 배당우선, 법정 적립금 10%이상 등), 사회적 성격(투기행위 금지, 조합원 이용 원칙)과 같은 요인들을 반영하였다(김두년, 2012).

가장 원론적인 법률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제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논의는 19대 총선과 대선기간 동안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정책공약 요구사항으로 등장하였다. 여당과 야당 모두 논의되었지만 보수진영의 반대로 결국 폐기되었다. 또한 2016년 20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에 의해 다시 발의되었으나 2020년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또 다시 폐기되었다.

2) 중앙정부의 정책지원 현황

(1) 공유경제의 정책지원 현황

우리나라에서 공유경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정부가 2016년 2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공유경제를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부터이다. 정부의 공유 경제 시범사업 추진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충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균형적 접근이었다. 이와 함께 사업영역분야에서 정부의 가장 관심있는 영역은 시장의 요구가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숙박공유와 차량공유, 금융공유 부분에 집중되었으며

9) 국가의 산업정책적 수요와 민간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법 제정 추진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필요에 따라 개별 협동조합을 규정하는 법률들을 만들어왔으며 이는 농업협동조합법(1957),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61), 수산업협동조합법(1961), 연업초생산협동조합법(1963), 신용협동조합법(1972), 산림조합법(1980), 새마을금고법(198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1999)이 있다(기획재정부, 2012).

2017년도에는 주차장공유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8년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계획발표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였고 2019년 1월 정부는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였고 이는 아래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정부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정부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은 숙박, 교통, 공간, 금융지식 등의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들과 함께 과세체계, 혁신지원 등의 공유경제 제도적 기반마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숙박공유는 국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내국인 대상 도시지역 내 주택의 유휴공간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 허용을 추진하였고 기존 숙박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기존 업계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교통분야는 규제 및 제도정비에 주로 정책적 관심을 보였는데, 국내 서비스 허용범위가 불명확하고 관련 규제제도가 미비하여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불편을 갖고 있었다. 교통 분야는 크게 카셰어링의 활성화와 전세 및 노선버스 공유를 위한 교통 Online to Offline서비스 활성화 및 승차공유의 사회적 대타협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금융 및 지식분야에서는 자금공유, 지식공유 등 다양한 분야의 자원공유를 확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P2P 대출 추자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인하, P2P 대출 투자자보호 강화,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온라인 지식공유 플랫폼 K-Mooc를 통한 재능공급 촉진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최근에는 공유경제 관련하여 공간공유(주거, 사무공간, 주차장, 공공시설, 유희공간), 물품공유, 지식과 정보공유의 영역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정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이와 함께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정부는 과세체계의 정비, 공급자와 소비자 보호, 공유경제기업 혁신지원의 측면에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과세체계 정비를 위해 관련 과세기준 마련, 공유경제 납세 가이드라인의 제시를 비롯해 공급자 이용자를 위한 산재보험 확대, 산재보험 부과 및 징수체계 구축과 카셰어링 등 서비스 공급자가 별도 신고 없이 전자상거래 가능하도록 신고의무 부담 완화 등의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한국행정연구원, 2018).

이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유경제의 정책추진의 방향은 서비스의 새로운 시장개척의 차원에서 공유경제 활동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로 공유경제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적 기반의 마련과 규제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의 도입을 위해 정책적인 관리와 제도적 규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활동은 다양한 공유경제 영역의 활성화 정책개발 시행보다는 거시적 측면에서 법제도적의 공유경제 정착을 위한 방안들의 마련에 국한되어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2) 사회적경제의 정책지원 현황

국내에서 사회적경제 조직형태에 따른 관리 및 지원부서를 정리하며 다음 <표 3-2>와 같다.

<표 3-2> 국내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기반

조직형태	관련 법제도	주무부처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기획재정부	
마을기업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없음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건복지부	중앙자활센터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지원정책은 지역 차원에서는 광역 및 기초단위의 중간지원조직(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형태로 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광역과 기초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정부의 정책실행과 함께 자체적인 사회적경제 육성사업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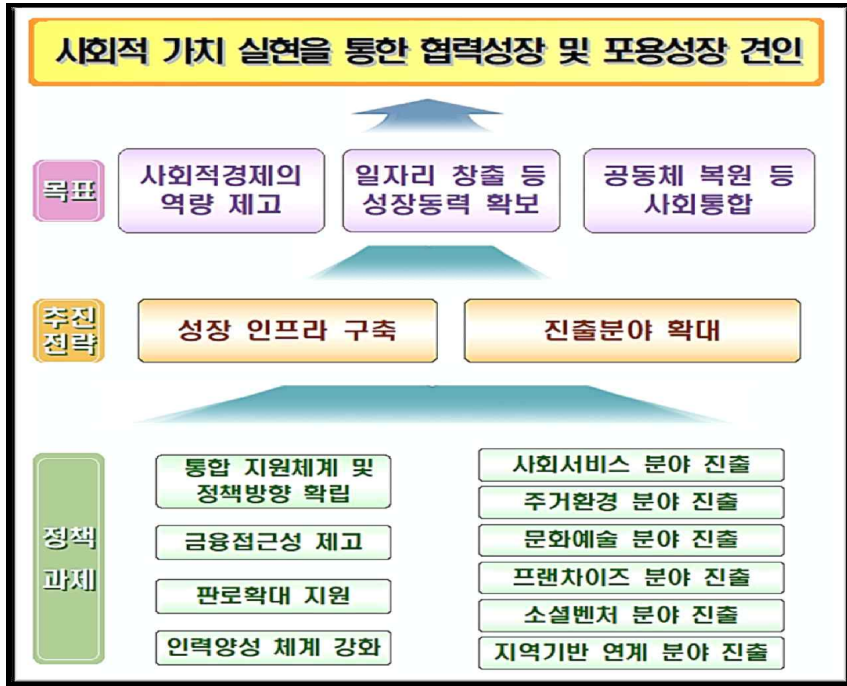
우선 사회적기업 영역은 사회적경제 조직 중에서 가장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보이고 있으며 크게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전문인력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지원, 4대보험 지원의 4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있다. 간접지원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홍보 및 아카데미 등의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에 비해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반마련 및 간접지원의 정책지원의 특성을 보인다.

법적 근거는 아직 미흡하지만 정부정책으로 추진되는 마을기업도 사회적경제의 대표적인 활동조직이다. 마을기업의 경우는 사회적기업처럼 행정안전부의 지정을 통한 2년차까지 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2천만원 한도내에서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사자, 일반인 등 다양한 대상의 교육 및 기업대상의 경영컨설팅과 백화점 등 유통점을 활용한 판로개척지원 및 박람회, 멘토링과 같은 기업활동에 대한 정책지원들이 실행되고 있다.

〈표 3-3〉 사회적경제의 조직별 지원정책 현황

	재정지원	교육컨설팅	판로지원	네트워크	금융지원
사회적 기업	인력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4대보험지원	경영컨설팅 서비스	공공기관우선 구매, 공동판매장 조성, 해외수출 컨설팅, 미디어 활용지원	업종별지원 체계, 전국네트 워크지원	전용특별 보증, 법인세감면 기부금 인정
협동 조합	없음	경영과정코칭 제도, 학교교육과정 지원, 코디네이터 양성	공공기관우선 구매, 사회서비스 주체참여보장	연합회 설립지원, 지역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행사지원	신용보증 기금활용, 조세 감면혜택
마을 기업	사업비지원	종사자 교육 실시, 일반인 창업교육, 일상적경영 컨설팅, 경영자문 서비스	유통망 연계한 판로개척지원	전국 박람회지원	없음

문재인정부에서 사회적경제는 매우 다각적이며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2017년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종합적인 진단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지원방향을 발표하였고 현재 이를 수행 중에 있다. 정부는 현재 한국의 사회적경제에 대해 성장기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양적성장 과 기반들의 구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제는 초기단계의 양적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자생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사회문제에 기반 한 지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3> 문재인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정부는 이후에도 2018년 2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2018년 7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2020년에는 중앙정부 부처들의 사회적경제 주요 정책사업 안내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12개 부처에서 진행하는 55개 사업을 제시하였다.

2. 충남의 지원정책 현황

1) 공유경제의 지원제도 및 정책 현황

(1) 충청남도 공유경제 정책방향

충청남도 또한 공유경제활동에 관심이 증가하여 정책적으로도 주목하고 있다. 우선 충청남도의 관련 조례로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2019년 9월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아산시가 유일하게 「아산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가 2017년 12월에 제정되었다. 2016년 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연구센터에서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공유경제 추진을 위한 방향과 전략 및 사업들을 도출하였다. 우선 2018년 이후 다양한 충청남도 경제정책에서도 공유경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 부분적 정책사업들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충남 경제발전전략(2018), 충남 민선7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2018), 충남사회적경제 제2차 5개년 기본계획(2018) 등에서 공유경제 및 공유도시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과 실행방안들이 도출되었다.

이후 충청남도는 공유경제 실행을 위한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개발(2019)’ 연구를 통해 충남에서 공유경제의 방향과 운영 모델 및 실천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충남에서 공유경제의 활동기반 구축을 위해 제도화 및 정책적 행위들이 나타났지만 실제 경제현장에서 공유경제의 주체 및 활동들이 발생에 한계가 있으며 확산의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4〉 충청남도의 공유경제 관련 정책계획 현황

계획	연도	관련 사업
충남 사회적경제 제2차 5개년 기본계획	2018	‘공유경제 제도적 기반확충’으로 공유가치 확산을 위한 공유경제 활성화
충청남도 민선7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2018	청년 창업플라자 조성을 통해 공간공유의 ‘코워킹 스페이스 제공’
충청남도 청년정책 추진현황	2018	청년 당사자 니즈에 부합하는 ‘공유형 주거공간인 셰어하우스 조성’
더 행복한 충남경제 발전전략	2019	‘충남형 공유도시 조성전략’ 제시하며 관련 조례제정, 공유플랫폼 구축, 공유기업 창업활성화, 공유문화 확산프로그램 운영, 공유기반 지역화폐 도입 제시
충청남도 업무계획	2019	경제통상실 역점시책으로 ‘공유경제 실현 기반 조성’ 제시

앞서 살펴본 바처럼 개념적 차원에서 공유경제는 매우 스펙트럼이 넓은 용어로 인식되고 있어서 정의에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2019년 충남연구원의 연구에서는 ‘충남형 공유경제’의 조직적 정의와 활동 영역 구축에 천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충남형 공유경제는 ‘지역공동체의 경제·사회·환경적 이익을 조화롭게 창출하는 착한경제를 지향함’의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공유경제는 일반적인 렌탈비즈니스 및 플랫폼경제에서 사회적경제를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활용되지만 공통적으로 소유보다 이용의 형태와 개별소비를 통한 이윤극대화보다 협력적 소비를 통한 가치극대화를 지향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공유경제도 이윤창출이 궁극적 목적인 경제활동에 포함되지만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경제활동의 지향점을 순환경제와 공유 및 나눔문화의 확산으로 ‘착한경제’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는 특징에 무게중심을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충남형 공유경제는 도입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유경제 활동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주체와 계기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방안들의 투입을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유경제 활동을 실현하고 체감할 수 있기 위한 주요한 주체(공유활동의 기업)의 단기간 육성과 발굴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유경제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연관된 분야의 주체들과 연계적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충청남도 공유경제 정책의 현황

충남은 2010년대 후반부터 공유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충남형 공유경제를 조성해야 한다는 거시적인 방향 하에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오고 있다. ‘더 행복한 충남 경제발전전략’,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2차 5개년 계획 등에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타 시도에 공유경제 정책의 출발이 다소 늦었으며, 물리적 공간 공유에 초점을 맞춘 단편적 공유방식을 산발적으로 추진한 감이 없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체계화된 공유경제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 2019년말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 개발> 연구를 실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본계획과 관련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현재 태동기에 있는 만큼, 충남의 공유경제를 이끌어 갈 주체와 조직 구성, 상징성과 특색을 갖춘 지역형 시범사업 발굴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공유경제의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운영계획도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충남형 공유경제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공유경제의 실천 주체와 조직의 구성, 플랫폼 등의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단 시간 내에 성과도출은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유경제 활동의 촉진을 위한 다른 영역 및 주체들과의 연계성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표 3-5〉 충남 공유경제 정책현황

구분	년도	내용
더 행복한 충남 경제발전전략	2019	공유기반 지역공동체 활성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2차 5개년 계획	2018	사회적경제 기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충청남도 민선7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2018	공간공유(청년창업 관련 코워킹 스페이스)
2018년 청년정책 추진현황	2018	주거공유(쉐어하우스)
2019년 업무계획	2019	공유경제 확산 기반 조성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 개발	2019	충남의 공유경제 비전 및 전략, 시범사업 제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경제 관련 정책사업들은 대부분 시작단계에 있는 사업들이다.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공간, 일부 민간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공간공유사업과 물품공유사업이 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교통수단(차량, 자전거) 공유 등도 이뤄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전국에서 실시되는 보편적인 형태의 사업이 많으나 일부 충남의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업도 존재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도농복합지역의 특성과 같은 충남의 지역특색을 반영한 사업의 발굴이나 추진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민간이 주도하는 공유경제 관련 사업은 많지 않으며, 지자체 및 공공이 주도하는 정책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민간이 중심이 되더라도 공공과의 협약 또는 협력을 통해 공공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표 3-6>에 충남이 추진하고 있는 공유경제 정책사업들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표 3-6〉 충남 도·시군 주요 공유경제 정책사업 현황

사업주체	사업명	공유 유형	진행 현황
도	민간주도형 취창업 카페	취창업활동 관련 협업공간 공유	6호점까지 선정 완료 - 1~3호점까지는 운영 중(2019.07.)
교육청	유휴물품·악기나눔 플랫폼 운영	교육청 홈페이지에 유휴물품 및 악기나눔 플랫폼 운영	현재 운영 중이나 활 성화 상태는 낮은 편
평생교육 진흥원	학습공간 공유 플랫폼 공유로(路)	학습공간 공유	홈페이지 운영 중 - 15개 지자체 46개 공간 등록운영
아산시	산업단지 출퇴근 카풀 지원	차량 공유	시범사업 실시(2018) 후 종료
천안시	공유문화공간 B HOUSE	문화공간 공유,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 대관 운영 중
아산시	공유주차제	주차장 공유	주차장 381면 조성 (2019.07.) - 추가 조성을 위해 토지소유자 등과 협약 추진 중
논산시	타요자전거	공유 자전거	2021년 도입 예정 - 사전 조사 중
청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유휴공간 활용	2020년 상반기 예정 - 폐교 매입 추진 중

2) 사회적경제의 지원정책 및 활동 현황

(1)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의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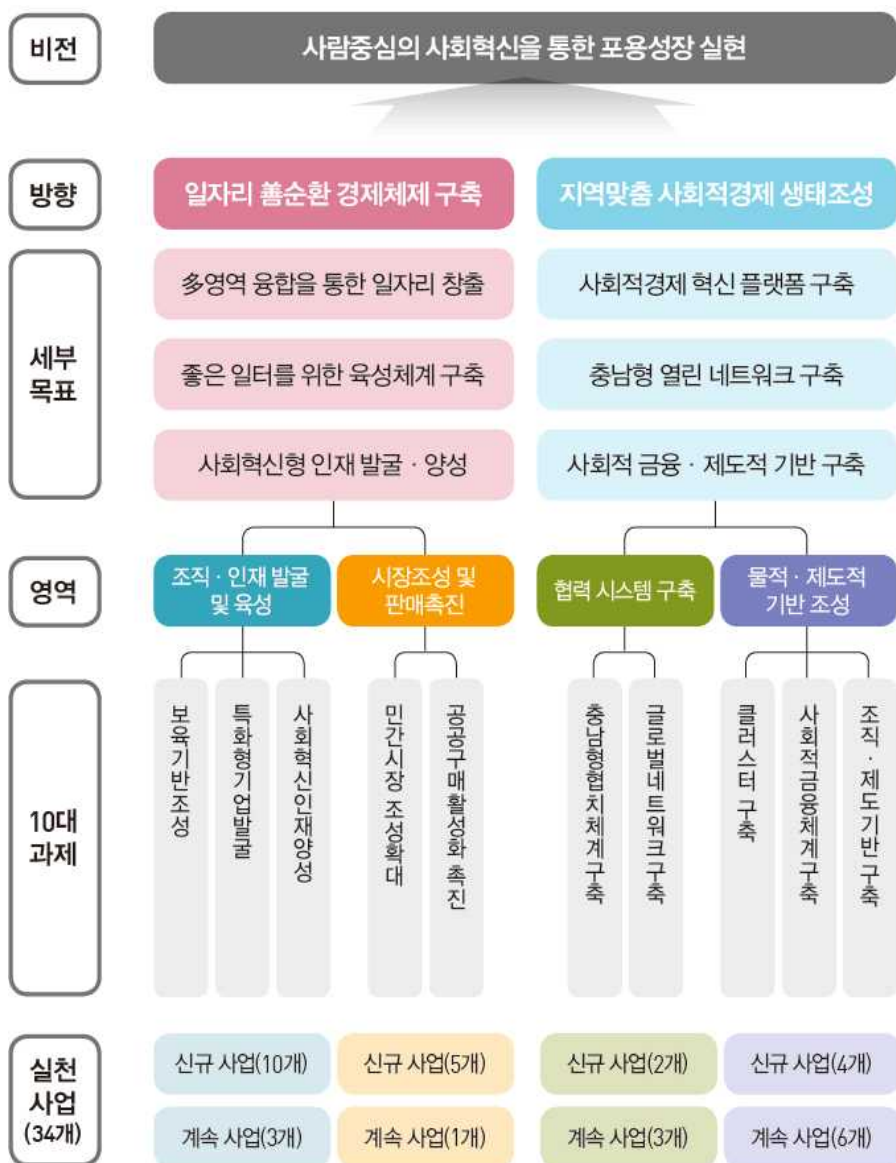
충청남도는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2009년 기 제정되었던 「충남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를 2012년 전국 최초로 개정하여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였다.

본격적인 충남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은 민선5기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2011년 충남연구원 내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립으로 본격적인 공공지원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지원센터에서는 조례에 의거하여 2013-2017년에 해당하는 ‘제1차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지원 활동들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공공지원과 함께 기업의 당사자조직 차원에서도 조직체계 구축을 통한 규모화를 시도하였는데 기존에 존재하던 충남지역자활센터협회를 포함하여 2011년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2012년 중간지원조직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를 설립하여 자체적인 사회적경제 저변확대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2013년 이후 충남마을기업협의회가 설립되었고 2015년 6월에는 충남 사회적경제의 당사자 및 민간조직들의 연대협의체인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가 창립되어 지원정책 수행을 위한 민간영역 규모확장과 역량강화를 추구하였다.

민관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2011년 ‘충남사회적경제 정책기획단’을 구성하여 공공과 민간의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고 2012년에는 이를 확대하여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다. 이후 ‘충남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가 충남도청에 구축되어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의 심의 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상위의 민관협력 정책결정 구조가 마련되었다.

현재 충남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은 2017년 수립되어 2018년부터 실행중인 「제2차 충남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제2차 충남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은 ‘사람중심의 사회혁신을 통한 포용성장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일자리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과 지역맞춤 사회적경제 생태조성의 방향에 기반하여 34개의 실천사업을 제시하였다.



<그림 3-4> 충청남도 제2차 5개년 기본계획의 체계도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은 주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물적·인적기반과 체계구축에 집중된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정책추진의 결과로 사회적기금이 마련되고 지원조직 확대, 보육기반과 유통부문 활성화 등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2)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의 정책현황

충청남도에서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의 정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선 2020년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을 살펴보면 다음 <표 3-7>과 같다. 현재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 정책들을 충남 사회적경제 제2차 5개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10대 사업별로 구분할 수 있다. 충청남도에서 사회적경제의 정책지원중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창업 및 육성의 보육에 관한 정책들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에 대한 전달체계의 성격적 측면이 있으며 현재 충남의 공유경제 사업들도 본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충남에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활동을 위한 인재양성 및 공공구매와 민간시장의 활성화의 정책영역들이 있다. 경제활동에서 사회적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대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대상들에 대한 교육활동 및 청년들의 사업 참여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들이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경제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고 확보하는 정책지원으로 민간시장과 공공구매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정책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통채널확보, 비즈니스의 고도화 등에 대해 충청남도는 지속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공공구매 활성화는 충남에서 촉진 조례로 별도로 제정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등 충남 사회적경제의 핵심적 정책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 조직 및 공공과의 다양한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대와 협력의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포함하여 사회적 금융, 평가체계, 지원조직 구축 등의 정책지원의 기반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충청남도에서 사회적경제의 지원정책 추진은 충청남도와 함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유통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및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등 다양한 중간지원 조직 및 당사자 지원조직과 함께 민관거버넌스의 형태로 수행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표 3-7>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정책지원사업 현황(2020년)

10대 사업	충남 사회적경제 정책지원사업(2020년)
사회적경제 보육기반 조성	충남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운영 /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 마을기업지원기관 컨설팅 사업 /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R&D)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비R&D)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인증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마을기업 육성 / 마을기업지원기관 컨설팅 사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및 멘토링 / 사회적경제 공유플랫폼 구축 사회적경제기업 비즈니스 고도화 / 충남 공유경제 아카데미 운영 충남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 / 충남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특화형 기업발굴	학교협동조합 현장지원(교육청 협력사업) 사회적경제 청년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 지역(광역)특화사업
사회혁신형 인재 양성	충남 사회적경제 교육지원 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 /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운영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하는 인성진로 학교교육 사업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운영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하는 인성진로 교육
사회적경제 민간시장 조성 및 확대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운영(자본) 사회적경제 온라인 유통 프로모션 특별지원(특별) 사회적경제기업 비즈니스 고도화 /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멘토링 충남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운영 / 충남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공공구매 활성화 촉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전략 수립 공공구매 박람회 실시 / 광역특화사업(공공구매 활성화)
충남형 협치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 육성 및 협동화사업 충남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 충남 사회적경제 한마당 충남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 사회적경제 계약학과 지원 네트워크 조직 육성 및 협동화 사업
사회적금융 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금융교육 컨설팅 / CSR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조직·제도·평가 기반 구축	충남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 서천 경제진흥통합센터 구축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및 연구 보고서 / 사회적경제 포럼 운영

자료: 충청남도 내부자료(2020)

(3)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활동의 실태와 현황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사회적경제의 경제규모와 기업활동도 함께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세는 다음 <표 3-8>과 같다. 2011년 115개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으로 출발한 충남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146개, 마을기업 141개, 협동조합 589개로 총 876개의 조직규모로 확대되었다. 특히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 조직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전체 조직규모를 보면 2012년 172개에서 2018년 876개로 5배가 성장하였다.

<표 3-8> 충남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

(단위: 개)

유 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개)	115	172	315	436	538	621	717	876
사회적 기업	소계	88	117	132	143	139	133	146
	인증	19	23	38	54	66	79	94
	예비	69	94	94	89	73	55	43
(예비)마을기업	27	48	74	90	96	109	131	141
협동 조합	소계	-	7	101	203	303	378	453
	일반	-	7	101	203	288	358	429
	사회적	-	-	-	-	14	19	23
	연합회	-	-	-	-	1	1	1

또한 충남 사회적경제의 경제규모는 또한 매년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아래 <표 3-9>에 의하면 연평균 매출액이 32%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9년 사회적경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6억 규모로 2012년 이후 연평균 7.9%가 증가하고 있다.

<표 3-9> 충남 사회적경제 경제규모의 성장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매출액	26,493.2	46,351.6	76,493.4	98,291.1	150,417.0	160,913.9	160,745.1	185,929.9	32.1%
평균 매출액	196.3	190.0	204.5	221.4	346.6	356.0	305.6	258.9	7.9%
중사자 수	1,213	1,958	2,716	3,257	3,000	4,520	4,878	5,018	22.5

충남에서 사회적경제의 경제활동은 사회적기업들의 비중이 높는데 마을기업의 매출액 비중이 4.2%, 협동조합이 27%에 비해 2019년 기준 사회적기업의 전체 매출액이 68.6%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0〉 기업유형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매출액	
	2018년	2019년
전체	160,745.1 (100.0%)	185,929.9 (100.0%)
(인증)사회적기업	109,194.9 (67.9%)	127,625.8 (68.6%)
마을기업	13,041.6 (8.1%)	7,901.6 (4.2%)
협동조합	38,508.6 (24.0%)	50,402.7 (27.1%)

사회적경제 조직은 경제적인 성과와 함께 사회적인 성과를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지향의 경제활동 형태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들의 사회적 활동 또한 매우 중요하다. 결국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동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경제적 성과가 아니라 사회적 성과창출이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경제적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성과는 사회적경제조직의 핵심가치라 볼 수 있다. 제도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지원을 위해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활동의 목적과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 <표 3-11>과 같다.

〈표 3-11〉 사회적경제 기업의 유형별 목적과 조건

		사회적 목적	인증(지원)조건
사회적 기업	일반	-취약계층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 내 취약계층 일자리 또는 사회 서비스 제공 -지역의 인적/물적자원 활용	-4가지 인증유형별 기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유급근로자 고용(취약계층)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구조 -이윤의 사회적목적 활용
	협동 조합	-협동조합 7원칙 준수를 통한 가치추구	시도지사 신고
마을기업	사회적	-취약계층대상 고용 및 서비스제공 -지역문제 해결	-기획재정부(관계부처)인가 -공익사업 비중이 40%이상
	마을기업	-지역 인적/물적자원 활용 -지역사회 문제해결 -지역주민 고용과 소득증대 -마을기업 및 지역사회 편익제고	-공동체성: 구성원 자발적 참여 -공공성 및 지역성 -기업성: 시장성 및 차별성 -지역 일자리 창출
자활기업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와 탈빈곤	-기초수급자비율 1/3이상 -표준소득액 이상 임금 지급 -창업 전 교육 및 경영자 과정 이수 -근로일수 기준의 충족
농어업 법인		-농어업분야 소득창출 및 일자리 창출 로 지역사회 기여	-농어업인의 자본비율 충족 -이사진의 농어업인 구성비율 충족 -자본금(1억 이상 권고)

이와 같은 사회적 성과는 전지훈(2018)에 따르면 사회적 목적이 부합하는 활동을 통해 창출된 재화 및 가치들의 집합을 의미하며 이는 일련의 활동과정을 통해 도출된다는 특성을 지닌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활동하는 목적에는 매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복리 증진의 내용이 포함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의 활동은 다양한 정의와 목표가 존재한다. 충남에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사회적 가치활동을 유형화 하면 다음 <표 3-12>와 같은 활동들을 사회적 성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남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11가지로 유형화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적가치 활동으로는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이라 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에게 사회서비스 제공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2> 충남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사회적가치 창출 영역

(단위: 개)

항목	전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취약계층의 자활·자립	13.9	32.9	6.1	8.8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24.7	47	11.2	19.6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65.7	65.2	81.6	62.3
지역주민 대상 사회서비스	49	42.1	43.9	52.6
생태 및 대안농업 활성화	26.5	17.7	52	24.2
낙후 지역·공간 인프라 개선	7.4	6.1	7.1	7.9
생태공간 보존·자원 재활용	4.5	4.3	3.1	4.8
다문화 가족, 이주노동자 등 지역 주민 통합	1.9	2.4	1	2
대안 에너지 제공, 에너지·연료 효율성 향상	3.8	0.6	-	5.7
공정무역 등 지구촌의 지속가능개발	0.3	-	-	0.4
사회적경제조직 성장지원	21.2	22	18.4	21.4
기타	2.6	1.8	-	3.5

자료: 충남연구원(2019)

3.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정책적 연관성

앞서 살펴본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이론적인 차원에서 상호보완성의 연관성과 함께 정책, 제도적 부분에서도 일부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공유경제를 새로운 경제활동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관리와 규제를 통해 공유경제의 정착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공유경제의 사회적, 가치적 활동보다는 기존 경제활동과의 충돌 방지나 규제들에 대한 보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유경제의 특성이 반영되는 방향의 규제와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접근성, 사회적 상호작용, 협력적 소비와 공유관계자들간의 피드백을 통한 신뢰성 향상과 같은 새로운 경제적 생활양식을 반영한 공공적 지원제도 및 규제들이 형성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한국행정연구원, 2018). 따라서 정부의 공유경제 정책방향은 플랫폼 활동으로 인한 수익창출의 영리활동과 함께 이를 기반으로 한 구성원들의 공유자산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상호작용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유경제의 지원정책을 중앙정부 보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가치지향성을 갖고 있다. 최초로 공유경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한 서울시부터 공유경제활동을 통한 사회혁신과 지역사회 수요충족 등의 사회적 가치에 공유경제 활동지원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우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유경제를 주관하는 부서를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3-13>과 같다.

〈표 3-13〉 지역별 공유 관련 조례 소관부서 현황(2019년 12월 기준)

(단위: 개)

구분	자치행정	지역경제	혁신·참여	도시재생	기타
서울	5	11	9	1	0
인천	0	0	1	0	0
부산	2	8	1	0	0
대전	0	0	1	0	0
광주	3	1	2	2	0
대구	0	0	1	0	0
울산	0	1	0	0	0
경기	1	5	2	0	2
충북	0	1	0	0	0
충남	0	0	1	0	0
전북	0	0	3	0	0
전남	0	1	1	0	0
경남	0	2	0	0	0

지역경제(기획예산과, 경제진흥과, 일자리경제과 등)와 관련된 부서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44%로 가장 많다. 이와 함께 사회혁신참여(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과, 마을공동체과 등)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는 비중이 32%이고 자치행정(주민자치과, 자치행정과 등)에서 담당하는 비중은 17%를 보이고 있어서 이들의 비중이 50%에 달함을 알 수 있다. 결국 공유경제 정책지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실행부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제활동 측면의 진흥보다는 지역사회 차원의 주민참여와 공동체 경제의 시각이 다소 높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공유경제의 사업범위는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의 5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주요한 정책목적으로 두고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경제 정책범위는 지역의 경제적 문제를 사회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민주적 경제 조직형태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에 접근하여 경제행위를 통해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의 지원정책과 다수의 유사성을 갖고 있다. 결국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공유경제 정책의 방향은 공유경제를 활용하여 지역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의 움직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주민참여 및 자치 등과 연계하는 방향이라 볼 수 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공유경제활동의 이러한 사회적 특성에 따라 경상남도를 비롯해 경기도의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 등의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지원정책 내에서 공유경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간지원조직 또한 두 경제조직의 지원사업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사업형태를 보이고 있다.

충청남도 또한 2019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개발’을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비전은 ‘나눔으로 행복하자는 착한 경제 실현의 場, 충남’이며 정책목표를 공동체 중심의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 일상생활 속 공유문화 확산,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보존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충청남도는 2020년 4월 공유경제의 정책업무가 사회적경제과로 이관되면서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 지원활동의 협력과 연계의 정책적 수요가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공유경제 정책의 방향은 공유경제를 활용하여 지역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의 움직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주민참여 및 자치 등과 연계하는 방향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직접적으로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를 제도적으로 상호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지만 지역사회의 가치추구라는 유사성을 보이는 정책목표와 방향성에 따라 연계활동의 모습들이 확대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충청남도에서 전략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와 같은 주요한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상호보완성에 의한 정책적 접근을 전략적으로 제시하고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제4장 관련 사례분석 및 인터뷰 조사

1. 조사의 개요

본 연구는 충남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공유가치 촉진과 사회적 기여의 활동 수행이라는 공유경제의 본질적 방향에 대한 고민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 영역과의 연계와 상호보완 관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앞서 제시한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충남의 공유경제 활동과 사회적경제 활동이 상호보완의 연계활동을 수행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계활동의 사례는 실제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상호보완관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의 구체적인 맥락과 관계성을 도출함을 통해 이론적 논의의 타당성 확보와 함께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충남 및 성남의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정책적인 연계협력 사례와 함께 공유경제 활동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는 기업들의 현장 활동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는 공유경제 분야에서 사회적경제와 연계되어 활동하거나 정책개발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전문가들의 인터뷰 조사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공유경제가 어떻게 사회적 가치 활동을 추구하고 사회적경제와 상호보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 진정한 상호보완관계 형성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의 의견들을 종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이론적으로 구성된 상호보완의 모델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양한 사례들과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충남의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연계협력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2. 공공정책분야 연계사례

1)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계사례

(1) 센터의 개요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원래 2012년 충남연구원의 산하 조직으로 출발해 2017년도에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세움에서 민간 위탁으로 전환되어 3년간 운영됐다가 2020년 충남사회경제연대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센터의 예산과 인력 규모는 이전보다 약 3배 커졌으며, 전문성, 현장성, 연계와 협동을 센터의 핵심가치로 하고 있다.

센터의 주요 전략은 ①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지원, ②눈높이 교육 및 주체 역량 강화, ③사회적경제 시장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④사군별 지원제도 조성 및 확립, ⑤지역 의제별·업종별·유형별 네트워크 구축이다.

주요사업으로는 ①사회적경제 조사정책연구, ②사회적경제기업 운영 및 성장지원, ③협업시스템 구축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④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제공, ⑤사회적경제 종합정보제공 및 인식확산이다.

센터 구성원은 센터장 1인, 기획운영팀 3인, 성장지원팀 3인, 기반조성팀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공유경제 관련한 사업은 성장지원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성장지원팀은 충남사회적경제지업들의 컨설팅, 시장지원, 각종 협력사업, 사회적기금 업무 등 성장지원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공유경제활동과 연계사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원을 연계하는 일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적기업 간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활성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영역과 연대와 협력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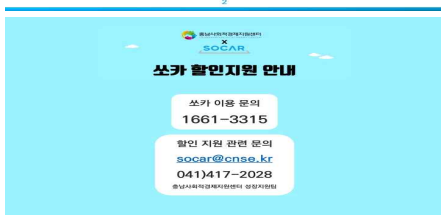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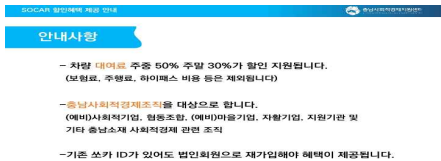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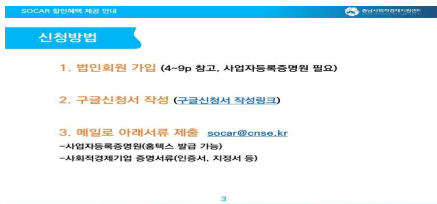
이와 같은 생각으로 센터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차량 기업 ‘쏘카’와 2020년 7월 31일 업무협약을 맺었고, 충남도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기관(조직)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4-1>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쏘카 업무협약서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및 기관(조직)들의 업무이동 편의성을 제공하고 주차난 해소, 환경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 협약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이용객들을 위한 전용 금액할인 혜택을 포함해 향후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네트워크 조직 등 쏘카 이용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가운데 사전선요조사 응답기업들은 쏘카 사용료 중 50% 대여금액을 할인 받고 사용할 수 있다.



<그림 4-2> 쏘카 이용방법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쏘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언론 및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홍보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협약 이후 현재까지 18개 사회적경제기업 및 기관(조직)에서 신청하였다. 시군별 신청현황은 천안시 8개소, 아산시 3개소, 서산시 2개소, 당진시 1개소,

부여군 2개소, 청양군 1개소, 홍성군 1개소이며, 실제로 쏘카를 이용하고 있는 시군은 천안시 7개소, 아산시 3개소, 부여군 1개소 이다.

<표 4-1> 사회적경제 기업 및 기관 쏘카 신청 현황 (단위: 개)

시군	현황
천안시	8
공주시	-
보령시	-
아산시	3
서산시	2
논산시	-
계룡시	-
당진시	1
금산군	-
부여군	2
서천군	-
청양군	1
홍성군	1
예산군	-
태안군	-

한편 쏘카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포함한 2만 2000여개의 파트너사들이 고객들의 이동 편의성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 이동을 위해 법인 전용 카셰어링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충남 지역 쏘카존은 80개, 229개 차량이 운영되고 있다.

(3) 연계활동의 성과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공유사업인 ‘쏘카’ 사업 이외에 지역 내 공공기관들과 연계해서 ‘라이브 커머스’ 같은 새로운 교육도 시도 중이며, 또한 ‘구인 플랫폼’을 통한 충남지역에 사회적경제기업 및 조직 등 인력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인력공유를 통한 지역 내 사회적경제 일자리 마련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충남지역 내 사회적경제 전체 생태계에 도움이 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 가능한 재원을 많이 연계해 더욱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다.

2)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연계사례

(1) 기관의 개요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은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의해서 설립되었으며 2012년 1월 개원하였다. 충남평생진흥원의 미션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평생학습사회구현이며, 비전은 “평생 학습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이고, 핵심가치는 나눔, 공유, 배움이다.

충남평생진흥원의 전략목표 및 사업으로는 ①충남 평생교육진흥기반 강화(충남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충남 평생교육 정책연구 및 포럼 개최, 충남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운영 등), ②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충남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 충남 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충남문해교육센터 운영 등), ③도민의 역량을 높이는 학습체계 구축(충남시민대학 설립 시범 운영, 충남 민주시민교육 등), ④일-가정 양립과 사회적가치 실현(가족친화 및 인권경영 추진, 조직혁신 및 직무역량 강화 등)이다.

(2) 공유경제활동과 연계사례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공유로(路) 사업은 2017년 하반기 준비해서 2018년 시작하였다. 지역에서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해서 공간에 대한 제약으로 실시하였다. 당시 지역 내 평생학습교육공간이 한정(평생학습교육원, 도서관)되어 시민들이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공유로 사업은 우리동네 학습공간 사업이다.

공유로는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누구나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 플랫폼 이다. 지역 내 유휴 공간을 발굴, 지정하여 지역 주민이 가까운 거리에서 쉽고, 다양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만들어졌다. 충남도민 누구나 사무실, 회의실, 세미나실, 다목적실, 공연장, 작업실 등 무료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유로 사업을 위하여 공간을 발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고, 시군평생교육사들의 도움으로 지역 내 공유 공간을 발굴하였으며, 현재는 코로나 19 여파로 공방이나 카페 등에서 사람들이 몰수 있도록 공유 공간 신청을 하고 있다.

<그림 4-3> 공유로 학습장소 신청 및 이용안내

공유로 충남평생학습 공유공간

공유로(路) 학습장소 신청
기관, 단체, 사업장 등의 대표자가 신청 가능

학습공간 공유 선정 기준

신청 자격	기타사항
1. 해당 기관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신청 가능	신청 기간: 2023. 11. 1. ~ 2023. 11. 30.
2. 신청 대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문화기관, 사회복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후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후 신청 가능	신청처: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공공기관 선정 시 지원사항은?

다. 학습공간 공유(대) 지원사업 학습공간 지원 예산 전액
 1. 학습공간 공유(대) 지원사업 예산 전액 지원
 2. 학습공간 공유(대) 지원사업 예산 전액 지원
 3. 학습공간 공유(대) 지원사업 예산 전액 지원

학습공간공유로 신청방법
 인터넷주소창: www.cile.or.kr | www.cile.or.kr/kr | www.cile.or.kr/kr/kr | www.cile.or.kr/kr/kr/kr

학습자가 공유공간을 이용하려면?

누가

-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문화기관, 사회복지기관, 기타 공공기관 대표자

어떻게

- 인터넷신청 <http://www.cile.or.kr>
-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접수, 신청서 검토, 신청서 승인, 신청서 발급, 신청서 수령
-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신청서 검토 결과 통보
- 신청서 승인 후 10일 이내 신청서 발급 통보
- 신청서 승인 후 10일 이내 신청서 수령 통보
- 신청서 승인 후 10일 이내 신청서 수령 통보

이용시 주의사항

- 시간에 제약된 시간 및 장소사용에 대한 일일당료
- 이용시간, 이용장소, 이용방법 등 신청서 작성 시 기재한 사항에 따라 이용 가능
-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문화기관, 사회복지기관, 기타 공공기관 대표자
-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신청서 검토 결과 통보
- 신청서 승인 후 10일 이내 신청서 발급 통보
- 신청서 승인 후 10일 이내 신청서 수령 통보
- 신청서 승인 후 10일 이내 신청서 수령 통보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공유로는 기관, 단체, 사업장 등이 대표자가 신청 가능하며, 학습공간 공유 선정 기준은 지리적접 근성, 시설물 보유현황, 공간의 필요성을 보고 선정한다. 선정도니 공간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공유기간 내 무료 대관, 공간 사용 요청 시 협의 후 제공을 하면 된다. 공간선정 시 지원사항은 학습 공간 공유로 지원사업 학습공간 지정 현관 전달, 학습공간 공유에 따른 도내 온오프라인 홍보 및 안내, 공유공간 대상 학습이벤트 지원, 학습공간 공유로 지원사업 홍보물 지원 등이 있다. 학습공간 공유로 신청방법은 인터넷 주소창에 공유로.kr 검색이후 www.cile.or.kr/kor에서 회원가입 후 학습공간을 등록하면 된다.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학습공간 공유 지원 사업으로 공유공간에서 학습자들이 학습 비용을 신청하면 학습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30-50만원 정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충남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공유경제 플랫폼에 충남도내 주)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 (주)라운누리보드게임센터, 함께함센터, 드림즈복합문화공간, 교육공동체협동조합노리아이 등 다수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간 공유사업에 참여하여 공유경제와 연계된 사회적경제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충남 도민 누구나 학습지원이 가능하며, 동아리, 공간주도 신청 가능하다. 도내 공유로 학습공간은 현재 100개소이며, 당진시 20개소, 천안시 13개소, 아산시 11개소, 홍성군 11개소 등이다. 충청남도 공유로 현황은 아래 <표 4-2>과 같다.

<표 4-2> 충남도내 공유로 학습공간 현황

(단위: 개)

시군	현황
천안시	13
공주시	7
보령시	4
아산시	11
서산시	2
논산시	8
계룡시	4
당진시	20
금산군	4
부여군	2
서천군	2
청양군	2
홍성군	11
예산군	7
태안군	3

(3) 연계활동의 성과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은 공유로 사업 이외에도 서울 소재 지식플랫폼협동조합은 업무협약을 맺고, 충남지식(지혜) 공유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4개의 단체가 지속적인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진행하기로 하였다. 협약으로 충남 지역 내 학습 자원의 선순환을 통해 주민 간 교류활동을 확대하고, 지역의 학습자원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자립구조를 튼튼하게 구축하여 지역의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구성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활동과 인식 공유를 통한 활동이 가장 기반이 되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공유공간에 대한 플랫폼 제공과 활용은 연계활동의 가장 효과적인 성과로 볼 수 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충남 지식(지혜)공유 플랫폼 지원 사업 운영 단체별 운영현황 분석, 충남 지식(지혜)공유 플랫폼 지원 사업 운영 단체별 컨설팅 지원, 충남 지식(지혜)공유 플랫폼 지원사업 운영 단체별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방안 제시이다.

3)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계사례

제도적으로 최근 충청남도를 포함하여 공유경제를 사회적경제에 포함하여 유사한 정책방향으로 포함하고 있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경기도내 성남시는 2018년도 이후 사회적경제 정책사업내에서 공유경제의 육성을 함께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성남시의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센터의 개요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1년 6월 개소 이후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사업을 수행해왔다. 센터 개소 당시 34개였던 사회적경제 기업은 센터 설립 7년차를 맞이하며 270여개로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통해 수많은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센터는 협동과 상생의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활성화 및 네트워킹,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①사회적경제 인재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②신규조직 발굴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운영, ③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을 위한 컨설팅 및 멘토링, ④상생과 호혜를 위한 지역 연대 및 공유경제 활성화이다.

센터 구성원은 센터장 1인, 사무국장 1인, 공유경제팀 2인, 사업지원팀 2인이며, 공유경제팀은 창업보육센터 운영, 공유경제포럼 운영, 공유경제 우수사례 발굴 및 육성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성남시는 공유경제의 가치 확산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유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시민 및 기업, 단체 등의 참여를 독려하여 공유도시 공유성남으로 만들고자 한다.

(2) 공유경제활동과 연계사례

성남시는 공유성남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경제 권장의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공유경제 권장의 목적

- 복지·환경·일자리 등에서 사회적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과 자원으로 이를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리고 급격한 도시화로 공동체 의식이 실종되었고 과잉소비에 따른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문제들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공유라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며, 세계적으로 공유경제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공유활동을 하면 새로운 상품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유휴자원을 나누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됩니다.
- 자원 재활용으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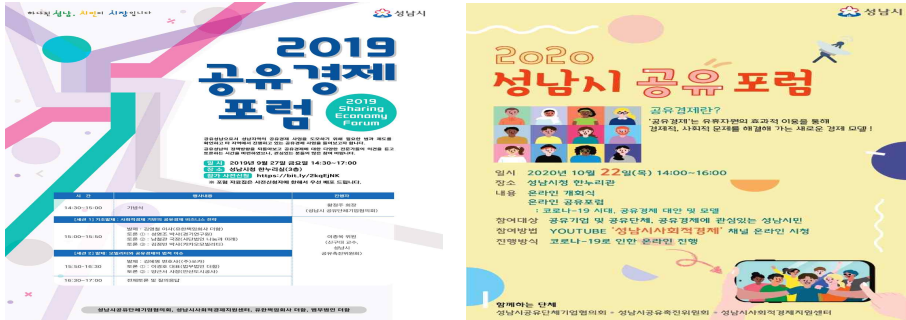
자료: 성남시 공유성남 홈페이지

성남시는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를 통해 ‘공유도시 공유성남’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공유경제 관련한 사업으로는 공유경제 아이디어 및 수기 공모전을 통해서 지역의 필요와 문제를 공유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시민아이디어 및 청소년 대상 체험수기, 독후감 형태의 공모전 개최이다. 또한 성남시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을 통해서 ‘공유(共有)’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하고 있으며 대상은 법인 및 비영리단체이다. 공유촉진 사업은 사업비 지원을 통해 공유단체·공유기업을 대상으로 공유문화를 활성화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공유경제 아카데미를 통해서 성남시민 대상으로 공유경제 인식 확대를 위한 시민교육 및 사례 탐방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공유경제 사업 희망 시민 및 기업을 대상으로 공유기업 및 관내 공유경제 사업과 관련하여 상담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공유성남 홈페이지를 운영 (<https://share.seongnam.go.kr:10004/>) 하고 있으며, 공유에 관한 인식 저변확대를 위한 2019년도와 2020년 공유경제 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다.



<그림 4-4> 공유성남 홈페이지



<그림 4-5> 성남시 공유경제 포럼개최(2019-2020년도)

성남시 공유단체 및 기업은 현재기준 15개소이며, 재능관련 단체 8개소, 물건관련 단체 2개소, 공간관련 단체 4개소, 경험관련 단체 1개소이다.

<표 4-3> 성남시 공유단체 및 기업 현황(2020. 11월 기준)

구분	기업명	주요사업
재능	크리스마스버드전	- 회원들의 미술적 재능을 이용하여 사회에 봉사하고 나누는 다양한 활동을 통한 공유
재능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	-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와 사회적 이슈를 문화로 디자인 - 도시재생을 활성화시키는 인적자원, 재능을 공유하는 '커뮤케어' 플랫폼 운영
물건	힐링보장구협동조합	- 성남시 보장구 판매, 보장구 수리지원, 복지용구 판매 및 공유 사업을 통해 노인 및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지원 및 취약계층 고용 창출, 회원의 서비스 편의 증대와 권익 향상 기여
재능	사람마을 사회적협동조합	- 재능 공유 기업(문화예술공예, 평생교육, 공유교육센터 구축 등)으로 평생교육과 사회복지를 통해 사람마을 인프라를 구성하여 마을속 사람공동체 구성
경험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	- 20대 청년들의 진로와 자립을 지원

재능	행복한앨범제작소 협동조합	- 온라인제작을 통해 저렴한 앨범 제작 비용으로 추억을 기록 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
재능	(사)한국창의적체험 활동협회	- 다양한 방면에서 초등학교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수준으로 교육과정 재구성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현장체험학습에서 의미있게 사용이 가능한 교재의 개발 및 제작
재능	소셜워버서어소시 에이츠사회적협동조합	- 엄마들의 건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를 통한 가족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기여
공간	프로젝트팀 꽃신	- “꽃신 마을부엌”은 복지관, 경로당 등 공익기관의 취사 공간을 공유해 홀몸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상 나눔
공간	(주) 업	- “니눔’ 과 ‘공유’ 를 비전으로 “도시공유경제 플랫폼(USE)” 의 실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및 지역기반 부가가치 창출 모델을 만들어 가는 IT플랫폼 서비스
공간	주식회사 마을공감	- 도시재생지역내에서 마을공동체활동과 사회적경제활동을 함께 진행, 공유와 관련된 공간공유, 재능공유, 공유 활동가 양성
물건	사회적협동조합 착한장터	- 중고 생활용품 재사용(Re-use) 확대,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벼룩시장의 개발과 공동체 문화사업 구축 - 생활용품을 구매·판매 등 종합적인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재활용센터 및 중고거래 플랫폼의 운영
재능	문화예술공유플랫폼 이음 협동조합	- 예술자원, 공간, 향유자를 이어주고 연결, 문화예술플랫폼, 유희공간재생, 공간공유, 공연기획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예술공유사업을 진행
재능	고큐바테크놀로지(주)	-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ICT, 메디컬,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융합하여 알츠하이머의 조기 검진을 위한 기술 개발
공간	(주)섬마을	- 주민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

(3) 연계활동의 성과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6년 7월 1차 성남시 공유기업 4개 지정, 10월 4개 지정으로 8개 공유기업 지정으로 시작하여, 같은 해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지역 내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 시켰다.

공유경제 아이디어 공모전은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2018년도부터 공유경제 포럼을 진행하면서 공유경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 대상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확산 및 포럼 의견을 토대로 성남시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성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업무와 공유경제 지원업무가 연계하여 이루어지면서 현재 성남시 15개 지정 공유기업의 형태는 대부분 협동조합 형태를 띠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와 공유경제 연계를 통한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3. 충남 공유기업 활동 연계사례

1) 차량공유 사례

(1) 기업의 개요

(주)쉐어앤쉐어는 공유경제를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소셜 벤처기업이다. 비전은 “지역 사회문제를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편리한 모바일로 디자인하다”이며, 미션은 지역사회 교통문제 해결 및 사회적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이다.

쉐어앤쉐어의 조종운 대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근무시 천안의곽에 근무하여 통근버스나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출퇴근 교통문제에 대해 고민중 카풀서비스를 기획하였다. 지역에서도 대부분 외곽지대에 위치한 산업단지는 차량 없이는 출퇴근이 어렵기로 유명하다. 버스 노선이 없는 경우도 많은 데다 시내에서 이동 거리가 멀다 보니 택시 요금이 만만치 않다. 차량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지역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2017년 법인을 설립하고 올해 산단형 카풀서비스 ‘카폴로’를 개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카풀서비스 ‘카폴로’를 통해 산업단지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 임직원들끼리 카풀을 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드라이버는 수익이 생기고, 차량 이용자들은 출퇴근길이 편리해진다. 입주 기업들도 청년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다.

산단형 카풀서비스 ‘카폴로’ 비즈니스 모델을 앞세워 쉐어앤쉐어는 아산시와 시범사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는 자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카폴로’를 활용해 산업단지 내에서 카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과 아산시가 나누어서 비용을 지불하고, 기업이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쉐어앤쉐어의 매출액은 2.4억(2019년 기준)이고, 고용인원은 6명(2020년 10월 기준), 지적재산권은 특허등록1건, 특허출원4건(국내3건, 국제1건) 상표등록 5건, 프로그램 저작권 5건, 인 증 2건 등 지적재산권 확보 하였다.

(2) 공유경제활동의 사례

(주)쉐어앤쉐어의 카풀서비스 ‘카풀로’는 출퇴근시 발생하는 교통체증, 출퇴근용 자가용 구매 및 유지비, 주차문제&주차민원, 환경오염, 에너지 낭비 등 다양한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하였다. 충남지역은 출퇴근시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자가용으로 출퇴근해야 하는 상황이며, 산업단지는 주차장 부족 문제와 인근주민과의 주차민원 발생한다. 또한 사회적교통약자(청년, 사회초년생, 실버, 생산직, 일용직 등)의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직업선택의 폭 제한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여 기업의 일자리창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국내최초의 B2B(G)형 커뮤니티형 카풀서비스 ‘카풀로’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카풀로’는 출퇴근시 드라이버(운전자)와 라이더(탑승자)를 매칭시켜 주는 모바일 앱 서비스 ‘카풀로’ 플랫폼이다.



<그림 4-6> 카풀로 플랫폼 모델



<그림 4-7> 카풀로 모바일 어플

(3) 활동의 성과

(주)웨어앤웨어는 2018년 6월~12월 아산시 산단형 카풀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수행하였다. 시범사업의 결과 카풀 시범사업 이용자의 75%가 만족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카풀이용 이유로는 응답자 46.4%가 교통비 절감, 42.9%가 교통편의를 꼽았다. 카풀이 산단의 통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54%가 일부 해결, 25.4%가 해결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2019년 8월~12월 스마트 산단 공유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하였다. 스마트 산단 공유모빌리티 카풀로 시범사업 MOU체결하고 2019년 경기반월/시화, 경남 창원 스마트산단과 시범사업 MOU체결 하였다. 또한 2020년 SK텔레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대전 세종 SK임팩트 프로그램 선정 및 충남 공유기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

2) 도시재생 및 공유플랫폼 사례

(1) 기업의 개요

도시재생 및 공유플랫폼 기업인 윙윙의 기업미션은 “내 꿈이 우리의 일이 되고 세상의 미래가 되는 공간과 라이프 스타일을 만듭니다”이며, 비전은 “우리가 꿈꾸는 라이프스타일을 일상으로 만드는 회사이고, 가치는 일상의 변화(시도하는, 함께하는, 존중하는)”이다.

윙윙은 2011년 8월 창작 공간 별집 개소로 시작하였으며, 2014년 10월 협업공간 별집으로 확장하였다. 확장 당시 지역 내 소셜펀딩 (1,500여 만원)을 통하여 공간 기획, 조성하였다. 또한 2015년 9월 공동주택 ‘꿈꿀통’ 1호점 개소하였는데 2.5%의 이율로 사회적 저축 프로젝트인 ‘꿈꿀통 펀드’로 보증금을 마련하였다. 같은 해 11월 LH 소셜벤처 선정 되었고, 2016년 5월 공동체 주택 꿈꿀통 2호점 개소하였다.

2017년 2월 도시재생 스타트업 (주)윙윙으로 발전하여 설립하였으며, 공유공간은 협업공간인 ‘별집’, 공동주택인 ‘꿈꿀통’(1호점, 2호점)이 있다. 2019년 9월 협업공간 별집 2호점(공유오피스, 공유주방) 개소하였다.

(2) 공유경제활동의 사례

윙윙의 주요사업으로는 별집(라이프스타일 거리 활성화), 마을문화 온라인 플랫폼(공유공간의 사람과 콘텐츠를 세상과 연결하는 일), 주민주도 도시재생(공유공간의 힘으로 지역에 기여하는 일)이 있다.

라이프스타일 거리 활성화 사업은 ‘공유’를 주제로 한 라이프스타일 & 사회적경제 거리조성, 지속가능한 라이프 브랜드를 위한 컨설팅,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샵 운영이다. 주민주도 도시재생은 시민참여 프로젝트, 사회공헌 업무대행,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 사업이며, 마을문화 온라인 플랫폼은 마을 곳곳을 전하는 홍보 플랫폼,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줄 마을 별 취미 플랫폼이다.

윙윙의 활동 중 대표적으로 안녕축제와, 공유공간 운영, 디스플레이 광고,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등이 있다. 안녕축제는 지역에서 서로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마을문화를 만들어가자는 목적으로 열리는 마을축제로 누구나 쉽고 즐겁게 참여 할 수 있는 게임(꿀림픽)과 즐길거리, 다양한 공동체가 참여하는 플리마켓, 마을 상인이 직접 만들어 파는 먹거리 장터, 지역화폐 등 다양한 콘텐츠가 진행되었다.

공유공간(먹고 놀고 일하고 살아가는 별들의 터전) 사업으로는 허니랩, 꿀꿀통, 로열젤리 홀, 허니바가 있다. 허니랩은 누구나 함께 일할 수 있는 코워킹스페이스 공간이고, 꿀꿀통은 지불가능한 수준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주거문화를 꿈꾸는 셰어하우스이다. 로열젤리 홀은 커뮤니티 기반 다양한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유공간이며, 허니바는 점심요리, 밀프랩 만들기 등 다양한 요리 커뮤니티 활동 및 공유주방이다.

공유공간
먹고, 놀고, 일하고, 살아가는 별들의 터전



허니랩



꿀꿀통



로열젤리홀



허니바

<그림 4-8> 윙윙 공유공간

디스플레이 광고는 양방향식(웹/앱) 디스플레이 마을게시판을 활용한 주민 참여 프로젝트, 상시적 주민 참여 플랫폼 개발 및 광고 수익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유공간, 마을축제의 민간주도 모델 발굴 가능하며,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은 도시재생 방향을 주민과 함께 공유 및 주민참여 확대, 지역 자산 및 마을의제 발굴, 주민조직 발굴 및 역량강화 목적으로 우리동네 생활 문화 강좌, 역량강화 대학, 마을 문제 해결 역량강화 사업 등 진행하고 있다.



<그림 4-9> 디스플레이 광고와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3) 활동의 성과

안녕축제 성과로는 2년간 청년기획단 약 100명 활동, 2년간 약 5,000명 이상 축제 방문, 2년간 약 18백만원의 지역화폐 유통, 2019년 26개 마을상점이 먹거리장터 참여, 2019년 41개 지역공동체가 플리마켓에 참여 하였다. 또한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다문화+주민+청년 창업지원센터 역량강화 대학을 통한 도시재생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각 주체별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마을 내 공유공간, 인적자원 발굴 및 마을 성장 기반마련 하였다. 또한 마을문제해결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마을문제와 마을비전 도출,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학습 등 주민주체로서의 역량강화 하였다.

3) 사회문제해결 공간공유 사례

(1) 센터의 개요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의 비전은 “조합원이 즐겁게 참여하고 함께 성장하며, 지역사회연대를 통해 사회참여와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실현한다”이며, 가치는 조합은 자조, 연대, 공공성,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한다. 조합원은 자치성찰, 참여, 공감, 사회적책임의 가치를 실현한다 이다. 주요사업으로는 ①지역커뮤니티 지원사업: 공간사이, ②주민공공성 확대: 디자인 사이, 지역연대, ③사회적경제 활성화: 배움사이 이다.

주요활동은 ①공공성 확대사업은 지역 공공디자인, 지역소셜 다이닝, 활동가 운동회, 지역 Issue 토론회, 시민사회활성화 포럼, 사회적경제활성화 포럼 등이며, ②학습과 연구사업으로는 사회적경제 조직 전략수립(TFT), 페미니즘 학습모임, 풀뿌리 민주주의/ 커뮤니티 활동 학습, 활동가 역량강화 사업, 사회적경제조직 컨설팅 및 강연 등이고, ③지역사회연대사업은 천안청년조례모임, 갑을밥상 연대, 갑을노조미디어연대, 장애인활동지원 24 시간확보 시민연대, 평화나비천안시민연대 등이고, ④커뮤니티지원사업: 주민동호회 및 청년공동체 공간지원, 비영리 공익단체 공간후원, 사회적경제 조직 공간후원 등 이다.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는 2013년 충남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선정 되었고, 2014년 협동조합우리동네 창립,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선정을 거쳐 2016년 사회적협동조합우리동네 법인변경, 지정기부단체 지정되었으며, 2017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었다.

(2) 공유경제활동과 연계사례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의 공간사이는 조합원들의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의 확산, 지역 커뮤니티의 쉼터, 시민사회단체의 사랑방, 지역활동가 재생산 등 문제 의식에서 시작하여 조합원간의 논의를 통해 네트워킹 스페이스 공간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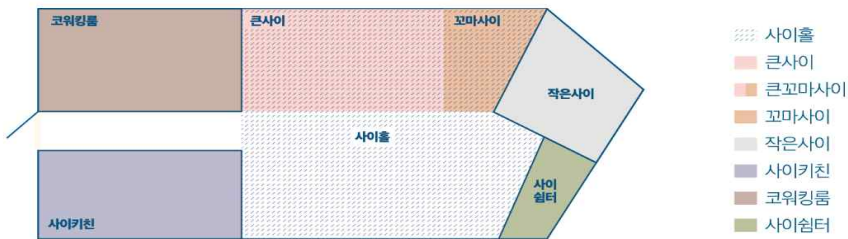
공간사이는 공간의 공유, 사람과 정보의 교류, 일상적 연대로 두 가지 목적으로 운영된다. ①Co-working Space 공간으로 취업준비생, 창업 준비자 및 프리랜서, 1인 기업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공간을 공유해서 일하는 곳이며, ②Community Cafe로 소모임, 강연회, 소공연, 소셜다이닝 등의 지역 커뮤니티의 욕구 실현을 위한 곳이다.



<그림 4-10> 공간사이 모습

공간사이는 사이홀을 중심으로 큰사이, 큰꼬마사이, 꼬마사이, 작은사이, 사이키친, 코워킹룸, 사이쉼터 등으로 조성 되어 있으며, 사이홀과 큰사이, 꼬마사이는 가변형 구조로 되어 있어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그림 4-11> 공간사이 공간현황

<표 4-4> 공간사이 공간 대관안내

공간명	사용인원	이용시간	이용가능장비	무료음료 제공
사이홀	60인 기준	기본 2시간 이상	빔프로젝터/노트북/유·무선마이크(2ea)&앰프/화이트보드	○
큰사이	24인 기준	기본 2시간 이상	빔프로젝터/노트북/화이트보드	○
큰 꼬마사이	36인기준	기본 2시간 이상	빔프로젝터/노트북/유·무선마이크(2ea)&앰프/화이트보드	○
꼬마사이	8인기준	기본 2시간 이상	40인치 모니터/노트북/화이트보드	○
작은사이	10인기준	기본 2시간 이상	50인치 모니터/노트북/화이트보드	○
사이키친	4-6인기준	기본 2시간 이상	오븐, 가스레인지, 냉장고, 싱크대, 기타 주방도구	×

(3) 연계활동의 성과

공간사이의 전체 대관 수입은 2019년 공유사무실 임대료 포함 약 50백만원 정도이며, 공유사무실 대관 수입은 1-12월까지 9개 기업 및 조직에서 약 9백만원 정도 이다. 2019년 대관현황은 1-12월 시민사회단체 2개소, 언론사 1개소, 3-5월: 일반기업 1개소, 5-12월: 시민사회단체 1개소, 11-12월: 일반기업 1개소, 12월: 일반기업 2개소 이다.

공간사이 대관 유형은 2019년 총 1,096건으로 가장 많으며 시장영역에서 871건, 제3섹터 179건, 공공기관 46건이다. 공간사이 대관은 시장영역에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표 4-5> 공간사이 대관 유형

(단위: 건)

구분	2019	2018	2017
공공기관	46	38	104
시장영역	871	700	769
제3섹터	179	178	40
총계	1,096	916	913

공간사이의 사회서비스 실적은 2019년 기준 8개 시민사회단체 및 기업 등에 약 2백만원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였다.

4.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 연계방안의 전문가 FGI조사

1) 조사개요

다음으로는 충청남도에서 공유경제의 활동 방향과 사회적경제기업들과의 연계 방향에 대해 공유경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8-9월 사이에 집단면접과 개별 인터뷰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대상자 선정은 공유경제 관련되어 공공기관의 종사자, 공유경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업가,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를 함께 수행하는 연구자의 집단을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내용은 공유경제 활동에 대한 본질적 목적과 가치에 대한 질문과 함께 공유경제가 추구해야 하는 경제활동의 방향에 대한 가치적인 내용의 전문가 견해를 도출하여 종합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경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연계협력의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향후 충남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이 무엇인지의 전문가 견해를 도출하여 종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통해 이론적 논의에서 구축한 공유경제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와의 상호보완관계에 대한 전문가의 구체적인 논의들을 도출하고 구성하여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현장에서 실질적 정책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표 4-6> 인터뷰 대상자 현황

유형	기관	직급
공공기관	광역자치단체 지원센터 담당자	대리 S
공공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센터 담당자	팀장 P
기업가	공유경제 기업	대표 L
기업가	공유공간 사회적기업	前 공동대표 J
전문가	광역자치단체 출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
전문가	광역자치단체 출연연구원	연구위원 H

2) 조사내용

(1) 공유경제의 개념과 활동 목적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공유경제의 개념적 의미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있으나, 최초 공유경제가 탄생한 배경적 의미에 천착하여 사회적 의미와 역할에 대한 고민들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즉 공유경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유희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의 문제를 사회적인 관계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목적과 가치를 갖고 있어야 하며 단순한 기술발전의 원인으로 변화된 경제활동의 형태로만 바라보기는 힘들다는 의미이다.

공유경제의 개념은 개인에게 전가되었던 사회적인 문제를 공동체가 관계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가 자원의 유효한 활용과 플랫폼의 활동방식으로 개념이 확대되고 변화하고 있다.(연구자 H)

따라서 현재 제기되는 공유경제의 한계와 부작용에 대한 논의들은 애초의 공유경제 가치보다는 플랫폼 경제와 노동을 통한 이윤창출에 집중되어 시장경제활동의 대안활동으로 의미를 상실하였다는 지적도 의미가 있다. 공유경제의 활동이 대안적인 경제활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소유경제와는 다른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공유가치에 대한 참여와 시민성, 그리고 경제행위 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일 것이라는 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 활동의 목적은 시장자본주의의 보완재라는 것에서 출발하였고 자원의 재순환과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위해 보다 사회적 방식의 활동형태를 보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취지는 좋지만 결국 영리추구의 목적 중심적이고 플랫폼 이윤추구로 방향이 가다보니 일반 시장경제활동과 차이는 없고 플랫폼노동자 양성 등 부작용만 나타나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전개가 되는 것 같다.(기업가 J)

공유경제는 공유되는 자산과 서비스의 경제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의 수요충족과 문제해결을 위해 공유적 가치를 활용하며 관계적 활동을 통해 사회적 소유의 공유자산을 확대하는 일련의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반적인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활동은 유사형태라 해도 본질적 공유경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질적이다. (지원기관담당자 P)

공유경제의 경제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수익활동의 비즈니스 모험만 쫓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유는 소유하는 사람들과 이용하는 사람들의 공유활동 참여라는 상호성에 기반한 시민성과 문화성이 내재되어야 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공유경제는 시민들의 참여와 시민성 강조와 함께 경제 행위 속에 스며들어 있는 윤리적 소비와 공급이었다.(기업가 J)

이러한 관점에서 공유경제의 활동은 일반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활동을 모두 포괄하기에 본질적인 가치에서 차이가 있으며 현재 거시적 관점에서 후자의 의미로 개념의 변화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공유경제를 바라보는 정책적인 포커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공공성과 주민복리의 가치를 고려하는 공공정책의 특성상 공유경제의 공동체적 의미로서 유희자원의 재활용과 사회적 관계망 및 신뢰 구축으로 지역사회문제의 해결 등의 가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의 개념이 확대 및 재생산되고 있는 과정에서 결국 연구활동에서 공유경제의 개념에 대한 포커싱이 필요하며 공유경제 정책활동 목적에 부합하는 개념정의를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공공정책적 의미에서 공유경제의 접근은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보다 많은 주민이 편익을 누릴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할 수 밖에 없다.(연구자 K)

이러한 공유경제의 활동에서 보다 공공적인 가치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주요한 가치에 집중할 필요는 있지만 지나친 사회적 가치나 목적의 강조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과 사회적경제와의 차이가 불분명해진다는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결국 공유경제의 경제적 활동과 운영의 장점을 극대화 하면서 공유경제의 본질에 요구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방식과 유인기제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공유공간 운영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한 목적은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초기 자금과 자산이 없는 청년들에게 관계자본과 커뮤니티의 힘을 빌려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결국 공유라는 행위는 이러한 사회적 관계와 유희자원 활용이라는 환경적 목적을 기본으로 하는 활동의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이외에 모든 공유 경제기업이 꼭 지켜야할 원칙이나 목적이 있을까하는 의문은 든다. 이러한 가치들이 강조 된다면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와의 차별점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기업가 L)

이러한 공유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결국 공유형태의 경제행위가 아니라 공유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논의하고 이익을 분배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유경제의 가치는 단순한 관계만 연결해주는 역할에서 벗어나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자산의 공유활동을 만들어내고 이에 따른 이윤까지의 공유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플랫폼 구조를 통한 중간 수수료의 이윤창출의 공유경제는 특히 공공적 차원에서 구분과 지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공유경제 활동은 개인들의 물품공유에서 기업이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자원을 공유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하지만 공유행위의 형태나 공유를 통해 일어나는 이윤이 소수나 개인에게 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활동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주요한 운영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공유되는 것이 중요하다. 에어비엔비처럼 중간 플랫폼의 역할을 통해 수수료만 가져가고 책임은지지 않는 구조와는 구분이 필요하다.(지원기관 담당자 S)

(2) 공유 경제 활동이 추구하는 방향과 형태

공유경제의 본질적인 활동의 형태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고자 하였다. 우선 공유경제가 추구해야 할 원칙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유경제가 갖는 내재적인 한계와 비판의 논점은 경제적 이윤추구의 방향성으로 인해 사회적 관점과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다수였다. 경제행위가 플랫폼 비즈니스의 형태라고 해서 모두 같은 공유경제의 형태가 아니라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소유권과 이윤창출의 배분에 대한 과정, 결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존재한 자산들에 대해 공공적 관점에서 구성원들에 의한 사회적 소유와 운영의 생활양식에 대한 고려와 확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유경제의 개념자체는 비록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가치중립적일 수 있고 절대 선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며 또 다른 형태의 소유권으로 비화되고 지나치게 부가가치 창출에 포커싱되어 사회적 가치는 배제된 채 경제적 이윤추구로 치우치고 기존 경제주체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이러한 변화된 과정의 중심에는 결국 공유경제가 갖는 사회적 가치의 관심과 상실에 대한 문제가 핵심이다.(연구자 H)

공유경제의 한계로 지적되는 본질적인 점은 유희자산이나 서비스가 결국 플랫폼에 의한 사적소유가 되고 수익사업 창출수단으로만 남아 새로운 경제적 폐해들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현재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지위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결국 플랫폼 비즈니스의 형태를 넘어서야 하며 공유된 재화만 활용하여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소유의 형태로 진화되어야 한다.(기업가 L)

이와 같은 시각에서 공유경제는 공유활동의 범위에 대해 단순한 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유적인 생활양식으로 이해하여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의 수요발견에서부터 가치와 이윤이 공유될 수 있는 사회 전반에 대한 구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공유경제의 가치는 재화나 서비스의 공유활동뿐만 아니라 수요의 발견, 의사결정의 과정 및 자산들의 공유를 통한 하나의 집합적 생활양식으로 의미해야 한다. 소유가 아닌 공유의 가치에 대한 실천이 강조되어야 하며 이는 이용자와 공급자의 모든 주체들이 참여해서 상호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공적 가치를 내재해야 한다.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자가 분리되고 자본에 의해 재화가 서비스가 전달 받는 형태보다 경제활동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하고 재화의 가치가 공유되는 과정이 중요하다.(기업가 J)

이와 같은 공유활동의 사회화는 공유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인한 공유도시, 공유사회의 이론적 논의들과 연결된다. 대표적으로 McLaren & Agyeman(2015)은 공유 패러다임을 주장하였으며 모든 자원 및 환경을 공유의 대상으로 보고 소비 및 생산활동 측면을 넘어 단순한 이윤추구가 아니라 다양한 동기에서 공유가 이루어지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변화를 의미함을 주장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결국 공유경제는 경제활동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흐름에 주목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 공유경제 한계의 극복을 위한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아래 공유경제 기업가의 언급처럼 공급자와 사용자의 신뢰관계가 담보되고 확보되지 않으면 공유활동 그 자체에 사람들의 불신이 쌓이면서 다시 소유중심의 경제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공유가치의 회복과 성찰이 요구되는 것이다.

플랫폼비즈니스를 포함한 공유경제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신뢰관계가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용한 서비스가 허위정보이거나 사용자가 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에 직면하게 되면 공유경제를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다. 개인은 모두 공유경제에서 공급자이면서 수요자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신뢰 형성은 가장 우선의 가치가 되어야 하며 현재의 공유경제 비판이나 한계의 중심은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가 L)

공유경제가 플랫폼비즈니스와 구분될 수 있고 구분되어야 하는 점은 경제활동에 대한 본질적 목적과 바라보는 관점인데, 공유경제는 태생 자체부터 기본적으로 자원의 재활용문제, 공동체 중심의 관계와 신뢰 회복, 사회적 배재자에 대한 참여확대의 가치를 내재해야 한다. (지원기관 담당자 P)

공유경제의 개념적 범위가 광범위 하고 앞서 거론한 바처럼 공유경제의 방향성과 포커싱이 필요 하다면 공공적 차원에서 공유경제의 정책적 지원방향이 수립되어야 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활동과의 결합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9)의 경우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주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공유경제를 지역 문제점 해결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정부의 공공정책적 차원에서 다루는 공유경제의 영역에 대해 영역을 구분한 Codagnone & Martens(2016)은 지역사회의 공공정책의 차원에서는 상업적 공유의 영역보다 비영리적, P2P의 차원으로 구성되는 공유경제 활동 영역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방차원의 소규모 플랫폼들이면서 정부의 사회혁신정책의 대상으로 적합함을 강조한다(한국행정연구원, 2018). 결국 상업적 형태에서 개인 및 기업 간의 공유활동의 활성화는 다양한 불필요한 규제들의 수정과 기존 업계와의 충돌에 대한 제도적 보완적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한 반면, 지방정부의 정책차원에서 공유경제의 접근은 사회혁신의 잠재력을 갖고 있으면서 공익적 가치에 부합하는 지역차원의 플랫폼에 집중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공유경제의 모든 기업이 사회적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회적 관계와 신뢰를 활용해 유희자원의 효과적 활용이 기본적인 공유경제의 배경이고 여기서 나아가 사회적 가치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 사회적 가치나 목적 수행의 공유기업의 별도의 형태라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추구를 위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경우는 그 가치에 부합하는 공공적 활동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공유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활동은 단계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기업가 L)

공유경제의 마케팅 행위방식과 플랫폼만 이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악용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에어비앤비는 원래 유희주거공간의 재활용에서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는 게스트하우스의 시각에서 숙박공유의 형태만 변경된 마케팅 활용만을 의미하는 것 같다. 모빌리티 서비스도 유희차량의 다양한 효과적 활용의 목적이 아니라 차량만을 공유하는 마케팅의 방식만이 남아있다. 결국 원래 추구하는 공유가치를 어떻게 경제적 방식에 접목하는 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기업가 J)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경제활동의 공공정책적 방향은 국제적, 초 광역적의 거시적 접근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지역적 차원에서 수요와 욕구가 무엇이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고민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 이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과 공유경제 구현에 대한 방식의 도입의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공유경제의 여러 형태들이 있고 모두 공유경제로 볼 수 있지만 결국에 나의, 우리의 공유 기업활동은 어떠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방법론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공유경제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컨셉이 잡히면 이를 구현하는 방식들에 대한 효과적인 비즈니스 활동의 고민이 순서가 되어야 한다.(기업가 L)

지역사회에서 공유경제의 활동과 문화를 확산하는 것은 지역차원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자원과 인재, 자산의 공유에 대한 참여적 설계를 기반으로 하여 실질적인 공동의 활용과 이에 대한 결과물의 공유까지 커뮤니티 차원의 경제활동 접근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서 기존 소유경제의 대안형태로 지위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형태의 공유경제는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적 소유의 형태로 확산이 가능할 수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공유경제의 우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지역차원의 접근을 통한 해결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공유경제의 한계로 지적되는 본질적인 점은 유희자산이나 서비스가 결국 플랫폼에 의한 사적 소유가 되고 수익사업 창출수단으로만 남아 새로운 경제적 폐해들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현재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지위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결국 플랫폼 비즈니스의 형태를 넘어서야 하며 공유된 재화를 활용하여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소유의 형태로 진화되어야 한다.(기업가 J)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공유경제의 추락에 대한 우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공유하는 형태의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생산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기나긴 시간동안 접촉과 교류활동을 접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팬데믹현상은 지속될지 모른다. 하지만 구성원간 신뢰시스템이 구축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오히려 사회적관계 활동이 강화될 것이다. 팬데믹 현상에서도 사회활동을 수행한다면 최소한 서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사회활동이 재편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유경제가 사라지기 보다 범위와 형태가 변화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기업가 J).

(3)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연계 협력 방향

지역에서 공유경제가 갖는 본질적인 환경적, 사회적 가치 측면에 대한 강조는 사회적경제와의 차별점과 함께 연계 및 협력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도출로 나아간다. 성남, 시흥, 안산 등의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공유경제 정책지원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으며 충청남도를 비롯한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사회적경제과 등 전담부서에서 공유경제의 정책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 차원에서 대안경제의 형태로 경제양극화 극복 및 사회 효용성 극대화의 공통된 목적달성을 위한 연계협력의 방향들은 이미 지역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방향이기도 하다.

사회적경제와 연계 논의 및 정책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현재 공유경제가 갖는 대안경제로서의 한계가 부각되기 때문이다. 플랫폼 형태의 비즈니스 활동의 변화로만 공유경제의 본질적 목적활동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현 시점에서 공유경제에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와 신뢰중심이라는 행위방식과 사회적, 환경적 가치추구라는 본질에 회귀하는 것이다. (연구자 K)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한계로 지적되는 경제적 성과와 지속가능성의 측면들이 공유경제의 방식을 통해 공유경제기업들과 함께 협력하게 된다면 본래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고 비즈니스적 측면에서 사회적 움직임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 있다. (지원기관 담당자, S)

지역에 대한 공통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두 경제활동간의 연계활동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상호간의 단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의 도출이 보다 효과적이며 적합한 정책지원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경제적 활동 방식과 운영의 원리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두 영역의 결합이 아니라 장점을 접목하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영역 간 연계에 대한 방향으로 공유경제에서는 그동안 한계로 지적되었던 사회적관계 및 가치에 대한 회복에 대해 이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의 활동을 접목하는 형태와 함께 사회적경제에서는 공유경제 플랫폼 기반의 경제활동과 운영형태를 지역사회의 수요 충족과 문제해결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의 구체적인 고민과 방향이 필요하다.

공유경제의 다양성을 부정할 수 없지만 공공적 목적과 정책활동의 가치적 측면을 고려하면 공유경제가 갖고 있는 사회적 측면 즉, 유희자원의 활용 극대화를 비롯한 사회문제해결을 강조할 수 밖에 없고 이 지점에서 사회적경제와 가치적 동일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융합과 연계의 지점이 보일 수 밖에 없다. 결국 공유경제 기업활동에 지역사회 활동과 사회적가치를 내재하고 역량을 키우는 방법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의 공유활동의 참여와 유인의 기제 등의 방향이 될 것이다. (지원기관 담당자 P)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교집합이 발생하고 확산된다면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 기업간 구체적 협력활동의 지점을 고민해야한다. 결국 공유경제의 현재 제기되는 한계를 사회적경제 활동 방식이나 가치를 통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사회적경제는 공유경제 방식의 활동에 어떻게 참여하거나 주도할 수 있을 것인지의 정책적 방향의 지점이다. (연구자 H)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적 가치창출을 위한 공유경제의 활동은 경제활동과 함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민을 활동 속에 내재하여 보다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지역사회와 구성원들의 수요충족을 위한 다양한 지역 공공자산들에 대한 효과적 활용과 운영을 위해 플랫폼 기반의 공유활동을 주요한 사업영역으로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역사회의 이해도가 높고 기업활동의 합목적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공유경제의 주요한 활동 주체로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리매김이 가능할 수 있다.

지역의 자산에 대한 사회적 소유를 기반으로 구성원들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활동으로 사회적경제가 확산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목적활동을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공유경제의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다. 결국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연계점은 사회적 가치에 기반 한 사회적 소유의 형태에서 발견할 수 있다. (기업가 J)

구체적으로는 공유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체가 공급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신뢰성이 중요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 특히 공공플랫폼의 형태에서는 관련된 활동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회적경제주체의 도입을 적극 고려해볼 수 있다.

공유경제에서 제기되는 한계와 문제점은 상실된 사회적 관계, 신뢰 등의 가치이며 이윤 추구만을 위한 플랫폼 운영에 있다면, 결국 플랫폼 운영의 방식과 주체적 문제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제공자와 이용자간 관계자본을 강조하고 환경적, 사회적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적절한 주체로 상정될 수 밖에 없다. (연구자 H)

결국 공유경제의 비즈니스 모델이 공공적 가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기업 자체의 비즈니스 활동을 변화시키기보다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과의 연계적 방향을 공공정책적 측면에서 유인해줄 필요가 있다.

현재의 플랫폼 비즈니스 형태로 자신의 이익추구하는 공유경제기업의 경우 배달의 민족이 소상공인을 위한 선한활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 이윤극대화를 위해 고민한다. 이러한 공유경제 형태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위해 이윤추구를 버릴수 없다는 점에서 비즈니스모델 자체가 선하게 갈 수 없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활동을 유인할 수는 있다. 대표적인 형태가 클라우드 형태의 플랫폼이 추구하는 사회적가치활동이라 할 수 있다.
(기업가 L)

(4)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

우선 충청남도에서 공유경제의 공공적, 사회적 가치의 추구 유인을 위해서 신규 공유경제 기업 활동가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강화와 지역사회와 협력의 방향들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등의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공유경제 기업가들의 사회적 가치추구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정책적 차원에서 보자면 공유경제 활동의 확산은 사회적 문제해결과 공공적 가치에 부합하는 기업활동을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공유아이템을 갖고 창업하고자 하는 창업가를 중심으로 사회적가치의 강화를 통해 수익창출 뿐만 아니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 방향과 아이템 개발을 유인할 수 있다. (지원기관 담당자 S)

그리고 공유경제의 플랫폼이 관계망, 신뢰 등 보다 사회적인 속성을 갖출 수 있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활동 범위와 지역공동체 친화적 접근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 활동범위가 넓을수록 현장의 수요에 접근하기 어려우며 초기의 구축비용이 대규모로 소요된다는 점에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의 접근을 위한 공유경제의 정책지원 방향은 에어비앤비나 우버같은 일반적 플랫폼기반 접근경제가 아니라 마을과 지역단위로 한정되는 커뮤니티형 공유경제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지역유희자원을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합하여 지역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에 의해 공유될 수 있는 경제모델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국 전국이나 광역단위의 공유경제 활동이 아니라 유사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커뮤니티 중심의 사회적 관계성과 가치도 부합하면서 작은 성공사례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지원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기업가 J)

그리고 공유경제의 지역공동체 중심의 경제활동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플랫폼 비즈니스의 활동과의 차별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특징적 형태를 통해 이윤추구와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문제해결의 대안적 흐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충남형의 공유경제 활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유경제활동의 과정과 형태에서 연관된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경제활동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구조와 과정의 형성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

공유경제 활동 자체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설계하고 작동하는 공공적 의사소통의 행위를 실현할 수 있다면 사회적 가치는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공동체성이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공유경제의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의 대안적 접근이 가능하다. 공공정책의 지원은 무작정 공유형태 활동기업의 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공유활동의 구조와 공유의 운영구조 및 참여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공유자산 형성 등에 대한 매칭 등의 방향이 효과적일 것이다. (활동가 J)

3) 분석 소결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현장에서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연계와 협력의 사례조사와 함께 관련 전문가들의 인터뷰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태동기의 충남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정책지원의 방향과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위한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례조사와 인터뷰의 질적연구를 통한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의 공공적 가치 제고와 확산

전문가 인터뷰의 내용은 공유경제의 한계와 비판의 극복은 본래의 목적에 대한 인식적 변화가 필요함을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지원의 시각에서 공유경제의 공공적 가치에 대한 강조를 통해 새로운 지역사회혁신과 활력의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결국 정책적 차원에서 공유경제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공공영역으로의 진입과 공유경제의 사회적 가치 확산의 중요함에 대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경제의 공공적 가치의 강조와 사회혁신의 활동 방향은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력 및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지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공유모빌리티 서비스기업인 쏘카와의 협력사례나 충남평생교육진흥원 공유로 서비스의 사회적경제기업 활용사례 등에서도 비록 초창기적 연계형태라 하더라도 이러한 형태들이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조금씩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는 관련된 제도가 진행되어 이에 대한 중간지원조직 등의 지원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유경제와의 협력적 활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깃이코노미나 접근경제 등 단순한 이윤창출로 인한 부작용 및 한계극복의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정책사업에 대한 공유경제의 적극 활용은 그 자체로 공유경제기업들에 대한 공공시장의 형성과 함께 공공적 가치창출의 인식 개선도 함께 추구할 수 있다.

(2) 지역사회 수요충족을 위한 활동

지역사회 공유경제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역과 구성원들의 면밀한 수요검토를 통해 이를 충족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혁신의 접근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의 접근을 살펴보았다. 대표적으로 공유카풀 시스템을 활용한 셰어앤셰어나 청년창업과 청년문화확산을 위한 대전시의 텀링 사례, 학습공간이 필요한 수요충족을 위한 공유로의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들 사례는 모두 사회적기업의 사례이기도 한데, 공유경제의 아이템일과 운영방식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들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로 연계방향의 구체적 양태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공유경제의 사회적 가치 활동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불특정다수가 활용하는 공유서비스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친밀하고 신뢰하는 구성원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유서비스가 더욱 효과적인 형태임을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팬데믹 시기에서 이와 같은 지역 중심의 로컬텍트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공유경제 활동의 방향이 매우 유의미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뷰의 결과는 지역 공동체의 수요와 니즈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공유경제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공유경제활동의 주체로 고민할 필요성의 의견들을 종합할 수 있다.

(3)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경제 활용

공유경제의 운영방식과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의 접근을 도모하는 사례로 공유공간을 운영하는 공간사이의 사례와 함께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유경제기업과 연계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들 사례는 비록 지엽적이고 초창기의 수준이지만 공유경제의 활동방식이 많은 비용이나 자본을 들이지 않고서도 사회문제 해결의 주요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하겠다. 특히 공간사이는 공간공유 플랫폼의 활동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공간수요의 도출에서부터 기획, 실행과 구축을 비롯해 현재의 운영형태까지 협동조합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의 인터뷰는 생산과 소비의 경제활동에서 공유플랫폼의 활용은 다양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크라우드펀딩을 비롯하여 교통약자들을 위한 모빌리티, 네트워킹을 위한 공간 등의 공유경제 방식의 대안적 해결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문제의 공유경제방식의 활용은 지역수요에 기반 해야 한다는 점에서 앞서 제시한 지역수요 충족의 방향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제5장 충남형 공유경제 활성화의 방향과 과제

1. 충남형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1) 공유경제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강화

공유경제의 근본적인 한계는 태동배경이었던 환경을 비롯한 사회적 문제의 접근을 통한 대안적 경제활동과 사회적 관계 및 신뢰 기반의 운영형태의 가치들을 상실하고 플랫폼 기반의 단순한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변화 및 이에 대한 재생산의 확대에 기인한다. 현재의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은 온오프라인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급자와 이용자에게 서비스와 제품을 연결하여 사적소유의 권리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활동으로만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론적 논의에 따르면 이러한 활동은 공유경제 외부적 양태이며 거래행위의 방식만을 의미한다.

결국 이와 같은 플랫폼의 거래방식이 어떠한 사회적 동기와 가치에 대한 합목적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이 필요하며 앞서 제시한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공유경제의 한계가 부각되는 시점에서는 더욱 필요성이 부각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Lessig(2008) 등 공유경제의 이론들을 통해 제기되었던 자원 소유에서 공유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지역사회를 비롯한 사회적가치의 추구는 공유경제가 진정한 전통적 경제행위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며 현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임을 앞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유경제의 정책적 도입은 공공적 특성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혁신의 접근을 도모하고 있다. 박철민(2019)은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의 공유경제 인식은 한 자원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둔 공유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유희상태의 공공시설물을 지역민들에게 개방하거나 구비된 공공 물품들에 대한 주민대상 재활용을 통해 지역의 수요충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아가 충청남도를 비롯하여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 등은 공유경제활동을 사회적경제와 접목시키면서 공유경제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부각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광범위한 공유경제의 활동에 대한 포커싱에 따른 개념화가 필요하며 본 연구는 공유경제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사회적가치에 주목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정책적 현황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앞서 사회적경제와의 개념적 연관성을 위해 공유경제의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5가지의 사회적 가치 요인들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충청남도에서 공유경제의 정책지원방향은 지역자산의 공유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과 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회적 측면의 강조를 통해 정책활동의 공공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와의 차별점을 두기 위한 플랫폼 기반의 접근경제 방식에 대한 공유경제의 활동 특성을 강조하면서 무가치적인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가치를 내재한 활동의 목적성을 부여하는 방식의 정책적 유인의 방향이 필요하다.

공유경제의 사회적 가치 요인들과 분석된 내용을 종합하여 충청남도에서 사회적가치 기반의 충남 공유경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사회적 가치기반의 충남 공유경제의 정책 방향

첫째, 공유경제의 정책방향은 사회적 가치활동 기반으로 협력적 생산과 소비를 지향한다.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재화들에 대해 사회 연결망 형성 등 유사한 생활방식간 협력적 활동(생산,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적 방향을 의미한다.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 및 공동체 조직들을 비롯한 공동의 수요자들이 공동체와 사회적가치 활동 중심의 협력적 생산과 소비의 주체임을 의미한다.

둘째, 지역단위로 사회적 문제해결과 수요충족을 위한 공유경제 방식의 접근을 지향한다. 우선 충남의 공유경제 지원정책의 방향은 글로벌 및 전국적 단위의 공유활동이 아니라 마을과 지역단위의 수요충족과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의 구성원들이 개별적 소유와 각자 도생의 방식으로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단위의 수요와 문제들에 대해 공동으로 발굴 및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유경제 방식의 활동을 지향한다.

셋째, 공유플랫폼의 사회적 운영을 지향한다. 공유경제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은 소수의 글로벌 IT 벤처나 스타트업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서 주요한 전략과 업무 및 이윤들은 소프트웨어 업체가 독식하는 현상에 따른 새로운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였다(성영조, 2018). 따라서 공공정책적 차원에서 공유플랫폼에 대해 소수의 기업 독점화가 아니라 공공적 차원의 운영방식에 대한 전환과 정책적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유경제의 핵심자원인 공유자산에 대한 사회적 목적추구의 운용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에어비앤비처럼 지역사회의 유허자원 및 공유자산에 대해 개별 플랫폼의 독점운영보다 사회적목적을 위한 공유자산의 활동 방향이 필요하다. 공유공간, 차량, 서비스 등 공유자산들이 플랫폼의 이윤 추구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공적 목적에 부합하고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기 위한 공유경제의 방향이 필요하다.

2) 공유경제의 사회적경제 연계 방향

공공적으로 공유경제의 사회적가치를 회복시키고 충남의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의 사회문제의 효과적인 접근을 위해 정책의 접근은 사회적경제의 정책적 방향과 유사한 점을 갖고 있다. 앞서 살펴본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개념적 연관성은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공유경제의 사회적가치 형성을 통해 플랫폼중심의 이익창출 경제행위의 한계 극복의 측면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요구된다. 사회적경제는 경제행위에서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며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수요충족과 문제해결을 위한 목적을 가진 조직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역할과 기능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유경제의 관계망에 의한 혁신적 경영방식은 경제적 성과에 미흡한 사회적경제조직들에게 하나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연계의 당위성은 크다고 하겠다.

위에서 제시된 사회적 가치기반의 공유경제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가치 기반의 협력적 소비와 생산의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활동들이 요구된다. 협력적 소비와 생산의 경제활동은 조직화된 생산이나 소비의 주체들에 의해 협동적 플랫폼에 의해 활동이 가능해지는 비즈니스의 모형으로 유럽위원회(EC)는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상호작용과 신뢰를 장려하며 개방성, 포용성, 공동성을 포함한다(한국행정연구원, 2019). 앞서 전문가 의견처럼 사회적경제조직들은 협력적 소비와 생산 중심의 공유경제활동에서 서비스의 공급자, 사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중개자로서 개념적 부합성을 가진다. 공공정책적 차원에서 이윤추구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공유경제 플랫폼을 활용해 협력적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는 활동의 주체로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책 대상화는 공공성의 정책부합성과 함께 공유경제 활성화의 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정책적으로 공유경제를 통해 창출하고자 하는 가치를 사회적 동기와 목적에 초점을 맞춘다면 공유 주택, 카셰어링, 공유자전거 및 주차장 등을 수행하는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주체로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단위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이라는 사회적 동기에 대한 공유경제의 활동은 해당 지역사회의 문제와 수요를 가장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체감하며 해결하기 위한 미션을 갖고 활동하는 주체가 핵심이다. 플랫폼활동을 영리추구의 도구로 활용하는 접근경제나 플랫폼경제의 기업이나 정부의 접근은 이에 대한 당위성에 한계가 있거나 세밀한 파악과 이에 따른 정책적 처방에 한계가 있다. 과거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로 인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3섹터와 사회적경제가 주목받은 것처럼, 지역단위에서 사회문제의 해결에는 지역의 주체들 및 주민들로 구성되고 지역의 가치에 부합하려는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적 접근에서 공유경제의 활동이 보다 효과적인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수요충족의 방향과 접근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주체로 사회적경제조직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사례에서도 공간사이의 경우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간적 요구와 문제대응을 위한 공간공유를 사회적기업에 운영하는 사례이며 산업단지 노동자의

수요충족을 위한 셰어앤셰어 등의 사례 등 다양한 형태에서 참여가 가능하고 정책적으로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셋째, 플랫폼의 사회적 운영은 공유경제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여 협력적 소비활동이 발생하는 행위에서 플랫폼의 역할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박건철이상돈(2016)은 공유경제 활동의 영리나 비영리 등 활동의 성격과 방향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준거는 디지털 플랫폼의 성격과 운영주체라 보고 있다. 영리추구 형태의 플랫폼 기반의 경제활동도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한계극복을 위한 공공적 가치 추구의 공유경제의 정책방향은 사회적경제조직과 같은 비영리적 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플랫폼의 형태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의 사회적 운영은 플랫폼의 운영 목적 자체가 지역공동체 전체의 효용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구성원간 신뢰와 관계성에 초점을 두며 사회적 환경적 목표에 뚜렷한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지역사회 중심의 물물 교환이나 플리마켓, 공동체 주방이나 정원, 타임뱅크와 같은 활동들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례들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운영은 플랫폼 경제활동의 목적과 함께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민주적 의사소통과 이를 추구하는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는 방식 또한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참여가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매개적 역할만을 추구하는 영리추구형과 달리 앞서 전문가의 의견처럼 협력적 생산과 소비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모두 플랫폼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상호신뢰에 기반한 공동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의 사회적 운영은 구성원간 두터운 신뢰를 중심으로 이타적 관계를 형성하며 충성도 높은 고객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공유활동의 장점을 가진다(WEF, 2017).

넷째, 공유자산의 사회적 목적 추구의 접근은 공유경제가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공유된 자산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활용의 관점을 의미한다. 결국 지역사회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공유자산들을 어떠한 가치를 갖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영리추구의 형태는 이윤창출을 위한 도구적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며 사회적가치의 추구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및 사회의 회복과 발전의 가치를 도모할 것이다. 특히 지역주민과 공동체의 수요충족 및 문제해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지역사회의 공유자산은 활동의 중요한 핵심자산이라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조직에 의한 공유경제 활동의 연계적 근거가 존재한다(김중수 외 2012).

지역의 유희공간은 주민을 위한 관계와 복지의 공간을 재탄생될 수 있으며 유희차량이나 경험많은 노인들의 기술적, 사회적 역량은 지역사회를 위한 최고의 자원봉사자로 재탄생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을 통해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사회적 목적에 따라 지역의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자산에 대해 주민들과 공동체 의한 사회적 소유와 운영의 사례들이 도출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공유자산에 대한 활용의 플랫폼이 지역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조직이 공급자가 되어 주민들의 수요를 매개할 수 있다. 결국 공유경제 운영을 위한 공유자산이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활용되는 것이 공공적 가치라는 시각에서 사회적경제조직 활동의 도입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커뮤니티 중심의 공유경제 확산 방향

(1) 지역공동체 차원의 공유경제활동의 필요성

공유경제의 사회적 가치 회복과 강화를 통해 경제활동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정책적 차원의 방향은 사회적경제활동과의 긴밀한 연계의 지점이며 이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된다. 특히 공유경제 활동이 사회적 동기에 의한 탈집중화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경향성은 단순한 이윤창출의 플랫폼 형태의 경제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중심적이며 보다 적극적인 지역 구성원들의 참여와 시민성을 요구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중심의 사회적 동기는 수동적 차원에서 머물던 소비자들을 적극적 이용자로 탈바꿈하여 공동생산의 변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Benkler, 2004; 이상호, 2019). 특히 아래의 <그림 5-2>을 살펴보면 공유경제의 지역적 범주와 행위의 양태에 따라 공유경제활동을 유형화한 것이다. 특히 사회적 가치창출의 차원에서 공유경제의 추구모델은 호혜성에 기반하여 지역화를 도모하는 공유경제활동을 통한 지역의 회복력의 차원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5-2> 공유경제활동의 방향성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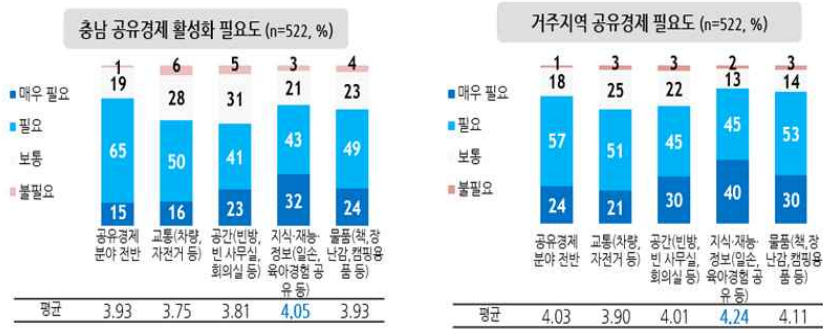
하지만 이와 같은 주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사회적 동기는 구성원들이 직접 체감하고 호혜적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는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현장에서 체감하며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유경제가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 또한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감소와 함께 저성장으로 인한 유희공간과 자원의 확대는 소유보다 공유가 새로운 지역사회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지역차원에서 공유경제의 사회적 가치활동은 더욱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이영범, 2016).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역성장의 세계적 경제질서의 변화와 이에 따른 유희자들의 확산과 함께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안전망 위협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소유보다 공유의 패러다임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시기이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공유경제를 넘어서 공유도시의 논의가 촉발되었는데 공유도시는 경제적 측면의 활동을 넘어서 지역의 기술, 기반시설 그리고 인적·사회적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문제의 해결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견인을 도모한다. 특히 공유도시는 개인이 공동체 내에서 공유가능한 자원을 증가시켜 경제적 활력을 형성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사회참여와 사회적 활동을 도모하여 결국 다양한 자원의 공유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사회적 불균형 및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 중심의 공유경제활동은 개인의 사적 이익의 추구보다는 공동체와 지역사회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며 상호교류에 의한 관계망을 강조함을 통한 사회적 차원의 삶의 질 개선에 분명한 초점을 갖고 있다. 결국 공유경제의 사회적 동기와 가치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과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활동은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중심의 공공지원을 통한 정책활동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커뮤니티 중심의 공유경제 활성화의 방향성에 대해 공유경제 기업가를 비롯한 다수의 전문가 인터뷰의 결과에서도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활동을 충남에서 공유경제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연계의 초점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커뮤니티 중심의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연계활동을 통해 다양한 지역의 수요와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플랫폼 기반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충남의 사회적 양극화 및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대안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민들의 인식 또한 공유경제의 지역사회의 접근의 필요성이 높다. 송영현(2019)의 연구에 의하면 충청남도 도민들은 광역적 차원보다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유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리고 공유경제의 전반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응답자

개인의 거주지역에 대한 공유경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어 충남도민 또한 공유경제의 활동이 글로벌, 광역적 차원보다는 지역과 마을의 수요에 부합하는 형태의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충남에서 공공정책적 차원의 공유경제 활동은 이러한 도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그림 5-3> 공유경제에 대한 필요성과 활용도(도 전체 및 개인 거주지역)
자료: 송영현(2019)

(2) 커뮤니티형 공유경제의 추진기반 구축

충남에서 커뮤니티형 공유경제의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지원의 근거마련과 함께 추진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앞서 사례 및 인터뷰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2019년 제정된 ‘충남 공유경제 촉진 지원조례’에 일반적인 공유경제 지원 내용보다 지역사회 및 커뮤니티 기반의 공유경제활동의 지원에 대한 내용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조례에서 보면 우선 제2조 정의 부분에 공유경제의 일반적 사회문제 해결을 거론하고 있는데, 지역기반의 문제해결과 같은 지역사회 및 지역공동체의 수요충족, 문제해결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제6조에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에 1항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보급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유단체 및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8조)만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기업과 함께 지역특성과 마을(커뮤니티)유형의 공유기업 및 단체에 대한 세분화를 통해 마을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유기업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공유경제의 커뮤니티 기반 활동지원의 정책방향은 이미 2018년의 충청남도의 다양한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다. 2018년 수립된 ‘더 행복한 충남 경제발전전략’에서는 공유기반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전략이 포함되어 있으며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2차 5개년 계획’에서도 사회적경제 기반 공유경제 활성화 플랫폼 구축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기반 공유경제활동 지원을 제시한 계획들의 추진근거를 확립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조례의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공유경제 정책지원 계획 수립, 공유경제의 기업발굴, 공유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관련 전문 인재양성과 민관거버넌스 구축운영, 지역기반 공유플랫폼 운영 등의 충남 공유경제 정책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현재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과 내 사회적기업팀에서 공유경제 아카데미 운영,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의 정책업무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추후에 사회적경제과 내의 공유경제 정책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팀단위 조직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며 다음 <표 5-1>과 같은 업무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5-1〉 충청남도 공유경제 전담부서의 업무(안)

부서명	주요 업무
공유경제 지원팀 주요 사업(안)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충남 공유경제 촉진위원회 운영 -지역사회 공유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 운영 -공유경제 아카데미 및 통합교육사업 운영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 운영 -지역기반 충남공유 플랫폼 운영 지원 -공유경제 인식확산 및 포럼 개최 -충남 공유기업 성장지원과 지도점검 -공유기업 및 단체 청년일자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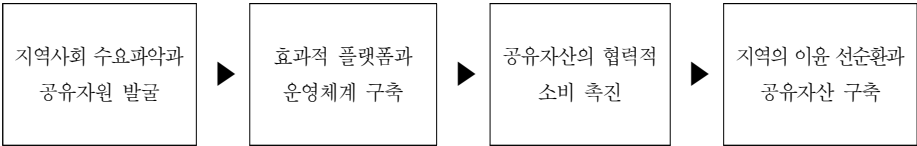
이와 함께 현재 충청남도에서 추진중인 공유경제 관련 정책사업들에도 커뮤니티 및 지역사회 기반의 활동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유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사업이나 공유아카데미의 지원사업의 정책설계와 실행시 지역기반 및 마을공동체 밀착형의 공유경제기업 발굴과 교육활동의 지원, 마을공동체 조직과 연계사업에 대한 정책지원 등 마을공동체 기반의 공유활동 구축을 위한 지원의 방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 영리형의 플랫폼경제나 접근경제를 수행하는 공유경제기업들도 이와 같은 충청남도 공공정책사업의 지원과 협력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대상의 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들 기업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업과의 컨소시엄 등 연계협력 활동의 지원사업을 별도로 설계하여 추진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이다.

(3) 충남 마을형 공유경제 지원 정책과 프로세스

현재 추진중인 충청남도의 공유경제 정책사업들에 대해 마을공동체 기반의 방향성을 유인하는 것과 함께 별도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충남 마을형 공유경제 지원사업’을 통해 이를 지역사회 차원의 선도적인 충남의 핵심적인 공유경제 정책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충남 마을형 공유경제 지원사업’은 다음 <표 5-2>와 같은 프로세스로 충남의 지역사회와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공유경제기업을 지원하는 맞춤형의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표 5-2> 충남 마을형 공유경제 지원사업의 프로세스



충남 공유기업 및 단체의 지원은 사업의 내용에 따른 통합적인 보조금이 아니라 위의 각 단계별 육성사업들을 세분화하여 사업의 내용에 부합하는 정책지원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육성에 효과적이다.

첫째, 지역사회 문제발굴과 수요파악은 각 지역마다 유휴자원 및 필요자원들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공유자원을 구체화하는 사전단계의 활동이다. 외향적으로는 활동의 성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나 지역기반의 공유경제 활동의 수행을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영역으로 이에 대한 공공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효과적인 마을 공유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을형 공유플랫폼과 운영체계의 구축지원으로 충남의 통합적인 공유플랫폼 보다 마을 및 지역사회의 자산들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수요를 충족할 수 있기 위한 보다 지역기반의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은

지역문제에 접근하고 사회적 가치활동을 수행하는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과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공유기업 및 IT기업과 컨소시엄의 형태로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통적인 플랫폼의 틀은 광역차원에서 구성하되 구체적인 콘텐츠와 운영을 시군단위로 수행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여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공유자산의 협력적 소비 촉진은 지역사회와 공유경제기업들이 정책가치에 부합되는 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협력 소비를 촉진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단계의 지원으로 실제 마을에서 공유 경제활동을 이끌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의 공유기업 및 단체 지원사업과 같은 운영에 관련된 보조금의 지원과 함께 공유경제 인식확산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사업 및 운영 컨설팅 등의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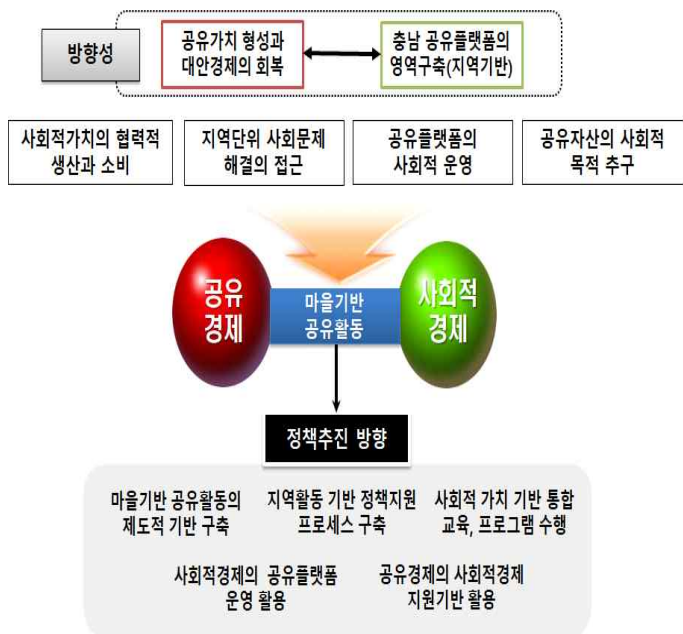
넷째, 지역의 이윤순환과 공유자산 구축은 제도적으로 마을형 공유자산플랫폼을 통해 형성된 이윤과 소득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선순환되고 지역의 공유자산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유인을 의미한다. 근본적으로는 마을형 공유자산플랫폼의 운영주체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조직이 되어 지역사회 및 주민들에게 이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영국의 ‘지역주권법’의 사례처럼 생성된 이윤에 대해 공유활동의 주체가 지역내 공유의 공간, 문화적 자산 등을 공동체의 공유자산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형태는 현재 목포시에서 진행중인 ‘건맥1897협동조합’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역의 문화적 자산과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점(펍)과 숙박공간의 공유자산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소유하는 협동조합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형태이다.



<그림 5-4> 목포시의 ‘건맥1897’ 협동조합 공유자산 구축

이처럼 충남에서 마을형 공유경제 활동의 이윤은 소수의 플랫폼 제공기업이나 운영주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유자산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형태로의 발전적 방향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자산을 활용하여 그 다음의 마을과 지역사회 수요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체와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충남의 지역사회 공유경제활동의 최종적 목표일 것이다.

이와 같은 공유경제의 사회적 목적 실현과 가치 추구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영역과의 상호보완관계를 모색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충남의 마을과 커뮤니티형 공유경제 활동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결국 공유경제에서 공유가치 형성과 대안경제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다른 공유플랫폼과는 달리 차별화 할 수 있는 점은 지역의 특장적인 수요충족과 문제해결의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임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마을기반의 공유활동을 통해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정책추진의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충남 특성의 공유경제활동의 방향과 전략을 모델화 하면 다음 <그림 5-5>와 같다.



<그림 5-5> 충남 특성의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연계협력의 정책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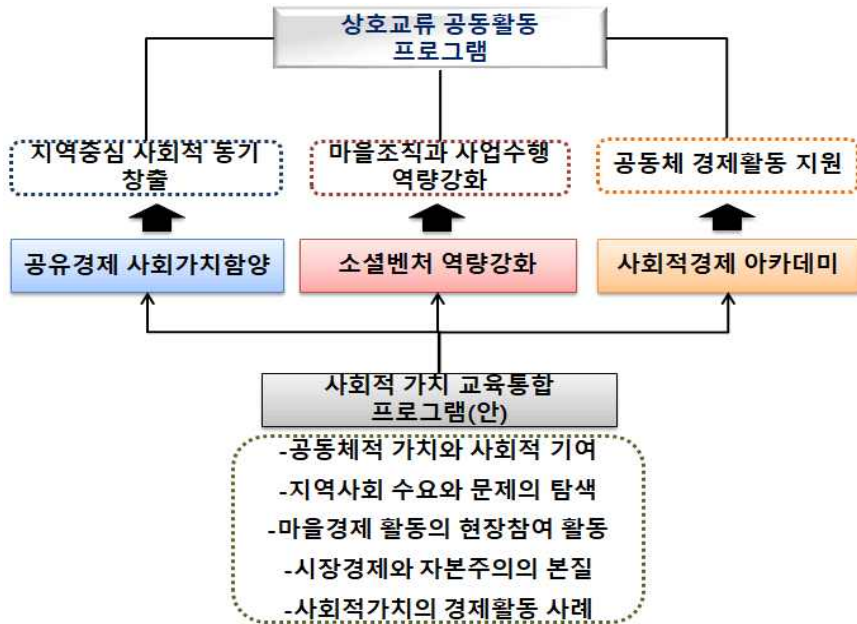
2.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 연계를 위한 정책방안

1) 공유경제의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통합교육

공유경제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것은, 벤처캐피탈 등 금융자본에 의한 소수의 기업들이 제공하는 플랫폼이 수요자와 이용자의 연결로 인한 이윤창출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비롯하여 플랫폼 기업만의 이익독점을 추구함과 플랫폼 노동자들의 양산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이는 본래의 공유경제 등장에서 ‘공유’라는 가치적 요인을 상실하고 시장경제의 형태로만 기능하면서 대안적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한 사회적 관점에 기인한 면이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공유경제의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와 함께 지역사회 가치 추구 형태의 공유경제활동을 위해서는 공유경제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동기,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한 고민과 학습의 기회가 필요하다. 따라서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공유경제 활동의 확산을 위해서 충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유경제기업들에 대한 사회적가치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활동의 지원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충청남도의 공공정책 사업을 수행하고나 지원을 받는 공유경제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여 점차 충남에서 활동하는 공유경제기업들을 대상으로 확산하도록 유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사회적 측면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교육과정의 활동은 이미 충청남도에서 사회적경제 등에서 유사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함께 병행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경제기업가 및 공유경제기업가들간의 상호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림 5-6> 공유경제를 비롯한 유사영역의 통합교육프로그램(안)

이처럼 공유경제만의 교육과정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보다 기존의 사회적경제 및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하는 소셜벤처까지 함께 연계하여 통합적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사회혁신의 이론, 실무의 학습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실제 현장 방문 및 토론회 학습활동에서 각 영역의 기업가들이 함께 융합하여 활동하는 프로그램들을 다수 개발하여 자연스러운 지역중심의 사회적 경제활동의 융합적 흐름을 구성해 나가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2) 공유경제 인식확산 위한 프로그램 연계 수행

사회적가치의 관련 교육과정과 함께 공유경제 관련된 도민들의 인식이 비교적 높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인식제고의 정책적 확산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공유경제에 대한 충남도민의 인식은 물품 및 공간 공유 등 플랫폼에 대한 경험은 일부 있으나 실제 활용도는 높지 않으며 실질적 참여

의향은 높지 못한 특성이 있다(송영현 외, 2019). 이에 따라 도민 대상의 공유경제 인식확산을 위한 지속적 홍보의 사업들이 필요하다.

우선 공유경제 관련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적인 포럼 개최를 통한 국내외 관련 인사들을 초청하고 지역기업가들의 토론 및 논의과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포럼은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충남의 특성에 맞도록 특화해야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의 수요나 문제에 기반하여 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역 순회의 형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공동체 등의 지역주민, 주체들과 함께하는 방식의 포럼 방향 구성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이와 함께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인식적 동질감을 형성하고 상호교류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축제 및 이벤트, 토크콘서트 등의 공동개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는 2010년대 초반부터 아래 그림처럼 꾸준히 연마다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회를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성과 인식을 확산하는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공유경제만의 별도의 축제나 이벤트 보다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기업가 및 활동가들의 상호교류와 함께 공동 사업발굴 및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 등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에 협력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림 5-7> 충남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자료

3) 공유경제기업의 사회적경제 기반 활용 유인

충남에서 지역사회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인 가치의 방향성에 기반해 활동하는 공유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지원체계와 기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셰어앤셰어나 공간사이의 사례처럼 사회적가치의 공유경제의 활동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사회적경제의 영역에 진입한 경우도 존재한다. 사회적경제는 정부의 법제화를 비롯하여 2011년 이후 충남에서도 다양한 지원체계와 제도가 구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매년 충남 사회적경제의 기업 및 종사자, 매출액 등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현재 충남의 공유경제의 정책추진 부서가 사회적경제과에서 함께 수행하는 만큼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에 대한 공유경제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충남에서도 사회적경제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예비사회적기업과 예비마을 기업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유경제 활동에 대한 별도의 영역을 구성하여 사회적경제의 지원정책의 범주에 공유경제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세한 공유기업을 대상으로도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청년활동가 및 청년도제 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청년들의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리고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충청남도는 청양군에 국가 지원을 유치하여 ‘충남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구축하고 있다. 본 사업은 청양군의 옛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의 건물을 활용하여 총 예산 280억(국비 140억, 도비 84억, 군비 56억)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의 사회적경제 거점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혁신타운은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경제 제조유통의 혁신 거점 조성하여 농촌지역의 지역자원과 사회적경제를 연계한 모델 창출을 주요한 방향으로 하고 있다.

〈표 5-3〉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구축 계획

명칭	용 도	층 수	시설계획
본관	판매, 업무시설, 제1,2층 근린 생활시설	지상1층	· 농산물 체험가공실, 사회적경제 따숨판매장 · 노노케어센터, 일자리 통합플랫폼
		지상2층	· 시제품제작실, 청년창작공방 · 전시장(안테나숍), 농가레스토랑, 카페놀이방
		지상3층	· 중간지원조직 사무공간
		지상4층	· 창업보육기업 창업공간
신축	전기실,기계실	지하1층	· 발전기실, MDF실, 기계실, 전기실, 지하저수조 등
	교육실/다목적실	지상1층	· 교육실, 다목적실
	회의실	지상2층	· 회의실, 협업실
	게스트하우스	지상3층	· 게스트하우스 2인실, 4인실 · 세면실, 세탁실 등
	게스트하우스	지상4층	



자료: 이흥택(2019)

이와 같은 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 및 지역의 농산품 체험가공실, 노인복지 및 일자리통합플랫폼을 비롯하여 시제품 제작실과 창작공방, 레스토랑 등의 기능들을 설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경제의 통합 지원공간에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의 역할을 부여하고 함께 입주하여 상승효과를 도모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본 혁신타운이 청양군에 입지하여 현재의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및 조직들의 입주 시에 모빌리티의 요구가 매우 크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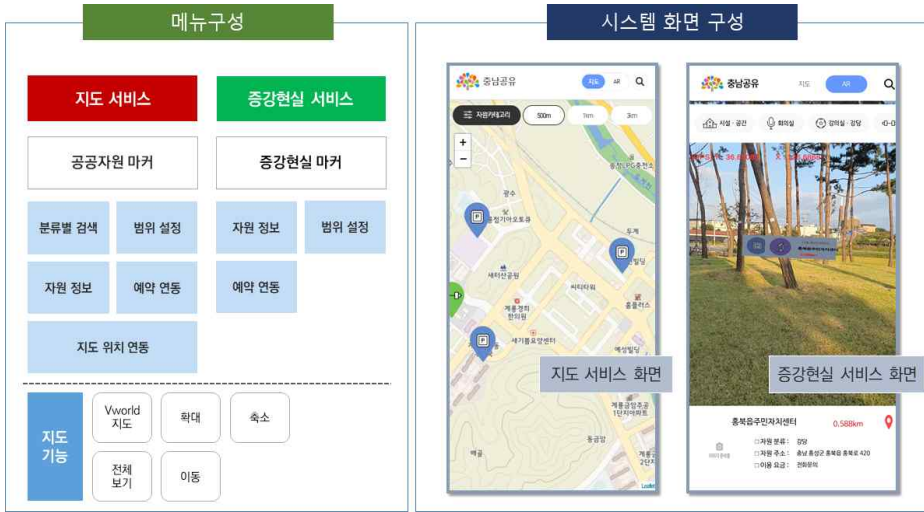
쏘카 업무협약과 같은 공유모빌리티의 공유경제 서비스를 연계하여 상호의존의 형태를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관련 통합 일자리 온라인 플랫폼, 충남 마을기업이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구매자를 연결하거나 가공설비 및 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 공간적으로도 공유부엌이나 공유레스토랑 등의 플랫폼의 운영을 혁신타운에서 수행할 수 있다.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서도 지역기반의 활동 수행을 위해 다양한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와같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충남 공유기업을 발굴하고 혁신타운에 함께 입주하여 공유경제의 활동을 확산할 수 있는 거점으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사회적경제의 공유경제 진입의 유인

충남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 확산되고 있으며 2020년 6월 기준으로 전체 사회적경제조직수는 1,000개를 넘어섰고 농업어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교육 및 보건환경, 문화예술과 도시재생, 돌봄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지역 사회와 구성원들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하는 측면에서 공유경제로의 진입을 유인하고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활동 수행에 대한 지원에 대한 고려도 함께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공유경제 플랫폼의 진입은 크게 충남 광역자치단체 운영참여의 거시적 측면과 커뮤니티 기반의 플랫폼 운영의 미시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충남에서 다양하게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 운영의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가 필요하다. 현재 충남에서 2020년 구축하여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는 ‘충남공유’의 플랫폼은 충남을 대표한 공유경제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현재 시범 단계이지만 충청남도 전역의 지도서비스를 활용하여 공유자산의 분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음 <그림 5-8>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그림 5-8> 충남공유 플랫폼 화면

이와 같은 충청남도 자체적인 공유자원을 제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에 있어서 단순한 자산의 공유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커뮤니티 차원에서 자원에 대한 신뢰성, 주민중심의 다른 자원 연계의 형태, 이를 통한 실제 주민 및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등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사례들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의 확산은 단순한 자원공유에서 나아가 이를 활용하여 실제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가치창출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지역의 신뢰와 관계의 자산을 구축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적극적인 운영의 참여가 필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충남공유의 운영을 위한 카테고리별 연관성 있는 지역사회의 공유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들과 관(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를 조직화하고 ‘충남공유’ 플랫폼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미시적 차원에서는 충남공유와 같은 광역차원의 통합정보제공의 플랫폼과는 별도로 충남의 시·군·구 차원의 커뮤니티 기반 공유자산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이 실제로 지역 사회적 가치추구의 공유경제 목적과 더욱 부합할 수 있다. 앞서 실시한 전문가 인터뷰에서 제시된 바처럼 광역 및 전국적 차원에서 공유경제의 활동은 지역의 미시적 수요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이미 자본력을 가진 에어비앤비나 쏘카와 같은 기존의 플랫폼이 운영중에 있다.

따라서 충남에서는 시군 단위로 마을과 지역사회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유희자산들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적합한 연결을 추구하려는 공유경제 육성의 방향이 필요하다. 도시 및 농어촌과 시군 마다의 지역적 특성이 다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유활동은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에 부합하는 자산을 찾아내고 이를 연계시켜줄 수 있는 활동은 지역의 신뢰를 통해 리더십을 확보가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충남의 공유경제 방향으로 제시하였던 지역커뮤니티 기반의 공유경제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시군마다의 특색을 가진 공유경제 플랫폼이 필요하고 각 소속의 읍면동 및 마을단위의 공유활동의 수요파악과 자산발굴 및 연계의 공유경제 운영의 주체를 지역의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결국 지역사회를 가장 잘 이해하고 구성원과 신뢰관계가 있으며 지역의 가치와 수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조직이 이러한 지역자원의 공유플랫폼의 운영에 가장 적합하다는 점에서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적극 활용하여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각 시군마다의 공유경제 수행을 위한 플랫폼(가칭 ‘충남 공유마을플랫폼’)의 구축은 충청남도의 광역차원에서 공통된 디자인 및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공유콘텐츠와 세부적인 운영방식은 시군의 자율성에 맡기는 방식으로 수행하면 통일성 있는 충남형의 공유경제 모델로 부각될 수 있으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의 중복성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공유마을 플랫폼의 운영을 위해 시군의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의 네트워크 등의 연합 조직 등에게 위탁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 또한 이러한 공유경제 플랫폼의 운영에 직접참여하여 관련된 기술, 지식 및 운영경험을 획득하여 추구 지역사회의 가치창출을 위한 활동에 공유경제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공유경제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사업 발굴·지원

현재 충청남도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공유가치 실현을 위한 공유활동의 확산을 위해 공유경제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다양한 공동 협력사업에 대한 발굴과 육성의 정책적 지원 방향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가치를 배제하고 플랫폼만을 구축 운영하며 이윤추구의 형태를 보이는 접근경제나 플랫폼 경제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지역 및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유경제기업간의 협력을 통한 사업의 운영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형태로는 앞서 사례에서 제시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쏘카간의 업무협약을 통한 차량공유의 협력행위를 거론할 수 있다. 지역의 사회적 가치활동을 추구하고 지원하는 충남의 사회적경제기업들과 중간지원조직 대상으로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쏘카의 공유 차량의 협력 사례는 상호보완의 대표적인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협력에서 나아가 지역의 수요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과 공유경제의 플랫폼 활동에 대한 면밀한 연계협력의 활동의 출현이 필요하다.

일본에서 이와 같은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탄고쵸시와 아부시 등 공유교통 사업이 대표적이다. 탄고쵸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어촌마을로 이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에 공유교통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서비스는 일본의 공유교통 모빌리티 기업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분발해 탄고쵸’라는 지역NPO 법인이 사업을 주관하고 운영하며 현지 주민이 운전자가 되어 교통 접근성이 낮은 어촌마을에 공유교통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충남에 적용시켜 쏘카 등의 차량공유기업과 충남의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이 협력하여 교통접근성이 낮은 충남의 농어촌 지역에 고령자들을 위한 차량공유서비스를 진행하는 등의 협력사업의 발굴과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마을의 빈집을 활용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마을호텔의 사업도 거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유휴공간을 마을기업 등의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리모델링하여 호텔, 식당, 공방 등의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공간들을 플랫폼으로 연계하여 지역관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례들도 효과적인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의 협력형태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 연천군이나 공주시에서 이와 같은 마을호텔 형태가 운영중에 있는데, 이러한 지역의 공간들을 연계시켜줄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공유경제와 연계협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협력은 에어비앤비 등의 플랫폼과도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



아부쿠루(야부시) 차량공유



경기도 연천군 마을호텔 개념도

자료: 오야오스기 홈페이지(www.ooyaosugi.jp)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그림 5-9> 오야오스기 마을호텔 및 마을식당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수요에 대한 발굴은 공유경제활동의 사회적 가치 활동을 추구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마을기업이나 지역기반 사회적기업의 경우 이와 같은 활동들을 현재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활동을 연계시켜 주민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에어비앤비나 쏘카와 같은 기존의 공유경제 기업이나 새롭게 발굴된 지역의 공유경제기업과 연계 협력하여 플랫폼의 지역사회 충족을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상호보완에 기반 한 연계협력의 형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에서도 위와 같은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연계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예산 지원의 정책사업을 포함하여 전문가를 통한 두 영역 간 상호연계 사업발굴의 컨설팅이나 교육과정 등의 정책 발굴과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병준, 2012, 공유경제 시스템의 사회적 기업 적용 연구, 한국정책학회 2012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 김경희, 2013,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혁신의 가능성과 한계. 공공사회연구, 3(2): 126-150.
- 김두년, 201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한국협동조합연구」, 30(2).
- 김점산·지우석·강상준, 2014,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미래와 성공조건, 경기연구원
- 김중수·전은호·홍성효, (2012). 공동체자산기반 접근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방향 모색. 「도시행정학보」. 25(2): 71-91.
- 김해중·박종우·조동혁, 2016, 공유경제 서비스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
- 라준영, 2014, 공유경제와 사회적 기업: 우주(WOOZOO) 사례, 서비스경영학회지, 15(4).
- 라준영, 2016, 사회적기업 생태계와 성장자본, 김성진 엮음, 「리더를 위한 사회적경제 강의」, 아르케.
- 박철민, 2019,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경남연구원 연구보고서.
- 산업통상자원부, 2015, 공유경제 현황 및 시사점 연구.
- 송영현, 2019,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개발. 충남연구원 연구보고서.
- 송영현·최명식, 2020, 지역 차원의 공유경제 정책 방향: 충청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104.
- 성영조, 2016,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 양소영·문정민, 2018, 공유경제 기반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아파트 유희공간 활용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3(6).
- 이다혜, 2017, 공유경제의 노동법적 쟁점, 「노동법 연구」, 42.
- 이상호, 2019, 공유경제와 복지: 벤클러 공유경제 모델의 함의를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67(3).
- 이승미·박서윤, 2018, 사회적기업의 지원방법에 따른 성과차이 분석과 개선방안, 「문화산업과 법」, 12(2): 117-140.
- 이영범, 2016, 공유와 공존, 그리고 공동체를 향하여, 인터넷 사이트 참조(www.imbc.co.kr/open_contents/bbs.do_act)
- 이인재·김성기, 2014,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전망」, 아르케.
- 이훈택 외, 2019, 청양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청양군.
- 장원봉, 2006,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나눔의 집.
- 정건화, 2012, 민주주의, 지역 그리고 사회적경제. 「동향과 전망」, 68.
- 정건화, 2019,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공동체경제, 제10회 아시아미래포럼 발표자료.
- 정관영, 2012, 「이제는 사회적 경제다」, 공동체.
- 정부부처 합동, 2017,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주성수, 2009, 「사회적경제: 이론, 제도, 정책」, 한양대학교 출판부.

주성수, 2017,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임팩트」, 한양대학교 출판부.

충남사회적경제연구센터, 2017, 충남 사회적경제 제2차 5개년 계획 수립, 충청남도.

최유성, 2017,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규제개혁 연구: 공유경제와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함영모, 2019, 전라북도 공유자산 실태조사 및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 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함창모, 2018. 충청북도 공유경제 정책 도입방안, 충북연구원 연구보고서.

클라우드산업연구소, 2013,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기업들을 통해 살펴본 공유경제, 도서출판 좋은땅.

Benkler, Y., 2006, The Wealth of Networks: How social production transforms market and freedom, 최은창 역, 2015, 「네트워크의 부」, 커뮤니케이션북스.

Benkler, Y., 2004, Sharing Nicely: On Shareable Goods and the Emergence of Sharing as a Modality of Economic Production, Yale New Journal, 273.

Botsman, R. and Rogers, R. 2010. What's Mine is Yours: The rise of collaborative consumption. New York: Harper Collins.

Codagnone, C., Martens, B. 2016, Scoping the Sharing Economy: Origins, Definitions, Impact and Regulatory Issues, JRC Technical Reports, Institute for Prospective Technological Studies: Digital Economy Working Paper, 2016/01, EC.

Defourney, J., 1999 The Social Economy : Worldwide Making of a Third Sector, Fontenu, eds. The Social Economy in North and South. Belgium: Hoger Institute voor de Arbeid.

European Commission, 2016, More Than Profit: a Collaborative Economy with a Social Purpose, July 2016, EC.

Goudin, P., 2016, The Cost of Non-Europe in the Sharing Economy,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Lessig, L. 2008. Remix: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 New York: Penguin.

Lukkarinen M. 2005. Community Development, Local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Social Economy.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40(4).

McLaren, D., Agyeman, J. 2015, Sharing Cities a Case for Truly Smart and Sustainable Cities, Cambridge, The MIT Press.

Olson, M., Kemp, S. 2015, Sharing Economy: An In-Depth Look At Its Evolution & Trajectory Across Industries, Piper Jaffray Investment Research.

Polany, K. 1961, The Great 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홍기빈 역, 2013, 「거대한 전환: 우리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도서출판 길.

PwC, 2015, The Sharing Economy, (Retrieved from [https:// www.pwc.com /us /en /industry](https://www.pwc.com/us/en/industry))

Quarter, J. et al. 2003. What Counts: Social Accounting for Nonprofits and Cooperatives. New York: Prentice-Hall.

Roma, P., Panniello, U., and Nigro, G., 2019, Sharing economy and incumbents' pricing strategy,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Economics, 214.

Schubab C., 2017, 송경진 역, 2017,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 현재.

Sundarajan, A. 2016, The Sharing Economy: The End of Employment and the Rise of Crowd-Based Capitalism, Cambridge: MA: The MIT Press.

WEF(World Economic Forum), 2014, Towards the Circular Economy: How Will It Disrupt Your Business?, August 2014, PwC.

World Economic Forum(WEF), 2017, White Paper- Collaboration in Cities: From Sharing to 'Sharing Economy'.

공간사이 홈페이지(www.urisai.net/)

공유성남 홈페이지 (<https://share.seongnam.go.kr:10004/>)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se.seongnam.go.kr:10002/)

오야오스기시 홈페이지(www.ooyaosugi.jp)

위키피디아(wiki.p2pfoundation.net, 공유경제의 세가지 핵심요소)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www.cnse.kr)

충남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cile.or.kr/)

카풀로(<http://www.carpoollo.com/>)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블로그 (www.blog.naver.com/se365company)

[부록]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19-09-20 조례 제 457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보전과 아울러 지역사회 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共有經濟)”란 소유권의 이전 없이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높이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④ 도지사는 공유경제 기업의 활동이 지역의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3. 제7조에 따른 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5.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6.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7.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도지사는 제5조 제2항 제1호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보급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5. 공유경제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도내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육성
7. 그 밖에 도지사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7.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 법인 또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도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범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미 지정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도지사는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하여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홍보 또는 전문지식인의 상담 및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등 지원)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

치 및 운용 조례」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

제11조(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그 취소
3.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4. 제3조제4항에 따른 시장 충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공유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학계, 법조계, 경영계, 현장전문가 등)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공유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실국장(당연직)
 4.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경제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가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4572호, 2019.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전지훈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

연 구 진 · 송영현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연 구 진 · 홍은일 충남연구원 연구원

전략연구 2020-21 · 충남 공유경제의 활성화 방안 연구:
사회적 경제와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글쓴이 · 전지훈, 송영현, 홍은일

발행자 · 윤 황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20년 12월 31일 / 발행 · 2020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183(사회통합연구실)

전화 ·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99(대표)

ISBN · 978-89-6124-545-6-03350

<http://www.cni.re.kr>

© 2020.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